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307-01

정책보고서 2018-22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오윤섭·강지원·정영철·이기호·서제희·고경표

【책임연구자】

오윤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보장 성과 인식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경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2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	51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71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	91
제3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편	102
제3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52
제1절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72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3
제3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한계 및 문제 분석	106
제4장 재정사업 평가의 운영 실태 분석	37
제1절 양적 조사 결과	57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119
제5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131
제1절 단기 개선 방안	141
제2절 장기 개선 방안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155

표 목차

〈표 2-1〉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변경 사항	3	2
〈표 3-1〉	전체 재정사업 평가 대상 분류	7	2
〈표 3-2〉	평가 제외 사업 현황	8	2
〈표 3-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대상	8	2
〈표 3-4〉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지표	1	3
〈표 3-5〉	평가 자료 및 근거 자료	2	3
〈표 3-6〉	보건 분야 예산 집행(1-1) 가점 현황	5	3
〈표 3-7〉	보건 분야 목표 달성(2-1) 가점 현황	8	3
〈표 3-8〉	보건 분야 가점 현황	0	4
〈표 3-9〉	예산 집행(1-1)의 가점	5	4
〈표 3-10〉	복지 분야 가점 현황	0	5
〈표 3-11〉	분야별 평가 결과의 비교	3	5
〈표 3-12〉	사업 관리 지표의 오기 및 수정 예시	1	6
〈표 3-13〉	성과 우수 지표의 불인정/인정 예시	3	6
〈표 3-14〉	이의 및 소명신청 결과	5	6
〈표 4-1〉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구성 현황	6	7
〈표 4-2〉	응답자의 재직 기간 및 근무 기간	8	7
〈표 4-3〉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 결과	2	8
〈표 4-4〉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8
〈표 4-5〉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5	8
〈표 4-6〉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6	8
〈표 4-7〉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8	8
〈표 4-8〉	‘자체평가 준비 업무’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	8
〈표 4-9〉	‘평가 자료 작성 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응답 결과	9	8
〈표 4-10〉	‘평가 지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0	9
〈표 4-11〉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	9
〈표 4-12〉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9
〈표 4-13〉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가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4	9
〈표 4-14〉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

〈표 4-15〉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6	9
〈표 4-16〉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8	9
〈표 4-17〉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	9
〈표 4-18〉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	0
〈표 4-19〉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	0
〈표 4-20〉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4	0
〈표 4-21〉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0	1
〈표 4-22〉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7	0
〈표 4-23〉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	0
〈표 4-24〉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0	1
〈표 4-25〉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	
〈표 4-26〉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1
〈표 4-27〉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응답 결과	4	1
〈표 4-28〉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2순위)’ 응답 결과	4	1
〈표 4-29〉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다중 응답)’ 응답 결과	5	1
〈표 4-30〉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다중 응답)’ 응답 결과	1	
〈표 4-31〉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재정사업 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7	1
〈표 4-32〉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1	
〈표 4-33〉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8	1
〈표 4-34〉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0	2
〈표 4-35〉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	2
〈표 4-36〉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	2
〈표 4-37〉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2
〈표 4-38〉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5	2
〈표 4-39〉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6	2
〈표 4-40〉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8	2
〈표 4-41〉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9	2
〈표 4-42〉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항목	1	3
〈표 5-1〉	정보화사업 평가 대상	2	4
〈표 5-2〉	전년도 평가 지표 비교	8	4
〈표 5-3〉	우수 사례에 대한 예시	9	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4	1
[그림 3-1]	평가 프로세스 및 주체별 업무 분담	9	2
[그림 3-2]	보건 분야 예산 및 집행률	3	3
[그림 3-3]	보건 분야 분기별 예산 집행률	4	3
[그림 3-4]	보건 분야 예산 관리 지표(1-1) 평가 결과	5	3
[그림 3-5]	보건 분야 사업 관리(1-2) 평가 결과	6	3
[그림 3-6]	보건 분야 목표 달성(2-1) 평가 결과	7	3
[그림 3-7]	보건 분야 성과 우수(2-2) 평가 결과	9	3
[그림 3-8]	보건 분야 평가 점수 분포(평가 지표 기준)	1	4
[그림 3-9]	보건 분야 평가 결과(총점 기준)	2	4
[그림 3-10]	보건 분야 평가 점수 분포(총점 기준)	2	4
[그림 3-11]	복지 분야 예산 및 집행률	3	4
[그림 3-12]	2017년 분기별 예산 집행률	4	4
[그림 3-13]	복지 분야 예산 관리 지표(1-1) 평가 결과	6	4
[그림 3-14]	복지 분야 사업 관리(1-2) 평가 결과	7	4
[그림 3-15]	복지 분야 목표 달성(2-1) 평가 결과	8	4
[그림 3-16]	복지 분야 성과 우수(2-2) 평가 결과	9	4
[그림 3-17]	복지 분야 평가 점수 분포(평가 지표 기준)	1	5
[그림 3-18]	복지 분야 평가 결과(총점 기준)	2	5
[그림 3-19]	복지 분야 평가 점수 분포(총점 기준)	2	5
[그림 3-20]	사업 예산과 평가 점수의 관계	4	5
[그림 3-21]	재원과 평가 점수의 관계	5	5
[그림 3-22]	재정 지원 방식과 평가 점수의 관계	6	5
[그림 4-1]	응답자의 연령	7	7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	7	7
[그림 4-3]	응답자의 직급	7	7
[그림 4-4]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정도	8	7
[그림 4-5]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도	9	7
[그림 4-6]	응답자의 소속 부서	9	7

[그림 4-7]	응답자의 20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등급	0..... 8
[그림 4-8]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 결과	2..... 8
[그림 4-9]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8
[그림 4-10]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5..... 8
[그림 4-11]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6..... 8
[그림 4-12]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8..... 8
[그림 4-13]	자체평가 준비 업무	9..... 8
[그림 4-14]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 9
[그림 4-15]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9
[그림 4-16]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6..... 9
[그림 4-17]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8..... 9
[그림 4-18]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 9
[그림 4-19]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0... 1
[그림 4-20]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0... 1
[그림 4-21]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4...0... 1
[그림 4-22]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0..... 1
[그림 4-23]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개선 방안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0..... 1
[그림 4-24]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0..... 1
[그림 4-25]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0...1... 1
[그림 4-26]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 1
[그림 4-27]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 1
[그림 4-28]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0...2... 1
[그림 4-29]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1...2... 1
[그림 4-30]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3...2... 1
[그림 4-31]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4...2... 1
[그림 4-32]	‘평가수행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6...2... 1
[그림 4-33]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7...2... 1
[그림 4-34]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9...2... 1
[그림 4-35]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0...3...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2018년(2017 회계연도)부터 개편되면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 평가 기반 구축이 필요.
-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평가체계 및 내용 마련.
 - 기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는 이를 적용하여 평가. →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 변경: 부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 메타평가 폐지.
- 기계적·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중심의 환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
 - 기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계적·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
 - 변경: 필요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되, 성과관리 개선 대책(부진 사유,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둬.
- 평가 지침 및 평가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자율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평가 지침의 정확성, 평가체계의 효율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2. 주요 연구 결과

가. 재정사업 평가 결과

-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표의 구성은 적절하며 분야별 왜곡 등은 발

견되지 않았음.

- 재정사업 평가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 집행 지표(1-1)와 성과 우수 지표(2-2)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관리 지표(1-2)와 목표 달성 지표(2-1)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지표별로는 사업 관리 지표의 평균이 가장 높고, 성과 우수 지표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평가 지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 점수의 총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 분야가 보건 분야에 비해 점수가 다소 높음.
-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다양한 변수와 연관하여 분석한 결과,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 재원 조달 방식이나 재정 지원 방식 등과 약한 비례 관계를 보임.
- 평가 지표에서 예산의 규모는 고려되지 않고, 평가위원들은 부처 전체의 사업별 예산을 확인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원 조달 방식과 재정 지원 방식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나.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

1) 양적 조사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들은 자율평가 업무 환경,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평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들은 일부 평가 지표의 경우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 평가 지침 및 자료 작성을 위한 지침이나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었고 이를 충실히 따랐으며,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예: 사업의 우수성 지표).
- 평가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평가 지표 단순화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사업 자율평가 내실화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 역시 평가 지침의 구체화(27.9%),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17.4%),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소요 시간 확보(15.1%) 순으로 나타남.

2) 질적 조사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들은 평가 준비와 관련하여, 타 평가 제도와 중복 및 평가 기간의 중복, 평가 자료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함.
 - 연초에 평가 업무가 집중되어 업무 부담이 큰데, 특히 보조사업 연장 평가, 각종 성과평가(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등)와 정부업무평가 등이 동일한 시기에 진행됨. 특히 몇몇 사업은 성과평가를 최대 3개까지 동시에 받게 되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최대 6개의 평가 자료를 작성해야 함.
 - 평가 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강제는 아니어야 하며, 평가 지침 마련 시 모범 사례를 예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들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 지침이 사전에 제공되고 공지된 일정에 맞추어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
 - 평가 지표가 많으며,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예산 및 성과 지표에 비해 사업의 추진이나 성과 우수성 등의 지표는 주관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의무지출사업은 평가 결과로 인해 예산 삭감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진행에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년도에 비해 이의신청 및 소명 자료 제출 절차가 있고, 이에 대한 대면 평가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대면 평가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음.

3.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가. 단기 개선 방안

□ 평가 대상 선정 방안

- 법정 의무지출사업은 대상자 수가 명확하고 집행 시기도 정기적이며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임.
- 단위사업 내에 정보화사업이 포함된 경우 1) 세부 사업별 예산 비율 기준으로 선정(70% 기준)하거나 2) 부서 선택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별개로 일반재정과 정보화를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현재 방안과, 일반재정과 정보화를 통합하되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지표 개선 방안

- 평가 지표 확정
 - 사업의 평가 기준 및 지침 마련(t-1), 사업 시행(t), 차년도(t+1)에 성과 평가.
- 평가 지표의 조정
 - 1안: 평가 지표 단순화(예산, 성과 달성도), 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2안: 2단계 평가(1단계: 예산, 성과 달성도 → 2단계: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 단, 1단계 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인 사업에 한하여 2단계 평가.
- 3안: 현행 평가 유지, 예산 집행 배점 조정.

○ 평가 지표의 측정 수준 제고

- 사업 관리 지표(1-2)는 모니터링 프레임과 모니터링 내용, 결과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함.
- 목표 달성 지표(2-1)는 성과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세부 사업을 포괄하는 복수의 성과 지표 마련이 필요함.

□ 평가체계 개선 방안

- 평가 대상 사업 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정보화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배정함.
- 평가위원이 배정된 사업을 일관되게 평가함(1차 평가, 2차 평가 등).

□ 평가 결과 활용 개선 방안

-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부처 차원에서 전년도 정량 지표 평가 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분기별 혹은 월별로 예산과 성과 지표 달성률 등을 점검함.
 -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평가 지침 및 설명회

- 평가 지침에는 평가 자료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시함.
-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해 평가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나. 장기 개선 방안

- 장기적인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전략

○ 평가 시점 조정이 필요함.

- 평가 대상 연도 말에 평가 지침을 확정하여 이듬해에 평가 자료를 제출받고 동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식에서 사업 진행 당해 연도에 미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사업 집행 자료(분기별 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자료 검토 결과를 다시 소관 부서에 보냄으로써 이후 사업 관리에 반영함.
- 초기에는 외부 평가위원 없이 부처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회계연도에 분기별로 평가 지침에 부합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 점검회의나 자문회의를 하는 방식.
- 분기별 자료 수집과 점검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 부처 내 재정사업 수행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업 소관 부서(과)-국·실 단위-부처 단위로 구축 가능.

- 개별 재정사업별로 소관 부서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들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 및 교육함.
- 모니터링은 자율평가 지침상의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사업 부서 주관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분기별로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평가 전문성, 신뢰성, 책임감을 갖춘 평가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야 함.

- 평가위원이 사업의 실질 검토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위원은 통제자적 입장의 외부 평가자가 아니라 정책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재정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준별하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측정 방법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률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양적, 질적 자료 제시 방식으로 예산 절감 정도, 예산 절감 방식, 향후 예상 등에 대해 기술함.
-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달성과 관련하여 기술함(story telling).

*주요 용어: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핵심사업 평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개선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통합되어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는 성과목표 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성과 보고서와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보고서가 결합되어 하나의 통합 성과 보고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었으나,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자료가 성과 보고서 안에 기재되어 평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이를 다시 분리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환원하였다. 다만, 이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달리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지침만 편성하고 각 부처가 실질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환을 뜻한다. 첫째, 성과관리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각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각 부처는 성과관리 전(全) 단계(계획, 사업 운영, 성과 보고 및 사업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는 사업 예산의 편성과 우선순위에 도 영향을 미치는 환류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예산 당국이 과거 예산 집행률과 성과 지표에 근거한 성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별도의 전략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권한은 부처에 위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평가 지침은 상당 부분 전년도 평가 지침(통합 재정사업 자율평가)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핵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예산 당국이 사업의 양(예산, 성과 지표)과 질(사업 성과관리)을 동시에 보는 이원화된 재정 관리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부처 자율에 맡겨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중요한 전환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자율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 및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의 개선에 따라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사업 평가 기반 구축은 평가 지침과 평가 지표, 평가 프로세스, 평가 결과의 활용을 포함한다. 즉 본 연구는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지표 마련과 이를 활용한 평가 지침 작성, 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운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선행연구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정부 업무 및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당국의 입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성과평가의 적합한 방안 모색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 지표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평가체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양현모 외(2015), 원종학 외(2010), 강영철 외(2009) 등이 있다(오윤섭 외, 2017, pp. 16-17).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오영민 외(2017)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현재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가 실시되어 평가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이에 따라 일선 부처 및 사업 담당자

들이 평가제도들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계획서의 관리 과제와 단위사업, 성과 지표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고, 정책 평가 역시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와 중복적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평가제도가 정부 정책과 사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각각의 평가제도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일 정책이나 사업을 중복해서 평가한다면 평가의 중복성이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맺고 있다.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및 재정사업 평가 관련 법·지침 분석이다.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방향성과 한계, 활용 등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도입 배경과 법 제도 개선, 재정 집행 관리 기준 검토,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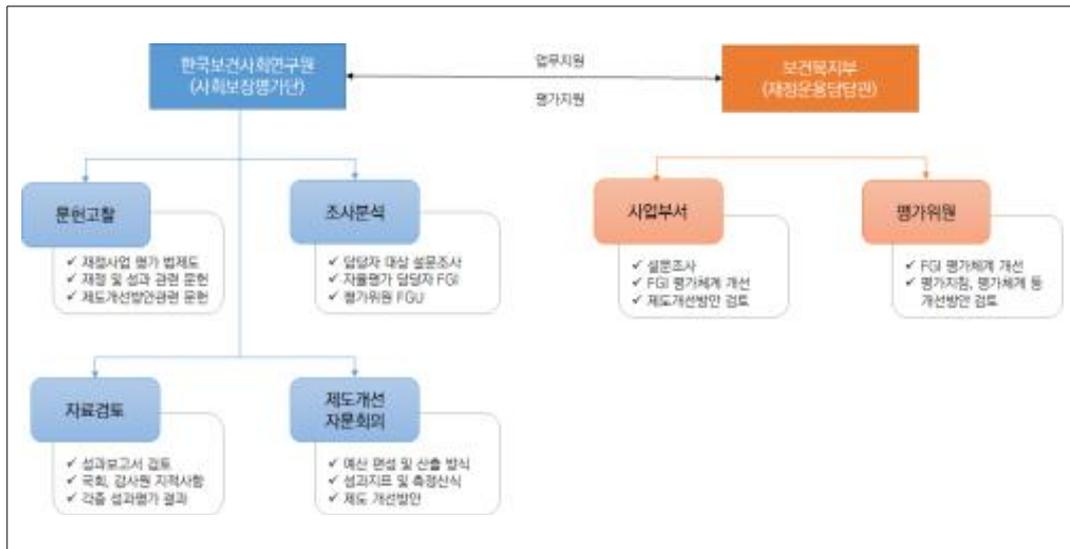
둘째,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상으로 평가 지표 마련, 평가 지침 작성, 평가 프로세스의 구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다. 즉 2018년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재정사업 평가 결과 분석 등을 포함한다.

셋째,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를 통한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단계별 개선 방안과 관리체계 기반 조성, 평가 지표 및 평가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 고찰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선행 연구와 법, 지침 등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료 분석은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예산, 성과 지표 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양적 조사) 등에 대해 이뤄졌다. 셋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위원, 사업 담당자, 사업 관련 연구자 등에 대한 질적 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을 찾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반 구축 및 성과관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제 2 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

제3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편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 재정사업 평가제도 <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구조와 요소들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구조¹⁾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공공 부문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의 관리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공공 부문 재정 지출은 주로 투입 위주로 관리되었고, 사업의 성과 및 관리 책임 확보 차원의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또한 예산 편성 및 환류가 투입 위주로 운영되면서 성과가 없거나 부진한 사업조차도 정부 사업으로 수행되면서 사업 수행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과 예산 낭비의 위험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투입 위주의 예산 편성에서는 한번 편성·배정된 예산은 적법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관 및 부서의 성과 의식이 희박했고, 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도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이와 같은 투입 위주의 재정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참여정부가 2003년 4대 재정 혁신 과제의 하나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채택하면서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1) 오윤섭 등, 2017, p. 23 재인용.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구성 요소²⁾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시도한 제도로서 성과목표 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었으나, 최근 핵심사업 평가까지 확대되었다. 흔히 이 제도는 건강 관리에 비유하여 설명된다. 즉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일종의 정기검진, 심층평가제도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이상 징후가 파악된 사업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 및 그 예방책을 알려주는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공동성 외, 2013, pp. 158-159). 문제는 새롭게 도입된 핵심사업 평가이다. 핵심사업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심층평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질적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재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임무, 비전, 성과목표,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재정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공동성 외, 2013, p. 163)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1년 전에 각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집행 결과를 성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성과 계획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기관의 전략목표 및 당해 연도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설정, 관리과제의 성과 지표 및 성과 지표의 목표치 등을 설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미한다. 성과 보고서는 성과 계획서에서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계획 대비 실적 형식으로 점검하는 결과 보고서를 의미한다. 즉 사전에 성과를 계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 오윤섭 등, 2017, p. 23 재인용.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

1.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구조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재정사업 평가는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율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이 자율평가 대상 사업이나, 평가 중복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재난안전, 지역발전사업 및 복권기금사업은 소관 평가기관(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복권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율평가의 평가 대상은 단위사업이며, 재난안전, R&D, 지역발전 및 복권기금 사업 등은 세부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부 사업이 타 평가 대상인 경우 이를 제외한 세부 사업만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포함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8).

다음으로 심층평가제도는 재정 운용의 성과 제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주요 재정사업(단위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제도이다. 평가 대상은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향후 지속적 재정 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심층평가는 사업의 성과를 과학적·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 및 성과 부진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심층평가가 도입된 당시에는 개별 사업 단위 또는 사업군이 평가의 기본 단위였으나, 2010년부터 정책 목적·대상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다부처 포함)을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89번의 심층평가가 이뤄졌고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평가는 26회(29.2%) 이뤄졌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제3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편

1. 정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³⁾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의 일원화와 자체평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현재의 평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소관 부서의 성과관리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개선에 유용한 성과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평가 및 심층평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평가는 관리과제 또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도 동시에 권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거버넌스 개편은 재정사업 평가 간 중복을 줄이고 평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그는 첫째,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거버넌스 개편, 둘째, 재정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 정보의 심층 성과 활용성 제고,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평가제도 도입, 넷째, 증거 기반 평가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논의를 통해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은 기존의 재정사업 통합평가의 자체평가는 부처에 위임하고 소수 핵심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지향적 전략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략적 평가는 우선 국정과제 사업 등 주요 사업이나 기존 재정사업평가제도에서 탐지된 소수의 문제 사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핵심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기반을 둔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탐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오영민 외, 2017, p. 139).

이러한 전략적 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정성적 평가(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타당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미국(전략적 리뷰), 영국(Implementation

3) 오영민 외(2017) 참조.

4) 재정사업 평가는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외에 기금평가(자금융평가, 준차평가), 보조사업평가, 부담금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운영되고 있음(오영민 외, 2017, p. 139).

Unit)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수 핵심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성과 관리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심층평가는 엄밀하고 심층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정부 성과평가제도의 한계인 평가 타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층평가는 사업군 단위로 사업을 평가 하면서 현장 조사와 인터뷰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지만 정성적 평가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핵심사업 평가 도입으로 심층평가는 더욱 엄밀한 형태의 성과평가(Program Evaluation)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그램 중심의 개별 사업 평가에서 구조적 또는 연속적으로 미흡 등급의 평가 결과를 낸 단일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후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로 활용하는 방안(예: RCT),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신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그 효과를 실험과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박윤수 외, 2018).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평가제도의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2018년 재정사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 외에 핵심사업 평가와 정책실험(RCT)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도입된다. 핵심사업 평가는 2018년에 이미 시행 중이고 정책실험 평가는 2019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평가제도의 확대가 재정사업 평가라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핵심사업 평가와 심층평가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의 목적과 방법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법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핵심사업 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중간 형태로 구성하고, 전략적 추진의 국정과제 등의 추진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핵심사업 평가가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되는 평가 지표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사업 평가의 대상이 확대된다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평가체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2.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⁵⁾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포함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17년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10. 27.)를 거쳐 개편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개편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1) 사업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2) 미흡 사업에 대한 기계적·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폐지한다. 3)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세부적인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평가 지표를 사업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R&D, 재난, 지역발전 등의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지침에 따라 평가하게 되었다. 이는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R&D,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수행 체계를 일원화했던 방식에서 변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이지만, 인건비, 기본 경비 및 소액 사업(10억 원 미만)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는 부처 자율적인 환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미흡 사업에 대한 단순 예산 구조조정은 폐지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중심의 평가 결과 환류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부처의 자율적 환류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각 부처 전체 단위사업, 평가 대상 리스트, 평가 기준(평가 지표), 대상 사업별 평가 결과, 환류 계획 등의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취합하고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한다.

5) 기획재정부(2018.1.2.),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7 회계연도 평가)을 바탕으로 정리함.

〈표 2-1〉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변경 사항

	2017년	2018년
평가 대상	◆ 전체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	◆ 전체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로 간소화 ◆ 분야별 평가 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 지표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산 규모도 상대평가 준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 ◆ 평가 지표는 사업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R&D, 재난, 지역발전 등의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지침에 따라 평가
메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수행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실시 	◆ 폐지
평가 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의 1% 수준 ◆ 세출 구조조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단위 자율적 환류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 사업에 대한 기계적 지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 폐지 -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중심으로 평가 결과 환류 계획 마련

주: 기획재정부(2018.1.2.),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7 회계연도 평가), p. 2 재인용.

제 3 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제1절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제3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한계 및 문제 분석

3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제1절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1.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운영을 계획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은 171개(333개 세부 사업)이다. 이 중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및 복권기금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은 평가 주체 및 전문성, 평가 중복으로 인한 부담 등의 문제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과관리를 하는 단위사업 143개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이 된다.

<표 3-1> 전체 재정사업 평가 대상 분류

(단위: 개, 억 원)

구분	계	재정사업 평가 분류					비고 (자율평가 제외)
		재정사업 자율평가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	
단위사업	171	143	* 세부 사업 단위로 평가				28
세부 사업	335*	263	30	33	4	5	72
예산액	561,159	546,544	4,753	6,492	2,781	614	14,615

주: 성과관리 제외 대상 중 재난안전 2개 사업(326억 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함.

다음으로 대상사업 중 종료 사업(1개), 소액 사업(13개), 책임운영기관 사업(17개), 기타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12개)을 제외하고 100개 단위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타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법정 보상금이나 타 분야 평가 대상 단위사업 분리 시 세부 사업이 1, 2개로 축소되고 예산액이 급감하여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이다.

〈표 3-2〉 평가 제외 사업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계	2018년 평가 대상	평가 제외				
			소계	종료 사업	소액 사업 (10억 원 미만)	책임운영 기관	기타* (국민연금 지급 등)
단위사업	143	100	43	1	13	17	12
세부사업	263	197	66	3	13	32	18
예산액	546,544	349,019	197,525	25	74	629	196,797

주: 기타 제외 사업은 의사상자 예우, 사회복지제도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 원 폭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지원,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국민연금급여 지급, 지역자 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감염병 관리, 생물테러대응체계 강화,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사업임.

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정과 정보화를 포함하였다.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을 2개 분과(일반재정, 정보화)로 구분하여 실무 운영을 하였다. 일반재정 분과위원회에는 총 6인의 평가위원이, 정보화 분과위원회에는 총 2인의 평가위원이 선정되었다. 평가 대상 사업을 분과별로 살펴보면, 일반재정이 92개, 정보화가 8개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은 2017년 기준 34조 7107억 원, 1912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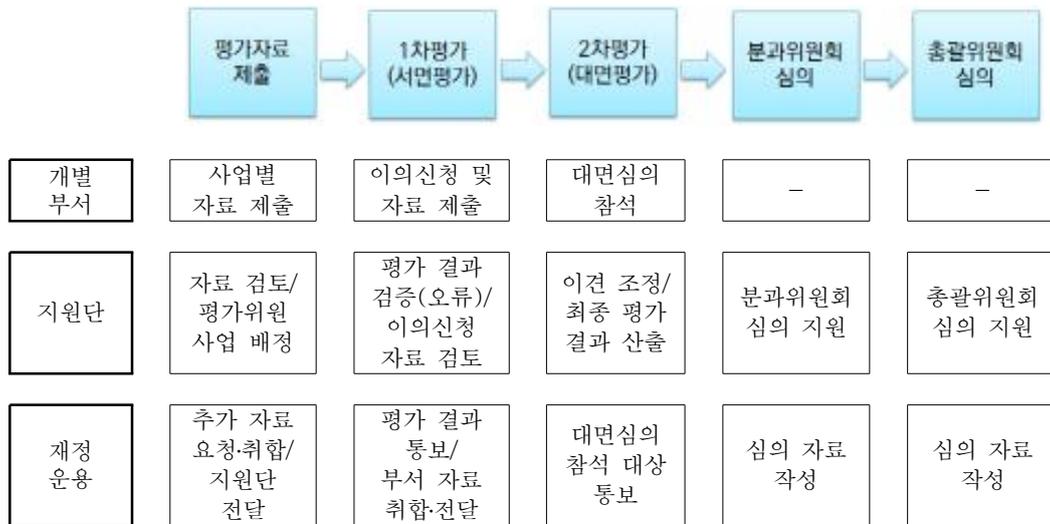
〈표 3-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대상

구분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장 포함)	평가 대상 단위 사업 수	평가 대상 예산액
일반재정	10인	7인	92개	37조 7107억 원
정보화		3인	8개	1912억 원

일반재정 분과는 평가 대상 사업의 수가 많아 평가위원 1인당 15개의 평가 대상 사업이 배정되었다. 전년도에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 사업이 배정되었는데, 서면 평가 및 대면 평가 과정에서 관대한 평가 및 과도한 가점 부여 등으로 평가 결

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평가위원의 분야 및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 대상 과제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단, 특정 분야(보건, 복지)가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그림 3-1] 평가 프로세스 및 주체별 업무 분담



3. 평가 지표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지표는 4개로 구성되며, 관리 지표(2개)와 결과 지표(2개), 가점(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지표는 사업 관리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집행(20점)과 사업 관리(20점)로 구성된다. 예산 집행 지표(1-1)는 1) 예산의 실집행, 2) 상반기 집행 계획, 3) 분기별 집행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2)와 3)은 재정 집행 관리 대상 사업⁶⁾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외 사업은 1)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전년도 평가 지표와 차이가 있다.

사업 관리 지표(1-2)는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신규 도입된 지표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에 따라 핵심사업 평가가 도입되었고, 핵심

6) 기획재정부(2017)의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따르면, 전체 44개 중앙부처는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다만,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내 경기 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월별 균등 지급(예: 기초연금, 생계급여, 보상금 등) 등 조 기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

사업 평가는 이 지표에서 활용한 ‘사업 관리’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핵심사업 평가 대상에서는 사업 관리 지표를 제외하거나 배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핵심사업 평가 대상 사업이 타 분야 평가(예: R&D, 지역발전 등)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에 포함되므로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관리 지표로 포함하였다.

결과 지표는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 달성(40점)과 성과 우수성(20점)으로 측정한다. 목표 달성(2-1)은 1) 성과 지표의 적절성, 2)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3) 성과 달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성과 지표는 반드시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지표여야 한다.⁷⁾ 1)과 2)는 정성 지표인 데 반해, 3)은 정량 지표이다. 성과 우수성(2-2)은 성과 지표의 달성이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점수는 부여한다. 이는 목표 달성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점은 예산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것이다. 가점의 판단 기준은 1)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2) 성과 지표 개발 우수 사례, 3) 사업 추진 우수 사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는 전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지표(관리 1개, 결과 2개)에 비해 ‘사업의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지표와 재정사업 평가에 포함된 성과 지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오윤섭 외, 2017), 2018년 평가 지침에 “성과 지표는 ‘2017년도 성과 계획서(추경)’에 제시된 성과 지표 목표치와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함.

〈표 3-4〉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 배점 기준	합계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였는지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20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20 15 10 5	
		(1-2)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였는가? ○ 사업 추진 방식(사업 계획-관리-환류) 및 문제 해결(사후 관리, 부정수급 대응)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 부여	20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20 15 10 5 ※ 정보화사업 특성화 지표: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별 성과 측정과 개선 노력 및 정보 보호 노력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결과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성과 지표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 부여	40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40 30 20 10	
		(2-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 성과 지표 달성도 외에 내외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 부여	20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20 15 10 5	
합 계			100
가점	○ 사업 효율성, 성과관리 및 사업 추진 우수 사례 (가점 반영 시 최대)		5 105

4. 평가 자료

평가는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별 부서에서 작성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평가 자료이다. 즉 평가 보고서는 개별 부서에서 사업 담당자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예산과 성과 지표는 법정 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서 매번 활용되는 지표이므로 평가 지표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명 자료 및 추가 요청 사항 등에서도 상당히 관대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이를 판단할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내용들이 모든 평가위원에게 공유되었다.

〈표 3-5〉 평가 자료 및 근거 자료

자료명	관련 지표
1.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100개)	전체
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사업 설명 자료	1-1
3. 디브리핑 출력 자료-예산 및 집행 현황	1-1
4. 재정 집행 관리	1-1
5. 2017년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2-1
6. 2014~2016 회계연도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 통보	2-2
7. 2014~2016년 보건복지부 국회 결산 시정 요구 사항	2-2
8. 20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결과	2-2
9.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2-2
10. 기획재정부 연장사업 평가 결과	2-2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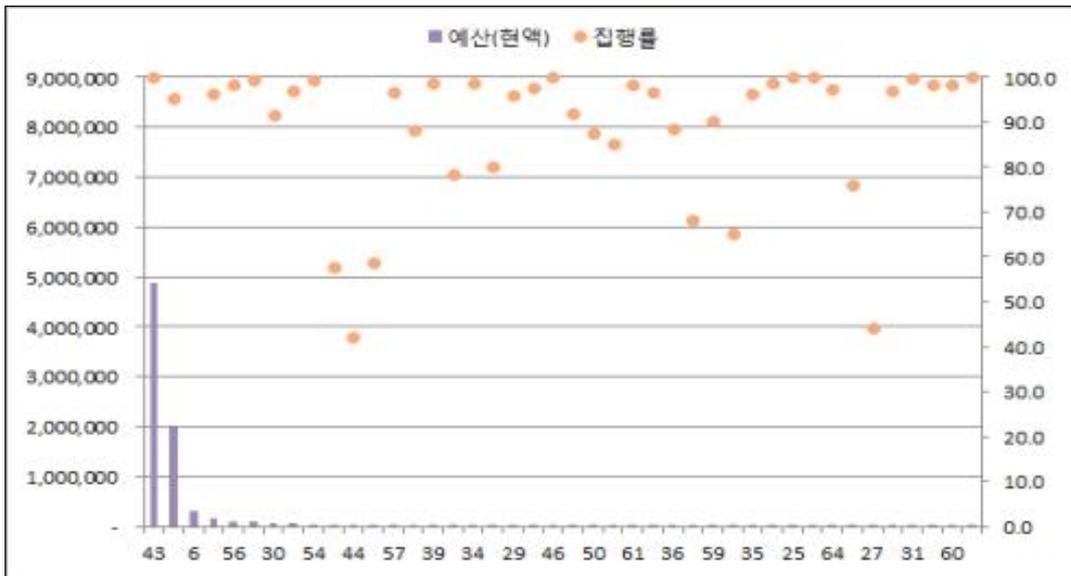
1. 보건 분야 평가 결과

가. 예산 집행(1-1)

예산 집행을 살펴보았을 때, 보건 분야 42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균 집행률은 89.3%로 나타났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일부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데 반해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80% 이상이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60% 미만)이 놓여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접근성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 보건 분야 예산 및 집행률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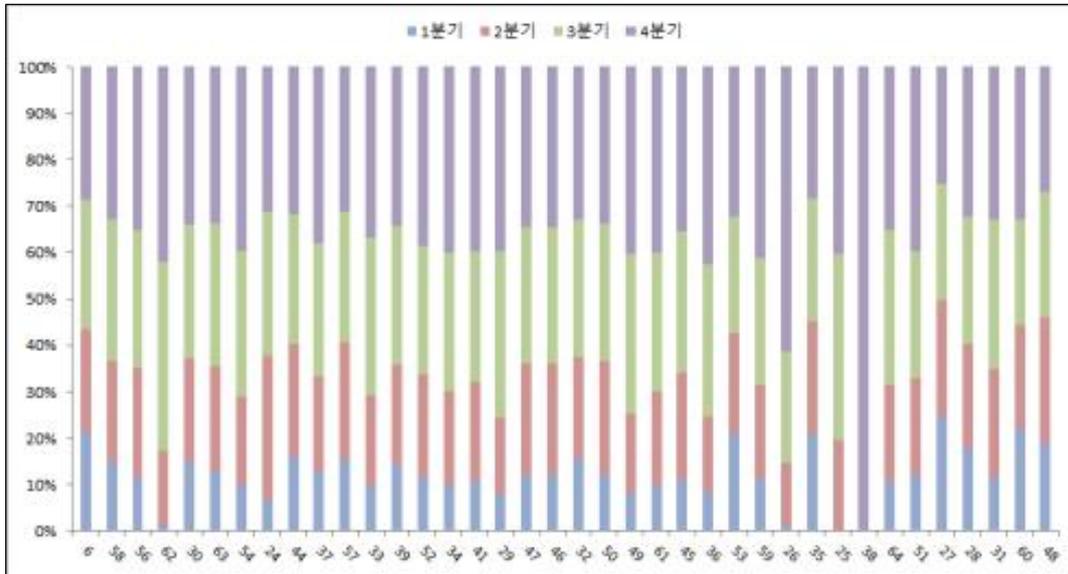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왼쪽 y축은 예산액을, 오른쪽 y축은 집행률을 나타냄.

보건 분야의 단위사업 중 재정 집행 관리 제외 사업은 4개(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지원(기금),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건강증진 조사 연구)이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상반기 집행률(50%)을 달성하고 분기별 집행률을 준수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고(6개), 일부 사업은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12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집행 관리를 하지 않는 사업은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보건 분야 분기별 예산 집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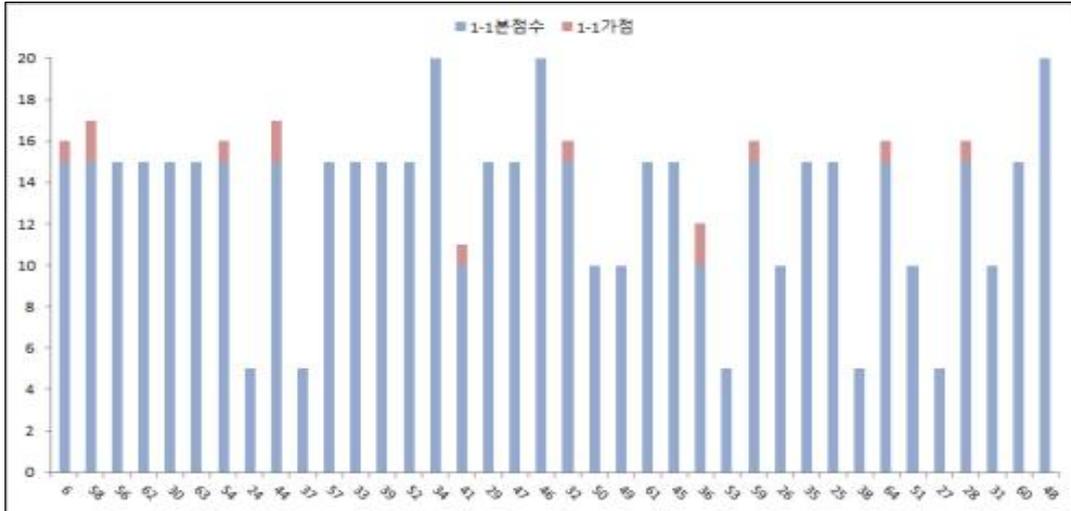


주: 1) 재정 집행 관리 대상 사업만 나타낸 것임(43, 42, 40, 55번 사업은 재정 집행 관리 대상이 아님).
 2)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분기별 집행률을 누적으로 표현한 것임.

평가 지표 1-1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4단계로 점수를 부여한 본점수에 예산 집행 노력에 따른 가점을 부가하여 최종 점수를 판단한다. 42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0%이므로 본 점수가 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1개 사업은 예산 집행 실적은 다소 낮으나 예산 집행 노력이 있어 가점이 인정되었다. 가점은 주로 수요의 변화에 따라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행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여된다.

[그림 3-4] 보건 분야 예산 관리 지표(1-1)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누적으로 표현한 것임.

<표 3-6> 보건 분야 예산 집행(1-1) 가점 현황

단위사업명	총점	본점수	가점	비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3-1-1)	16	15	1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시·도별 사전 점검을 통한 재배정
금연사업	17	15	2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 점검 및 독려, 다양한 협의체 운영
회귀질환자 지원	16	15	1	시·도별 집행 점검을 통한 예산 재배정
의료인력 양성	17	15	2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 정기 모니터링 및 중앙·지방 협의를 통한 효율적 집행
한약산업 지원	11	10	1	한약산업 육성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의료취약지 지원	16	15	1	사업 설명회 및 시·도 수요 조사 실시 등 적극적 집행 노력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12	10	2	국립연명의료기관 지정 지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노력 인정
건강·영양평가	16	15	1	1분기 미집행된 선금에 대해 2분기 내 전액 집행 조치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	16	15	1	세월호 참사 미등록 유가족 및 생존자 안내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노력
공공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기술 단 지원	16	15	1	교육과정 다양화, 맞춤형 교육 추진 등 집행상의 문제 파악 및 집행을 제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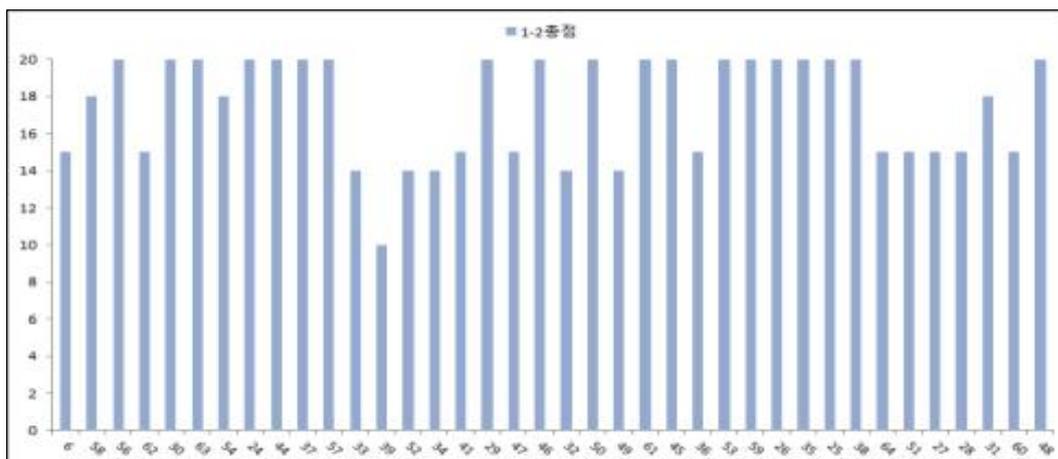
나. 사업 관리(1-2)

사업 관리 지표(1-2)는 사업의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 및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환류를 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세 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정성 지표로 4개의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은 1)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2)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했는지,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환류 실적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7.4점). 이들 사업은 대부분 자치단체 보조사업 혹은 별도의 전달체계가 있는 직접 수행 사업으로 예산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불용 및 과다 집행에 대한 사유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을 재배정하는 환류 방식의 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 예산 집행 점검 등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보건 분야 사업 관리(1-2)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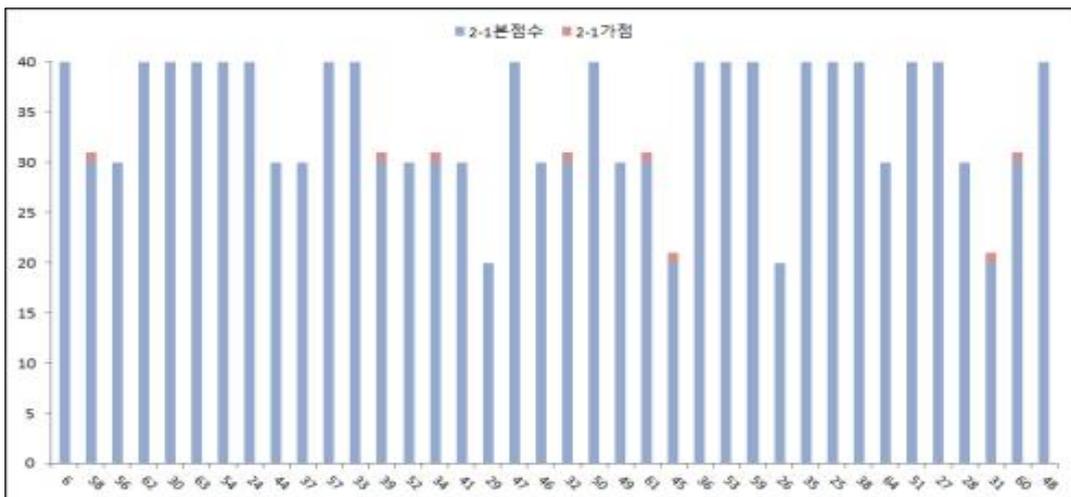
다. 목표 달성(2-1)

목표 달성 지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성과 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선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의 세부 요건들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4개 구간에 대한 정성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분 가점을 적용하였다. 부분 가점은 ‘상당한 정도(30점)’ 혹은 ‘어느 정도(20점)’에 해당하나 1) 사전에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 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상향 설정, 3) 사업의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 혹은 결과지표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였다.

목표 달성 지표(2-1)의 평균 점수는 34.1점으로 나타났다. 본점수의 평균은 33.9점이고 부분 가점 평균은 0.1점이다. 본점수를 기준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정책 지원, 혈액안전 관리, 체대혈 공공관리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의 성과 지표(예: 인체조직 기증자 수, 기증 체대혈 보관 유닛 등)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림 3-6] 보건 분야 목표 달성(2-1)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나타냄.

부분 가점은 ‘상당한 정도’ 혹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가점은 ‘상당한 정도(30점)’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어느 정도(20점)’ 해당하는 사업에도 부여되었다.

〈표 3-7〉 보건 분야 목표 달성(2-1) 가점 현황

단위사업명	총점	본점수	가점	비고
금연사업	31	3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보건산업 진흥	31	3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31	3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의료취약지 지원	31	3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건강증진사업 지원기구 운영	31	3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정책 지원	21	2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제대혈 공공관리	21	2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절주사업	31	30	1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로 작성

라. 성과 우수(2-2)

성과 우수 지표는 성과 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는 지표로, 목표 달성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목표 달성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단위사업의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과 우수 평가 지표 역시 4개 구간에 대한 정성 지표로 측정하고, 가·감점을 적용하였다. 본점수는 1) 사업 시행 주체 외의 제3자가 실시한 국내외 평가에서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수성 인증, 2) 사업 시행 주체가 실시한 평가에서 사업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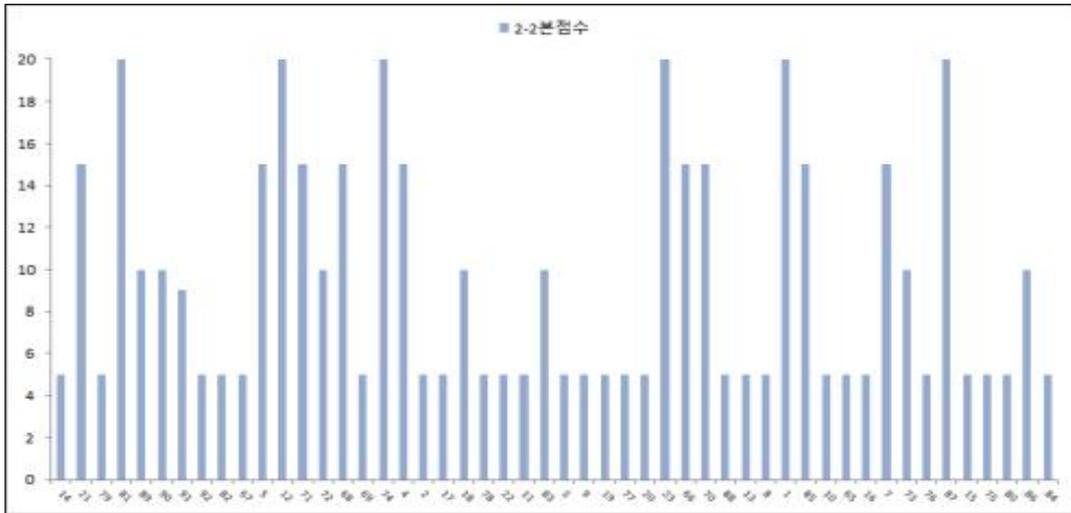
사업 시행 주체 외 제3자가 실시한 국내외 평가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 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성과평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등을 적용하였다.

성과 우수 지표(2-2)의 평균 점수는 7.8점으로 나타났다. 본점수를 기준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장 낮은 사업은 정신보건시설 확충,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의료 기반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시설 확충 사업으로, 성과가 도출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일부 대인서비스 사업(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 사업 지원, 절주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보건 분야 성과 우수(2-2)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나타냄.

마. 가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 원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이다. 그러나 비재정적 요소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 달성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가점’을 적용하였다. 가점은 5점 만점(평균 0.4점)으로 1) 사업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거나 예산 성과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2) 재정 성과 지표 개발 우수 사례, 3) 협업, 열린 혁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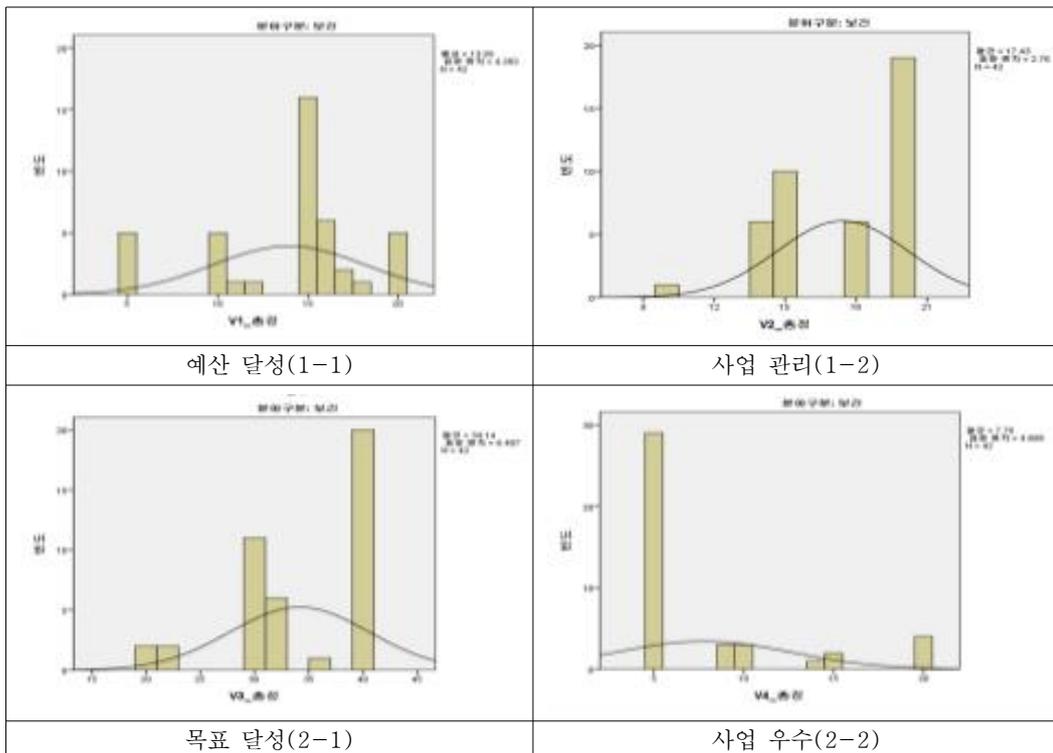
〈표 3-8〉 보건 분야 가점 현황

단위사업명	가점	비고
보건소 건강증진	1	성과관리 1건 인정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결과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사업 평가에 활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1	사업 추진 1건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7 K-ICT 클라우드 산업대상 우수 도입 기관 선정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1	사업 추진 1건 인정 -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2017년 우수정책경진대회에서 '기증 중사자 스트레스 관리' 내용으로 '우수상' 수상
보건의료기술 평가 연구	2	예산 운영 1건 인정 - 허가·평가 통합 운영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 법령 개정(3건)으로 예산 편성 기반 마련 사업 추진 1건 인정 - 기재부 우수 협업 과제 선정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1	사업 추진 1건 인정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관련 점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경영공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
건강·영양평가	1	성과관리 1건 인정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보건기구(WHO) 요청 지표 생산에 적합한 자료원으로 선정
혈액안전 관리	2	성과관리 1건 인정 - 혈액안전감시체계 통합 구축(2017)을 통해 혈액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관리 노력 인정 사업 추진 1건 인정 - 재난 대응 월별 훈련 평가 '최우수' 평가(행안부 주관)
보건산업 육성 지원	2	사업 추진 2건 인정 - 인사혁신처 주관 "제2회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선정한 '민생 부담 해소 분야' 2017년 규제 혁파 우수 사례" 선정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	3	성과관리 3건 인정 -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를 위한 공공후견제도 도입 - 정신보건 사례 관리 시스템 통합 구축 관련 서울시·복지부 양해각서(MOU) 체결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언론 보도 실적은 아시아 경제(5. 2.)와 서울신문(5. 23.) 등 5건 인정
공공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기술단 지원	1	성과관리 1건 인정 - 전체 공공의료기관(2017년 말 221개)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환경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제공(헬스맵) 등의 성과 제고 노력 인정
절주사업	1	성과관리 1건 인정 - 절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절주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홍보를 다양화한 노력 인정

지금까지는 보건 분야의 평가 지표별로 평가 점수와 가점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그림 3-8]은 보건 분야 평가 지표별 점수의 빈도를 나타낸다. 예산 달성 지표(1-1)는 총점 20점 만점에 평균 13.95점이고, 15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비교적 낮은 점수대에도 많은 사업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사업 간 점수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관리 지표(1-2)는 20점 만점에 평균 17.43점이나 20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5점에서 2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목표 달성 지표(2-1)는 40점 만점에 평균 34.14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40점과 30점 부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 우수성 지표(2-2)는 20점 만점에 평균 7.76점으로 모든 지표를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5점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보건 분야 평가 점수 분포(평가 지표 기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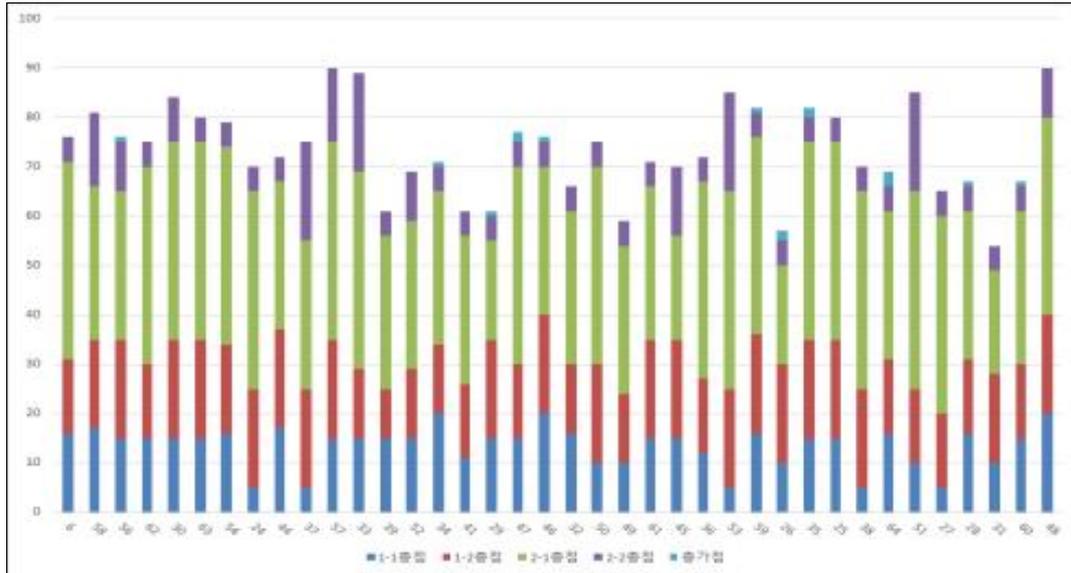


주: x축은 평가 점수를 나타내고, y축(좌)은 빈도를 나타냄.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보건 분야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보건 분야 전체 평균은 73.76점이고, 55점에서 9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정규분포를 띠고 있다.

[그림 3-9] 보건 분야 평가 결과(총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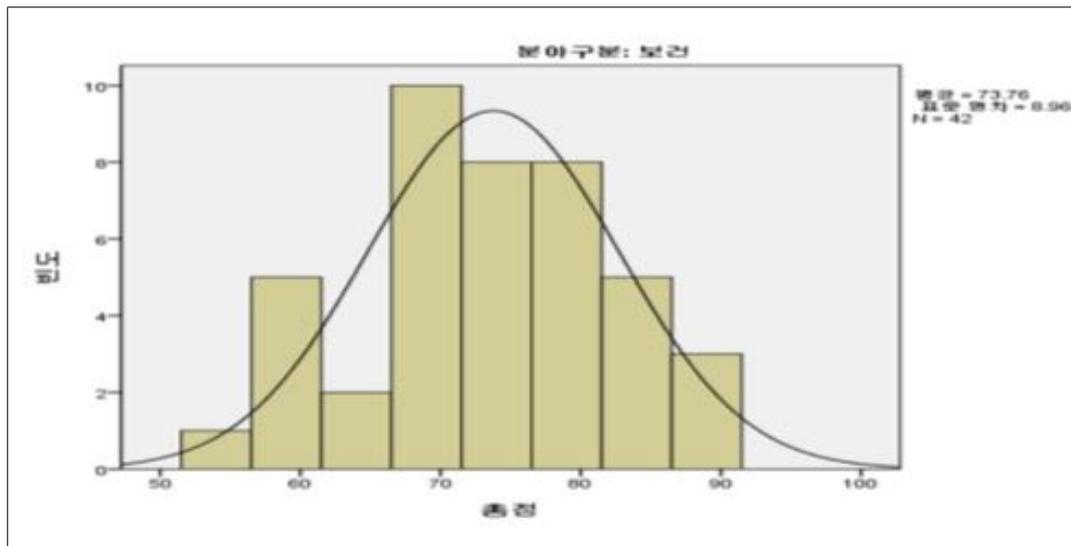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누적적으로 나타냄.

[그림 3-10] 보건 분야 평가 점수 분포(총점 기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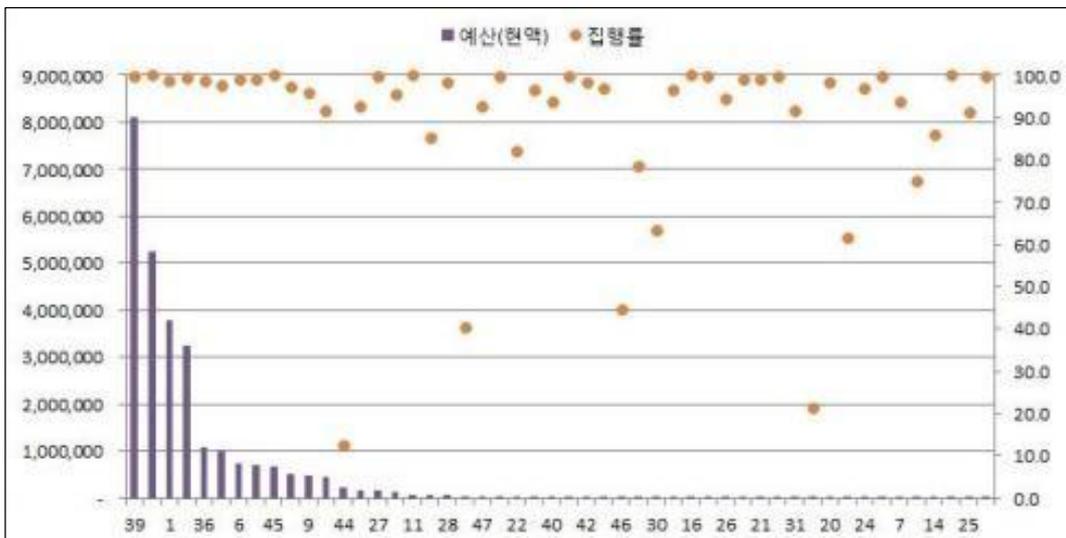
2. 복지 분야 평가 결과

가. 예산 집행(1-1)

예산 집행을 살펴보았을 때, 복지 분야 50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균 집행률은 89.1%로 나타났다. 예산의 집행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나타냈으나, 일부 사업의 집행률은 매우 낮았다.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 4개,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2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 혹은 용자 사업으로 수행하거나 지원 방식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사업의 집행률 부진이 재원 조달 방식이나 사업의 전달체계 등의 공통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과 관련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1] 복지 분야 예산 및 집행률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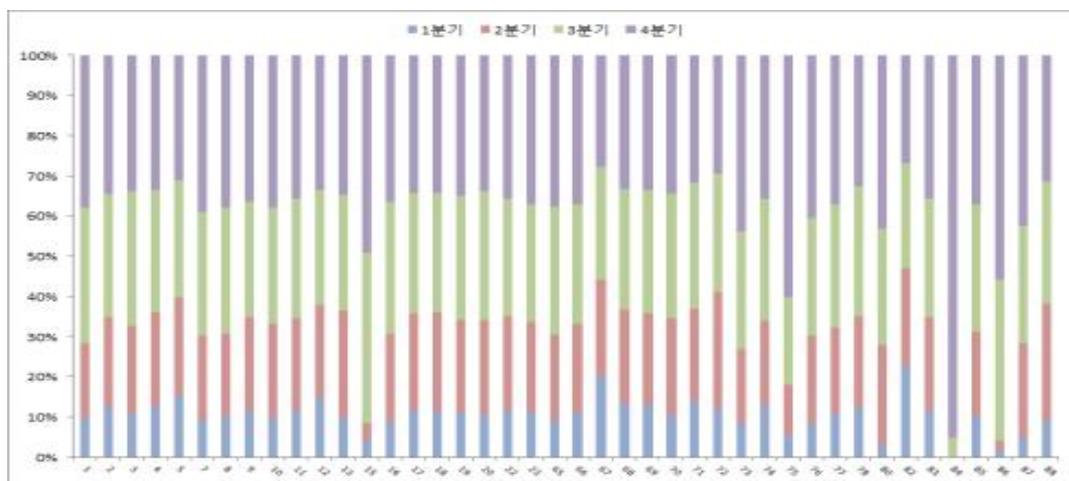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왼쪽 y축은 예산액, 오른쪽 y축은 집행률을 나타냄.

재정 집행 관리 제외 사업 8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집행률과 분기별 집행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고(6개), 일부 사업은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4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집행 관리를 하지 않는 사업은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재정 집행 관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 등으로 제한되나 실제로 재정 집행 관리 대상 사업이 그러한 사유로 제외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재정 집행 관리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포함된 사업이라면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성과 관리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2] 2017년 분기별 예산 집행률

(단위: %)



주: 1) 재정 집행 관리 대상 사업만 나타낸 것임.
 2)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분기별 집행률을 누적으로 표현한 것임.

복지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가점이 인정되었다. 대부분의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예산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 격차 조정을 위해 재배정하는 등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노력이 인정되었다. 일부 시설 건립 사업은 부지 선정 및 설계, 건축 등 일련의 과정이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기자재 수급 등으로 늦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사업자 선정 및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기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었다. 일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재배정한 것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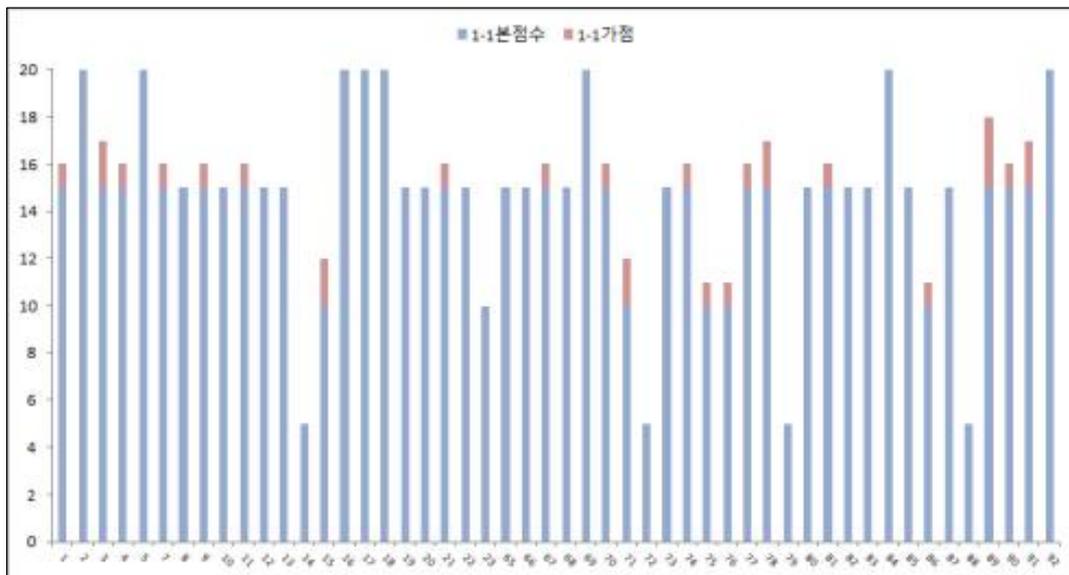
〈표 3-9〉 예산 집행(1-1)의 가점

단위사업명	총점	본점수	가점	비고
국민연금공단 사육 확보 사업	18	15	3	사육 신축, 지방 이전 등 예산 조기 집행 노력
긴급복지	17	15	2	긴급 지원 위기 상황 인정 사유 확대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
국민연금 복지사업	17	15	2	복지타운 실적 부진으로 노후 물품 교체 등의 집행 노력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17	15	2	출생아 수 감소 및 어린이집 이용 증가에 따른 집행 잔액 전용
노인복지 지원	16	15	1	과년도 집행률 부진에 대한 문제 분석에 따라 신청 안내 강화
자활 지원	16	15	1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편성 인원 하향 조정 등 집행 제고
장애인 소득보장	16	15	1	예산 집행 부족을 예상하여 4회 집행 실적 조사 후 사업 간 내역 변경 실시
장애인 선택적 복지	16	15	1	추경예산 편성에 대비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보건복지콜센터	16	15	1	장기근속 동기 부여로 인건비 불용 개선
가정위탁 지원	16	15	1	중간 정산을 통해 집행 상황 체크 및 예산 내역 변경 등 조치
영유아보육료 지원	16	15	1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집행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 전용 확인 후 편성 및 집행 탄력적 대응
기초생활급여	16	15	1	양곡할인사업 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에 따라 예산 변경
장애인단체 지원	16	15	1	월별·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집행 독려(11회) 및 하반기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드림스타트 지원	16	15	1	매월 점검을 통한 기초자치단체간 지원 예산 조정, 인센티브 부여 및 페널티 부여 등의 집행 노력
어린이집 지원	16	15	1	시·도별 변경 내시 및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한 효율적 집행 노력
국민연금제도 운영 사업	16	15	1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 홍보로 집행률 제고 노력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2	10	2	재활병원 건립 부진에 따른 추가 공모 계획 및 관리 개선, 건립 집행 현황 모니터링 강화
모자보건사업	12	10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집행 잔액 발생
어린이집 기능 보장	11	10	1	추경으로 리모델링 지원 단가 및 신축 지원 상향
어린이집 관리	11	10	1	설치비 집행 독려 인정,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 등의 집행 노력
치매관리사업 지원	11	10	1	추경 편성, 시설 증개축으로 인한 차년도 지급

복지 분야 예산 집행(1-1)은 20점 만점에 평균 14.96점으로 나타났다. 8개의 사업은 예산의 실행률이 100%로 20점 만점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업은 15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점수인 5점에 분포하는 사업도 일부 존재했다. 이들 사업의 일부는 재정 집행 관리를 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의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왜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자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혹은 현재 사업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효율적인 사업 집행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13] 복지 분야 예산 관리 지표(1-1)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누적으로 표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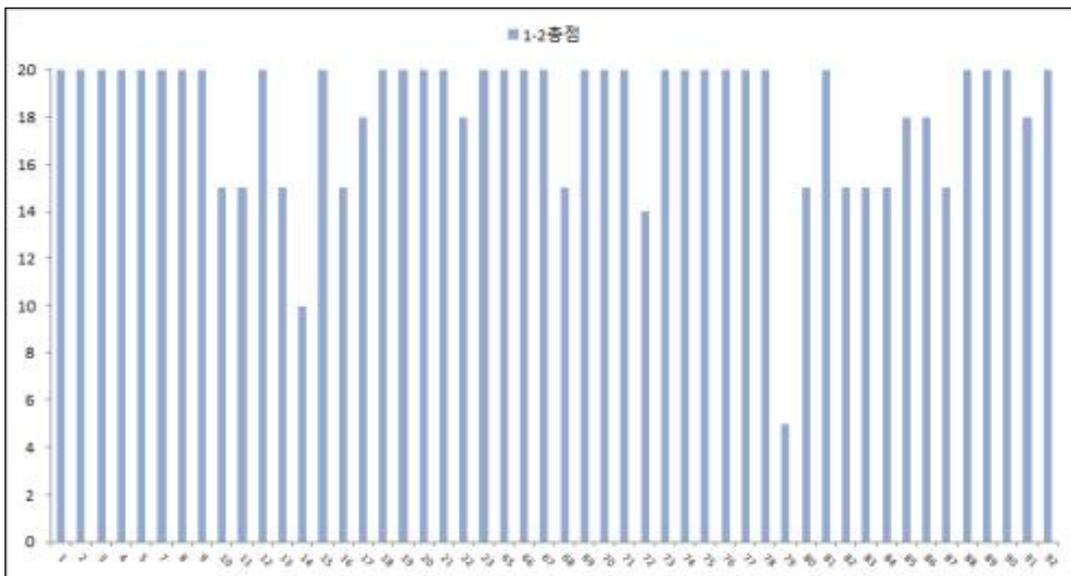
나. 사업 관리(1-2)

복지 분야 역시 사업 관리 지표의 점수가 평균 18.18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 관리와 사업 관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민간보육시설 지원,

국민연금 복지사업과 같은 재정 집행 관리 제외 사업과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 치매관리, 양로시설 운영 사업 등 분기별 집행 실적과 상반기 집행 실적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사업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예산의 불용이 사업 관리의 부족에 따른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예산 집행이 4분기에 집중된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과 전달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4] 복지 분야 사업 관리(1-2)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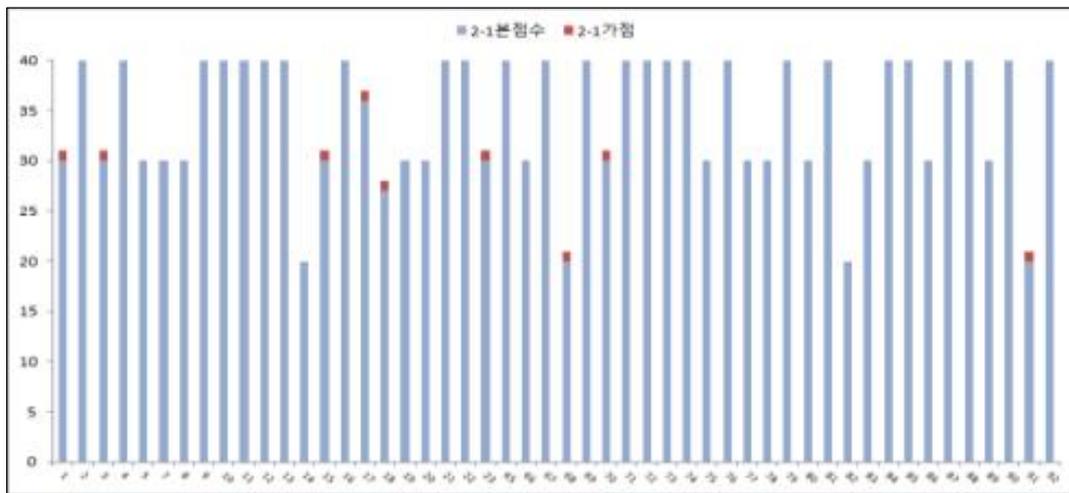
다. 목표 달성(2-1)

목표 달성 지표(2-1)의 평균 점수는 34.64점으로 나타났다. 본점수의 평균은 34.46 점이고 부분 가점 평균은 0.18점이다. 본점수를 기준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국민연금 복지사업, 노인 관련 기관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와 국민연금 복지사업은 앞서 살펴본 예산 집행(1-1)과 사업 관리(1-2)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때로 이러한 목표 달성 지표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인한 달성도의 미흡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저성장 등의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성과 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매칭 비용 증가에 대응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 성과 달성도는 낮게 나타났다(내부적인 요인). 이에 더하여 후원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개인과 기업 후원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외부적인 요인).

[그림 3-15] 복지 분야 목표 달성(2-1) 평가 결과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나타냄.

복지 분야에서 목표 달성 지표의 가점은 9개 사업에서 인정되었다. 가점은 성과 지표가 산출 지표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9개 사업에는 국민연금 복지사업,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노숙인 등 지원, 긴급복지, 국제 협력 관리, 드림스타트 지원,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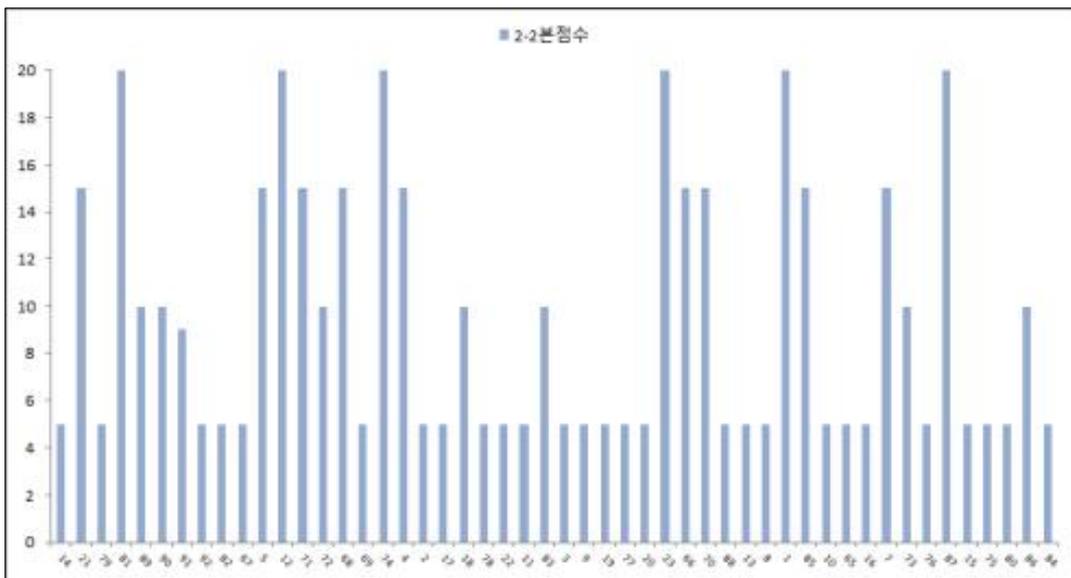
라. 성과 우수(2-2)

복지 분야 성과 우수 지표(2-2)의 평균 점수는 9.38점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사업 역시 성과 우수 지표의 평가 결과가 대부분 ‘아니요(5점)’에 해당하며, 일부 사업만 2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이나 노인 복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은 법정 평가에서 ‘최우수’ 혹은 ‘매우 우수’의 등급을 받거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계량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반면에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관리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우수성은 인정받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그림 3-16] 복지 분야 성과 우수(2-2) 평가 결과

(단위: 점)



마. 가점

복지 분야는 전체 50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받았다. 예산 운영 실적으로 인한 가점 인정은 보건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에 대한 가점도 인정되었다.

〈표 3-10〉 복지 분야 가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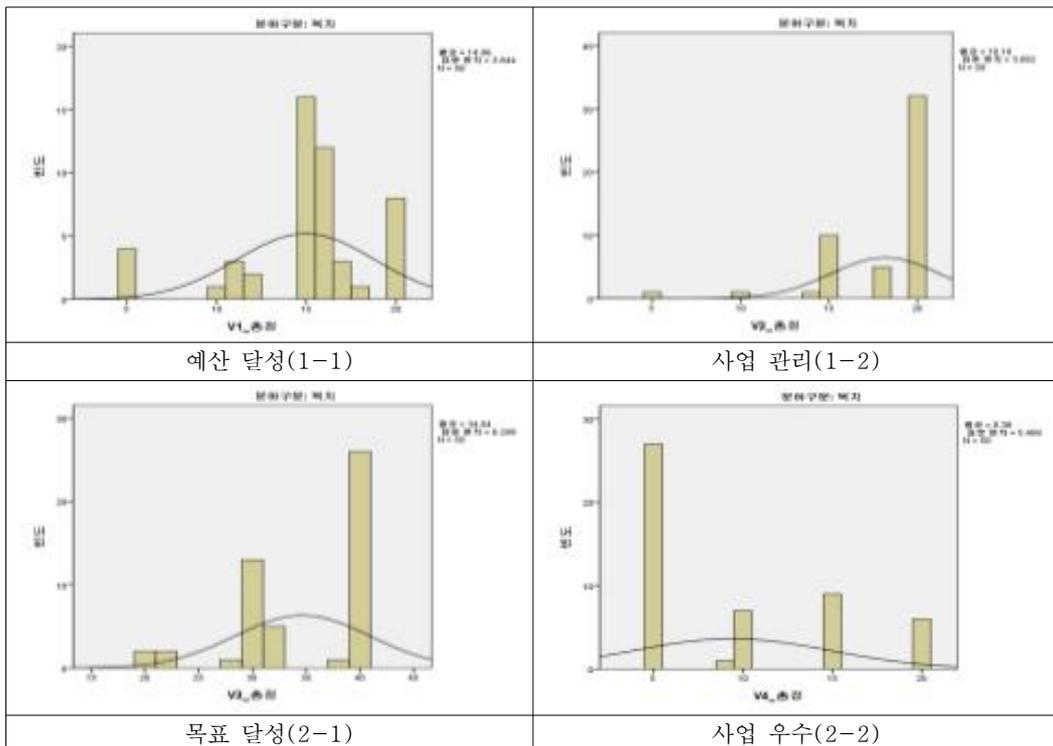
(단위: 점)

단위사업명	가점	비고
방과후활동 지원	2	예산 운영 1건 인정 - 수시 배정 예산을 활용하여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기준 마련 성과관리 1건 인정 - 기존의 평가제도 외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통한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 노력 인정
의료급여	2	예산 운영 1건 인정 -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사업 추진 1건 인정 -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42번) 분야와 국민 만족도 분야에서 '우수' 평가 ※ 이 사업은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지원단이 일괄 적용함
보건복지인력 개발	2	사업 추진 2건 인정 -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 '우수' 선정, 통계청 2017년 국가통계통합DB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긴급복지	2	예산 운영 1건 인정 - 포항시 지진 피해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3개소)하고 통합사례관리사 6명을 배치하여 선지원 및 제도 적극 홍보 사업 추진 1건 인정 -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의 국정과제 '우수' 적용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예산 운영 1건 인정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어린이집 기능 보강	1	사업 추진 1건 인정 - 보건복지부 일자리 창출 지원 부서(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됨. 단위사업 내 주요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2017년 추진 실적을 인정

지금까지는 복지 분야의 평가 지표별로 평가 점수와 가점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그림 3-17]은 복지 분야 평가 지표별 점수의 빈도를 나타낸다. 예산 달성 지표(1-1)는 총 점 20점 만점에 평균 14.96점이고, 15점 이상 점수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5~10점 사이의 낮은 점수의 빈도는 낮은 편이다. 사업 관리 지표(1-2)는 20점 만점에 평균 18.18점이나 20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5점에서 2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5점과 10점을 나타내는 빈도는 매우 낮다. 목표 달성 지표(2-1)는 40점 만점에 평균 34.64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40점과 30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 우수성 지표(2-2)는 20점 만점에 평균 9.38점으로 모든 지표를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사업이 ‘아니요(5점)’에 해당해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보건 분야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복지 분야 평가 점수 분포(평가 지표 기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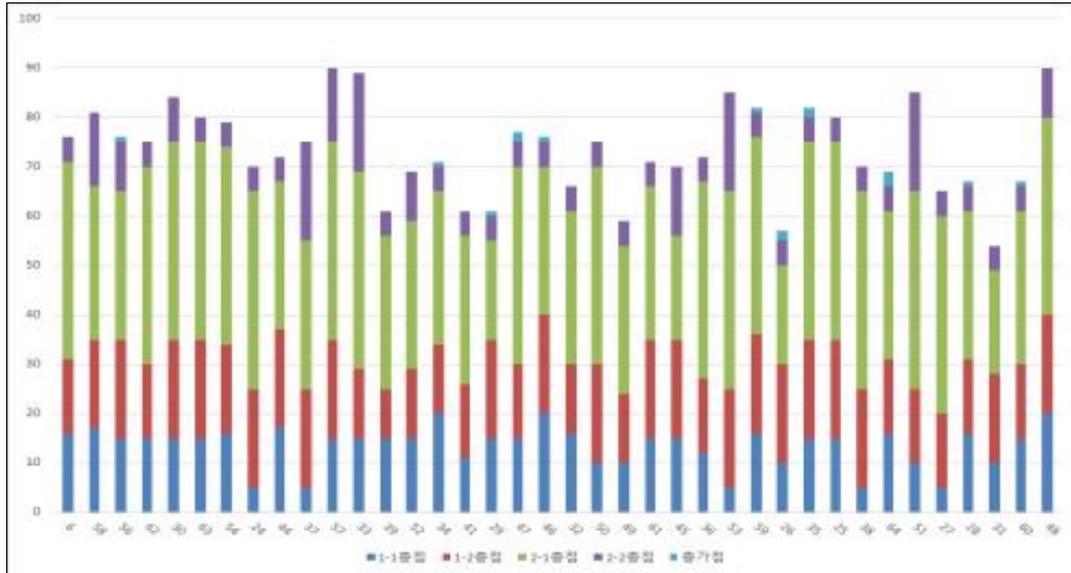


주: x축은 평가 점수를 나타내고, y축(좌)은 빈도를 나타냄.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복지 분야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복지 분야 전체 평균은 77.96점이고, 60점에서 9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정규분포를 띠고 있다.

[그림 3-18] 복지 분야 평가 결과(총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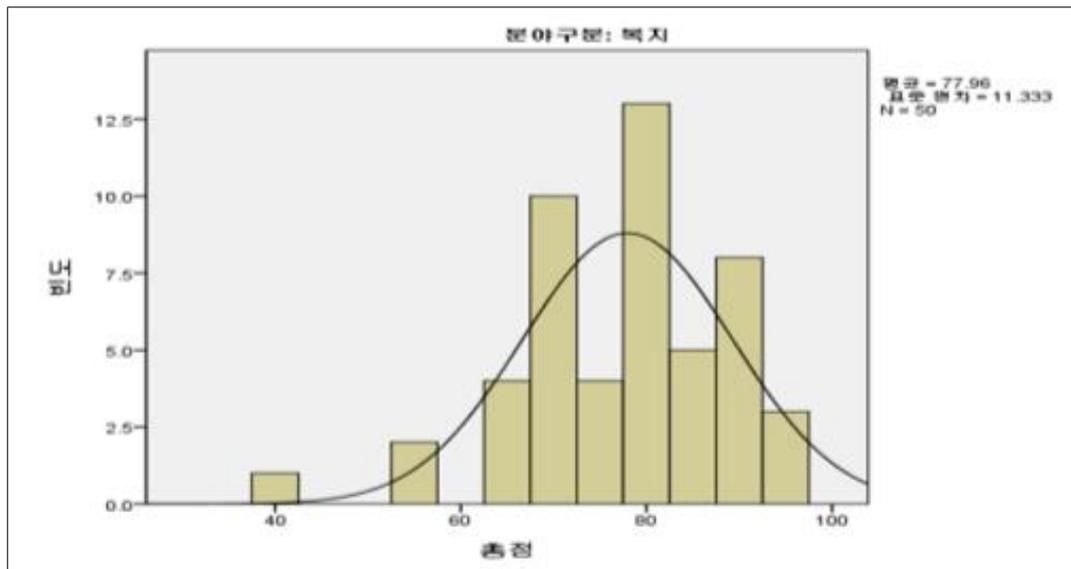
(단위: 점)



주: x축은 사업의 연번을 나타내고, y축(좌)은 평가 점수를 누적적으로 나타냄.

[그림 3-19] 복지 분야 평가 점수 분포(총점 기준)

(단위: 점)



3. 분야별 평가 결과의 비교

평가 결과가 분야별로 상이하다면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⁸⁾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야별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산과 목표 달성 등 성과 계획서에 근거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평가 지표의 경우 분야와 평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복지사업의 수가 더 많고 평균 점수에서 복지가 1점 더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 외에도 사업 관리와 사업 우수 지표는 성과관리와 무관하게 평가 지표로 선정된 지표이나 다른 지표와 유사하게 보건보다 복지 분야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의 우수성은 약 2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다만, 총점에서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지표가 분야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총점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표 3-11〉 분야별 평가 결과의 비교

(단위: 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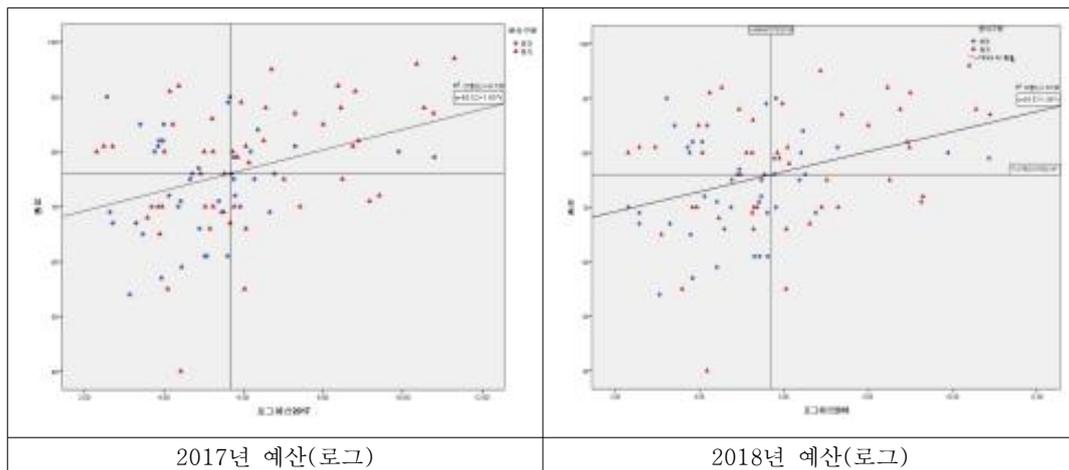
분야 구분		N	평균	df	t
예산 집행	보건	42	13.95	90	-1.189
	복지	50	14.96		
사업 관리	보건	42	17.43	90	-1.221
	복지	50	18.18		
목표 달성	보건	42	34.14	90	-.374
	복지	50	34.64		
사업 우수	보건	42	7.76	90	-1.477
	복지	50	9.38		
총점	보건	42	73.76	90	-1.943+
	복지	50	77.96		

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와 평가 결과를 활용한 양적 조사 및 질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일부 사업의 담당자들은 이러한 평가 지표가 특정 분야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과 평가 점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7년 예산(로그)과 평가 점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산이 증가할수록 평가 점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 평균과 평가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산이 적고 평가 점수가 낮은 왼쪽 아랫부분에 보건 분야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이와 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오른쪽 윗부분(예산이 많고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에는 복지 분야 사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2018년 예산(로그)과 평가 점수 역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산 평균과 평가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과 평가 점수의 분포가 완화되었다. 여전히 사업 예산이 높고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에서는 복지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3-20] 사업 예산과 평가 점수의 관계



주: 아동 자립 지원(1000만 원)에서 노인복지 지원(809억 6100만원)까지 예산 규모의 차이가 커 로그값을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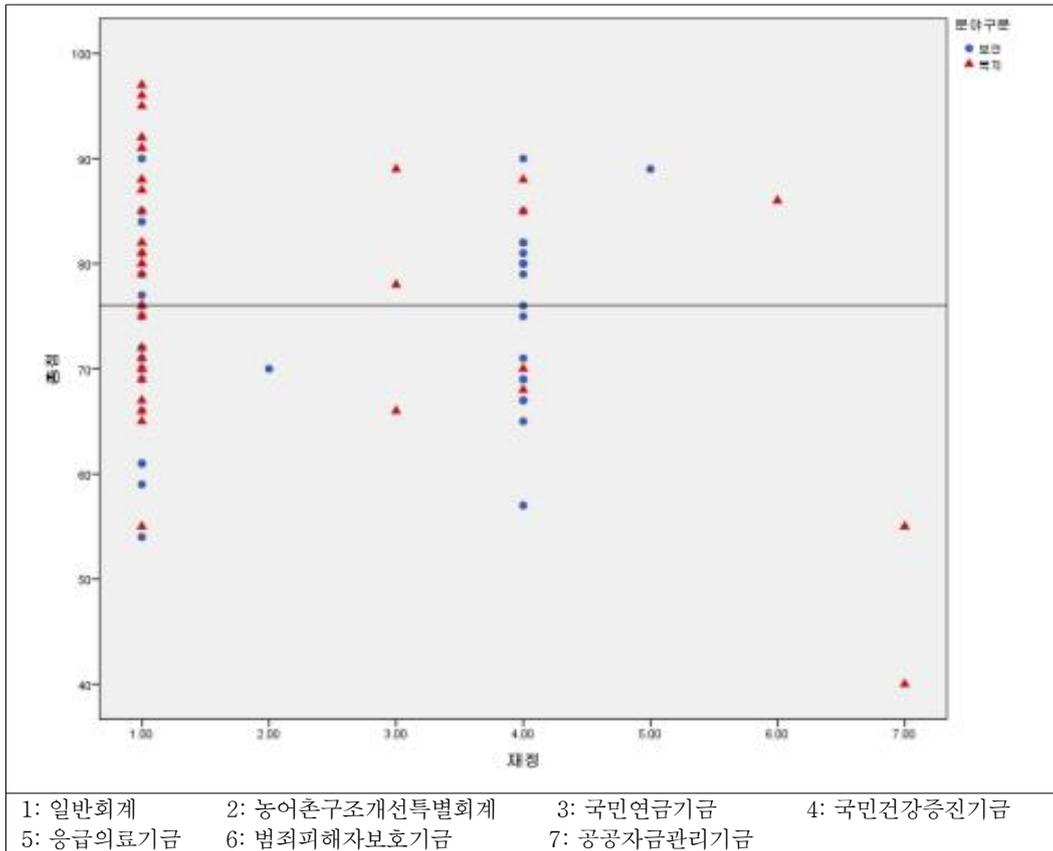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재정사업은 재원이 다양하다. 자율평가에서 재원에 대한 구분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평가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위해 재원과 평가 점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복지 분야 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평가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고르게 분포해 있다. 이에 비해 보건 분야의 일반회계 사업은 최저 점수에서부터 60점 사이에 분포해 있다.

이에 반해 보건 분야 사업은 상당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편성되는데,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 반면 예산 편성 방식이 상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사업은 평가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재정용자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

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역시 평가 점수가 낮다.

[그림 3-21] 재원과 평가 점수의 관계

(단위: 점수)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과 점수 간의 관계를 재정 지원 방식별로 살펴보았다. 재정 지원 방식은 하나의 단위 사업 안에서도 여러 형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수행만 하는 사업, 자치단체 보조만 하는 사업, 그리고 직접 수행 과 자치단체 보조가 동시에 결합하는 사업,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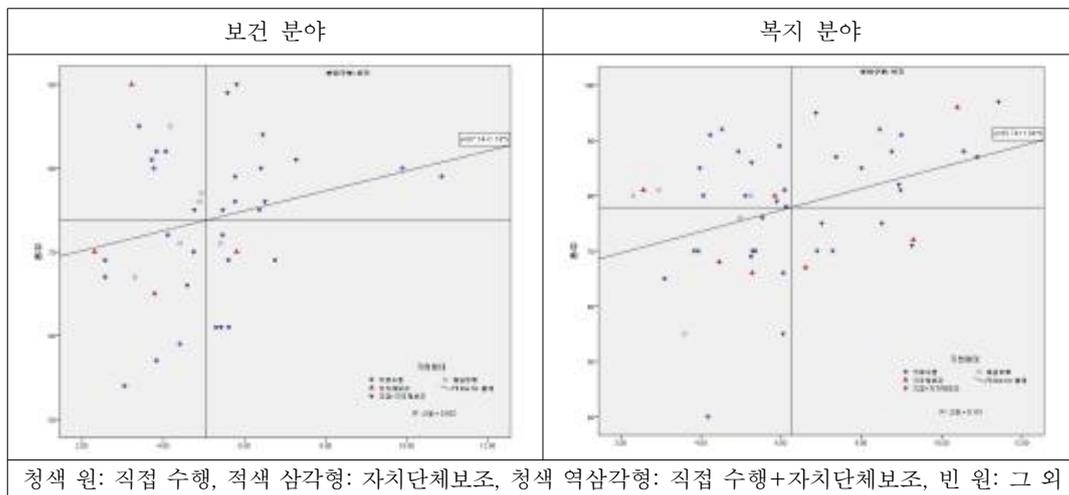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직접 수행으로만 이뤄지는 사업은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히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의 수혜자나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일 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평가 점수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건 분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만 이뤄지는 사업은 대부

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평균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마지막으로 직접 수행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결합한 사업의 경우 예산도 많고 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접 수행 사업의 경우 대부분 예산도 많고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에 분포해 있다. 반면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평가 점수는 평균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직접 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결합한 경우 예산이 많고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 재정 지원 방식과 평가 점수의 관계

(단위: 점수)



청색 원: 직접 수행, 적색 삼각형: 자치단체보조, 청색 역삼각형: 직접 수행+자치단체보조, 빈 원: 그 외

4. 정보화 분야 평가 결과⁹⁾

정보화 분야 평가 대상 사업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보건복지행정 정보화, 보건복지 정보 보호,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 센터 구축·운영,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등 총 8개 단위 사업으로 이들의 평가 점수는 평균 79.9점이다. 이 중 사회복지 전달체계,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은 세부 사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재정사업

9) 일반재정 분야와 정보화 분야의 상이성 및 규모의 차이로 인해 개별 작성함.

과 정보화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사업 평가에서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한 추진'에 대한 평가 지표가 일반재정사업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사업과 같이 일반재정사업과 정보화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세부 사업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 후 예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하였다.

가. 예산 집행

예산 집행률(실집행률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8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균 집행률은 93.2%, 평균 평가 점수는 16.0점(20점 만점)이었으며 3개 사업이 대금 조기 집행, 유지·보수비 절감 등을 통해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각각 3점, 2점, 3점의 가점을 받았다. 4개 단위사업은, 낙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정상 집행으로 간주되었으나 상반기 및 분기별 집행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한편, 2017 회계연도 자율평가에서의 상반기, 분기별 집행 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실집행률 100%(낙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생긴 경우에도 100%로 인정)일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준(미충족 요인)으로 적용되었으나, 그 외에 '상반기 조기 집행 독려'를 위해 상반기 집행 계획 초과 달성 시 가점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사업의 추진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개 단위사업이 세부 사업 중 일반사업과 정보화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세부 사업 각각에 대해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예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8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균 평가 점수는 16.6점(20점 만점)이었다.

정보화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3개 기준, 즉 '시스템별 성과 측정 및 개선 노력',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적', '정보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조치 이행’ 중 ‘시스템별 성과 측정 및 개선 노력’의 경우 대부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무리 없이 진단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적’ 기준에 의하면 성과 측정에 따른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5개 단위사업에서 성과 측정과는 무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개선 계획 및 실적이 제시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평가기관의 담당자가 평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긴 결과임을 대면 평가 시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조치 이행’ 기준에서는 8개 단위사업 모두 조건을 충족하여 최근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성과 달성

8개 정보화사업의 성과 달성도는 평균 29.4점(40점 만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2개 사업은 성과 달성도가 모두 충족되어 40점을 받았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 지표 자체에 대해 대표성과 포괄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지표 목표치 설정에서도 외부 환경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보수적인 목표치 설정 등 미충족 요인이 나타났다. 또한 특정 사업에서는 평가 지표 측정 기관에서의 집계가 본평가 기간에 산출되지 않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평가 지표 변경이 권고되었다.

성과 측정 지표 중 ‘사용자 만족도’ 지표는 사실상 권장하지 않은 지표이나 대상 사업 중 5개 단위사업에서 ‘사용자 만족도’ 지표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족도 지표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대상별로 구분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한다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개 사업은 결과 지표를 적용하고 있어 각각 1점의 가점을 받았다.

한편 1개의 단위사업이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포괄성을 갖추기 위해 단위사업마다 성과 지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 비중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세부 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선정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차기 평가에서는 여러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단위사업 평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 성과 우수성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우수성은 평균 15.0점(20점 만점)으로 사업마다 사업 시행 주체 또는 제3자 평가에서의 우수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단위사업 전체에 대해 인정 받은 경우는 2개 사업뿐이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만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개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시 용역 사업 내용에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평가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타 사업에서도 반영할 만하다.

마. 가점

8개 정보화사업 중 6개 사업이 업무 효율화를 통한 복지재정과 건보재정 절감, 인력 재구성을 통한 업무 지원 강화,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시스템 통합 추진을 통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으로 평균 4점(5점 만점)의 가점을 받았다.

바. 총점

이상과 같이 8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는 최고 100점에서 최저 66점까지, 해당 연도 예산 규모도 최고 약 1660억 원에서 최저 11억 원까지 편차가 심했다. 각각의 사업을 살펴보았을 때도 사업마다의 특성에 따라 단일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단위사업 내에 일반사업과 정보화사업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이렇게 다양한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인 불공정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산 규모, 사업의 복잡성 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한계 및 문제 분석

1. 평가 자료 작성의 한계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자율평가 당시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과 평가 자료 양식의 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다수의 사업에서 단순 오기로 인한 평가 절하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오윤섭 외, 2017).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간 중 제출된 평가 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즉 단순 오기로 인한 평가 자료 미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평가 점수는 사업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단순 오기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평가는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취합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는 사전 점검을 거쳐 다시 부서로 회람되었다.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동일한 형태의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집행 지표와 관련하여 1) 실적집행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났고,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와 평가 자료에 작성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3) 분기별 집행 실적은 누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평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므로 단순 오기 및 누락은 평가 점수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이렇게 미완성된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점수를 확인한 후 평가 자료를 다시 송부하거나 대면 평가에서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는 2~4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위원의 업무 부담 외에도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부서에서 작성한 오기 및 누락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즉 오기 및 실수까지 포함하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오기 및 실수의 만회에 대해 대면 평가에서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사업 관리 지표는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수의 사업 부서에서 사업 지침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지

침상 사업 대상과 시행 주체, 시행 방법, 추진 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은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평가는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업 지침은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지침을 첨부한 경우 평가지원단이 지침을 확인한 후 평가위원이 식별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참조로 고지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평가지원단이 평가 자료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표 3-12〉 사업 관리 지표의 오기 및 수정 예시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요약)	평가지원단 수정
지역아동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사업 대상, 시행 주체, 시행 방법, 추진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제도, 시설·종사자 기준 -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아동 선정 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및 절차 등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017년도 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별첨 자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행 주체: 지역아동센터 - 시행 방법: 보호 및 교육, 정서 및 문화 지원 등 5대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 - 추진체계: 지침 p. 6 참조(복지부-시·도 및 시·군·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 그 외 시설 설치 및 신고, 종사자 기준, 아동 선정 기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지침상 제시

주: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은 본 내용과 무관하며 예시를 위해 작성한 것임.

셋째, 목표 달성 지표와 관련하여 1)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지표와 상이하거나 2) 가중치의 합이 1이 되지 않고 3) 성과 달성도의 목표치와 실적치가 제시되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서는 각 사업의 담당자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것이나 평가는 ‘2017년 성과계획서(추경)’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치와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성과 지표가 프로그램 단위의 목표와 단위사업의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되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평가 지표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해당 부서에서 만들고, 기획재정부의 성과 지표에 대한 협의가 투입 중심의 성과 지표에서 산출 및 성과 중심의 성과 지표를 지향하고, 너무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목표치의 설

정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평가서에 1) 성과 계획서에 작성된 지표와 상이한 지표를 제시하거나, 2) 성과 지표의 단위를 오기하고, 3) 성과 지표의 가중치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원단은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러한 오기 문제는 모두 사전적으로 조정하였으나, 평가 자료 작성 오기로 인한 평가 등급 및 점수 하향에 대한 책임은 자료를 작성하는 사업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이 타 분야 사업의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일반재정 평가 대상 사업의 성과 지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분리해 제시하거나 적절한 성과 지표가 프로그램 단위 성과 지표로 제시되어 단위사업 성과 지표가 제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2017년도 성과계획서(추경)’에 제시된 성과 지표 목표치와 가중치를 측정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부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만 제시하였다. 향후 성과 계획서상 제시된 모든 성과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단위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프로그램 성과 지표로 제시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와 단위사업의 성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의 범위가 동일하다면 이러한 구분이 불필요하며, 따라서 성과 지표를 구분할 필요도 없다.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성과 지표의 오기 등을 수정하고 일부 세부사업이 평가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 성과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던 성과 달성도에 대해 소명 및 이의 조정으로 한정된 대면 평가에서 반영하게 됨으로써 상당수 기존의 평가 결과들이 변경되었다. 1차 평가를 완료한 후 이미 부서별로 평가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서 평가 점수가 변경된 데 따른 평가 등급 변화는 다른 부서와 다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넷째, 성과 우수 지표와 관련해서 1)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매우 적고, 2) 대내적으로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많지 않다. 3) 지침의 한계로 인해 사업의 우수성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했다. 4) 과거에는 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한 기사도

성과 우수 지표로 일부 인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8년 평가 지침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활용한 홍보 및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사전 점검 결과 사업의 우수성 지표에 제시된 내용 중 불인정 사유와 인정 사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3〉 성과 우수 지표의 불인정/인정 예시

우수성 불인정	우수성 인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보고서 (주로 사업지원단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사업 효과성 보고서) - 단순 만족도 조사 (표본추출 및 표본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전화 조사) - 보도 자료를 인용한 홍보 기사 - 부처가 전달체계(시·도, 지원센터 등)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 결과 - 보조사업 평가의 '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으로 우수성을 검증한 용역 보고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과를 확인한 경우) -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보고서 파일 첨부 및 내용 판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본추출에 근거하며,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결과변수와 원인변수가 고려된 만족도 조사) - 취재진이 독립적으로 취재한 심층 기사 및 방송 (언론사명, 날짜 기재 → 확인 가능 시에 평가 반영) - 법정 계획에 근거한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업 (예: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형식의 학술지 게재 실적 (KCI 등재 후보지 이상) <p style="font-size: small;">*단, 모든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한 후에 부여</p>

실제로 부서에서 제시한 사례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탁 과제로 수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정되었다. 이러한 수탁과제는 제3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의한 것이므로 대내 평가로 인정되었다. 유사하게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경우 한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과 서비스 질에 관한 효과 연구'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 논문은 특히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학술적으로 수행한 논문이므로 대외 평가로 인정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홍보성 보도 자료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파악하였다. 특히 사업에 대한 단순 보도는 사업의 우수성을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만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단순 설치와 관련된 된 기사는 포함하지 않은 데 반해 경기 남양주시의 사례와 우수성, 시사점 등이 결합된 심층 분석은 인정하였다.

다섯째,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 사항,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 등 감점 요인과 관련한 자료는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평가지원단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을 통해 수집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2014~2016)』, 국회 『결산보고서(2014~2016)』,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의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시점의 문제가 존재한다.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평가이다. 물론 예산의 집행과 성과 지표의 달성 등이 완료된 후 평가를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감사 및 국회 결산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과거 3년 동안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가 결정되기 전에 1차 평가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소명 및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평가지원단이 일괄적으로 연장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평가위원의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연장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2. 평가 운영의 한계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지침 및 양식의 변화와 함께 1차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소명 및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았다. 다만, 1차 평가 이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의 및 소명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개 일반재정사업 중 52개 사업이 이의신청 및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모든 사업에 대한 재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소명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이 중 42개의 사업은 당초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에 재평가에 해당한다. 문제는 기존의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10월까지 정산한 금액을 작성하도록 지침에 명시했으므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역시 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예산의 실적 제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평가위원의 검토를 거쳐 감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래의 내용은 각 사업별로 이의신청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한 항목과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단의 사전 검토 의견을 요약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이 하지만, 이는 자료의 검토 및 평가 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표 3-14〉 이의 및 소명신청 결과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1	긴급복지	2-2	점수 상향	-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가점 항목에서 인정 가능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은 사업의 우수성 평가 불인정
		가점	점수 상향	
2	자활 지원 사업	1-2	점수 상향	- 부서 소명 사항은 인정되나, 기제출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2-1	점수 배정	- 성과 지표 실적치(115.3%)는 인정 가능 - 산출 지표로 부분 가점 1점 적용 가능 - 성과 지표의 적정성은 다소 미흡, 목표치 보수적 설정
		2-2	점수 상향	-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변경에 따라 감점 미적용 - 제3차 평가 우수성 인정 가능 - 기제출된 외부 평가의 내용 검토 결과 패널화 연구는 불인정,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효과성 연구는 제출 안 해 미반영
3	장애인 선택적 복지	1-1	점수 배정	- 실집행액 99.1% 인정
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1-1	점수 상향	- 실집행액 95.9% 인정
		2-1	점수 상향	- 성과 지표 달성률은 잠정치로 불인정
5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1-2	점수 배정	- 모니터링 체계 및 실적 미흡하여 불인정
6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2	점수 상향	- 제출된 자료 인정 가능하나,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환류 실적)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 고려 필요
		2-1	점수 상향	- 성과 지표의 목표치 설정 적정 - 산출 지표로 부분 가점 인정되나 '예'에서는 불필요
		2-2	점수 상향	-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의 변경은 적용 가능 - 단순 고객 만족도, 성과관리 시행 자체평가는 불인정
7	노숙인 등 지원	2-1	점수 상향	- 평가 지표는 A만 반영(평가 지표 변경은 성과 계획서 수정에서 적용) - 성과 달성도(100%) 인정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8	보건복지 인력 개발	1-2	점수 상황	- 제출된 자료는 인정 가능하나,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 고려 필요
		2-2	점수 상황	- 제시된 내용은 사업의 우수성으로 불인정되나, - 가점 2건 인정 가능
9	국제 협력 관리	2-1	점수 상황	- 라오스사업 종료는 이미 2015년에 예정된바, 2017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의 기회 있었음 - 산출 지표로 부분 가점 1점 적용
		2-2	점수 상황	- 성과 우수성이 인정된 사업의 예산이 단위사업 예산의 50%를 초과하므로 인정 가능
10	혈액안전 관리	2-2	점수 상황	- 중앙부처 및 지자체 24개 기관 대상 평가로 우수성 불인정 -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어 가점 적용 가능
		가점	유보	- 혈액안전감시체계 통합 구축 및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확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로 인정 가능
11	공공의료 기관 평가 및 의료기술 단 지원	2-2	점수 배정	- 회계감사 보고서 불인정, 임상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부 모니터링으로 불인정(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로 우수성 불인정 - 단,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 환경 분석을 위한 헬스맵 서비스 등 가점(1점) 요소는 인정 가능
12	지방의료원 등 육성	2-2	유보	- 2017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적 점검이나, 이 중 서비스 질과 보건의료의 공익성 등 우수성 인정 요소가 포함 - 소명 자료의 제출이 기제출된 자료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위원 검토를 거쳐 일괄적으로 점수 반영 결정
13	제대혈 공공관리	1-1	점수 상황	- 예산 집행 내용의 변동 사항은 없어 점수 변동은 없음 - 소명 사항은 집행을 제고 노력으로 부분 가점 인정 대상
		1-2	점수 상황	-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자료는 인정 - 기제출된 자료(2차)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검토를 거쳐 일괄적으로 점수 반영 결정
		2-1	점수 상황	- 평가위원 오기로 평가 등급과 점수 불일치, 수정 필요 - 성과 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은 소명 자료를 반영
14	의료취약지 지원	1-1	점수 상황	- 실적행률(86.5%) 인정 가능
		1-2	점수 상황	- 소명 자료로 제출된 자료 중 점검 및 모니터링 실적은 인정하나,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실적은 없음 - 기제출된 자료(2차)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검토를 거쳐 일괄적으로 점수 반영 결정
		2-2	점수 상황	- 농어업인 및 농어촌 개발 계획을 포함한 것은 사업의 우수성 인정 실적으로 불수용
15	응급의료 기관 지원	1-1	점수 상황	- 집행 잔액(10억 원) 발생 사유 감안 시 실적행률은 92.1%로 간주 - 가점 인정 자료 미제출
		1-2	점수 상황	- 각 사업별로 추진 계획 및 모니터링 실적 인정 - 기제출된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실적의 인정에 대해 평가위원 협의로 일괄 적용할 예정
		2-2	점수 상황	- 실적 인정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16	보건산업 육성 지원	1-1	점수 배정	- 집행률(96.3%) 인정
17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2-1	점수 배정	- 성과 지표의 적정성 소명 인정
18	보건산업 진흥	1-2	점수 상향	- 제시된 자료는 2017년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음
19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지원	1-2	점수 상향	- 추진 계획은 인정하나, 점검 관리 및 환류 실적은 불인정 - 기제출된 자료(2차)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검토를 거쳐 일괄적으로 점수 반영 결정
		2-2	점수 상향	- 공공기관 운영 성과는 사업의 우수성 불인정
20	한약약 세계화 및 홍보	1-1	점수 배정	- 평가 결과서의 작성 내용 수정 필요
		1-2	점수 상향	- 모니터링 자료 인정 가능하나, 환류 실적은 미흡
		2-1	점수 상향	- 평가 결과 오기 정정 필요
		2-2	점수 상향	- 제시된 사업 평가 보고서는 평가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보고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조사로 불인정
21	한약약 산업 지원	1-2	점수 상향	-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 사업의 계획을 추가 제출했으나 일부 사업 제출로 불인정
		2-1	점수 상향	- 성과 지표의 대표성은 불인정(성과 계획서에 제시된 성과 지표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임의로 삭제한 이유 확인 필요) - 한약 제제 제형 현대화 목표치 설정 소명 불인정
22	건강보험 지원 (증진기금)	1-2	점수 상향	- 추가 소명 자료 없으므로 불인정
		2-1	점수 상향	-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사업으로 실국고 지원율은 성과 지표로 적절 - 그러나 1차 평가위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점수 유보
		2-2	점수 상향	- 제시된 내용은 단순 실태조사이며, 해당 조사를 통해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음
23	건강보험 지원	1-2	점수 상향	- 추가 소명 자료 없으므로 불인정
		2-1	점수 상향	-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사업으로 실국고 지원율은 성과 지표로 적절
		2-2	점수 상향	- 제시된 내용은 단순 실태조사이며, 해당 조사를 통해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음
24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1-1	점수 배정	- 실행률 96.9% 인정
25	건강증진 조사 연구	1-1	점수 배정	- 집행 잔액이 적고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00% 집행으로 간주
		1-2	점수 상향	-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관리에 대해 추가 소명 자료는 인정 -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협의를 통해 일괄 적용 예정
		2-1	점수 상황	- 목표치 설정에 대한 소명 인정 가능
		2-2	점수 상황	- 성과목표의 달성 지표는 사업의 우수성 불인정
26	보건소 건강증진	1-1	점수 배정	- 미집행된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미제시
		2-1	점수 배정	- 성과 지표에 대한 소명은 불인정 - 산출 지표로 인한 부분 가점 1점 사항
27	만성질환 예방·관리	2-1	점수 상황	- 평가 계획서에 제출된 자료와 성과 계획서상의 가중치 상이에 대해 소명이 미제시
28	금연사업	1-2	점수 상황	- 국가 금연사업에 대해 기제출된 평가서(2차)의 사업 추진 실적 인정 가능
29	국가암관리 사업 지원	2-2	점수 상황	- 제시된 내용은 보조사업의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조사로 사업의 우수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위원 오기로 인한 수정
30	정신보건 시설 기능 보강	1-1	점수 상황	- 단위사업 실적행률 인정
		2-1	점수 상황	-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실적의 목표 설정의 어려움 인정 여부 결정 필요
		가점	점수 상황	- 공공후견제도 도입, 서울시의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을 복지부 이관 등 성과 제고 노력 인정 가능
31	의료인력 양성	2-1	점수 배정	- 대표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해도 사업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충족할 필요 있음
		2-2	점수 배정	- 보조사업 준치 평가 불인정
		가점	점수 상황	- 2017년 정부업무평가-일자리 창출 인정 가능
32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정책 지원	2-1	점수 배정	- 의료기관의 안전 기준 준수는 매우 중요하나, 의료기관 질 관리를 측정하는 데 제한적인 지표의 설정으로 불수용
		2-2	점수 배정	- 제시된 논문의 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돼 인정 가능
33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2-2	점수 배정	- 의료중재원의 내부 평가는 기관 성과 평가로 불인정
34	보건의료 기술 평가 연구	1-1	점수 상황	- 시스템 구축 사업비 일부, 연구·개발 운영비를 감안해도 실적행률은 98.9%로 기존 평가 적절
		1-2	점수 상황	-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마련은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
		2-2	점수 상황	-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기관 운영 관련 평가로 사업의 우수성 불인정
		가점	점수	- 법령 개정 사항 인정 가능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상향	- 2016년 기재부 우수 협업과제 불인정
35	소록도 병원 지원	1-2	점수 상향	-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서 사업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인정
		2-1	점수 상향	- 이 사업은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병원 지원, 환자 지원, R&D, 정보화로 구분됨 - 환자 지원 사업은 예산 대비 40.1%에 불과하므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6	질병관리 조사 연구	1-2	점수 상향	-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서 사업 추진 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재평가 필요
		2-2	점수 상향	- 기제출된 평가서(2차)의 사업 우수성 실적 인정 가능하나, 단위사업 예산의 13% 수준
37	회귀질환자 지원	1-2	점수 상향	-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 미작성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나, 별첨에 기재되어 있어 인정 가능
		2-1	점수 상향	-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 미작성된 내용이나 소명 사항 인정
38	아동 자립 지원	2-2	점수 배정	- 기제출된 평가서(2차)의 우수성 근거는 불인정(사업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립단 선정 심사) -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 평가 '감축' 결정으로 적용 필요
39	가정위탁 지원	1-1	점수 배정	- 소명 자료 제출 인정(집행률 91.4%)
40	아동 발달 지원 계좌	1-1	점수 배정	- 소명 자료 제출 인정(집행률 94.5%)
		2-1	점수 배정	- 소명 자료 불인정(성과 지표의 변경은 성과 계획서에서 작성) - 지표의 포괄성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소명 미비
		2-2	점수 배정	- 소명 자료 제출 인정 가능 -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인정
41	드림스타트 지원	1-1	점수 배정	- 소명을 위한 추가 근거 자료 미제시 -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월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 노력 인정(실집행 95% 이상)
		2-1	점수 배정	- 소명을 위한 추가 근거 없음 - 예산의 변동이 거의 없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이라는 점, - 이 자료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일반 아동(75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015년 이후 목표치(75점)를 이미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2-2	점수 배정	- 드림스타트 운영 점검은 간접 보조자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으로 불인정 - 효과성 연구는 성과 지표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인정 - 비교 집단과 정책의 성과가 대비되는 결과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현재 보고서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부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으나 효과성 분석은 전후 및 비교 집단과 비교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조사 대상 및 조사의 신뢰성 확보 부족
		가점	점수 배정	-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1-1에서 가점받은 사항이며, - 가점의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평가 지침 기재부)
42	저출산 대응	1-1	점수 배정	- 추가 근거 자료 제출은 없고 실집행 저조 등 원인만 기술 - 복지부, 각 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찾는 방법 등을 통한 발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인구정책	1-2	점수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1만 6천여 명) 노력은 인정 가능 - 추가 근거 자료 제출은 없고 - 기재출된 평가서(2차)에 미작성된 내용을 추가 제출 - 사업 주체의 사업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하나 사업 안내로 같음, 또한 실적 점검을 모니터링으로 제시하여 불인정
		2-1	점수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2배 증가한 데 비해 성과목표를 전년 대비 3% 증가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 귀 부서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국회 예산 심의 후 기재부가 최종 정리하는 단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43	어린이집 기능 보장	1-1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집행상의 차질은 인정하나,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재정 집행 관리 미대상 사업으로 평가에 포함하지 않음 - 매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예산이 불용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 - 예산 자료 수정에 따라 예산 88.8% 집행, 상반기 및 분기별 집행 준수로 인정 가능
		2-1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성과 지표 역시 2개를 구분하되 예산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구성할 필요 - 추경 편성으로 예산이 2배 증가하고 신축 135개소, 리모델링 225개소 계획했으나, 성과 계획서 수정은 이뤄지지 않음 - 성과 지표는 다소 미흡하나 성과목표치의 설정은 적정하고 달성률이 100%를 초과한 것은 인정
		2-2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실적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 파생된 성과(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정으로 '가점'으로 인정 가능
44	아동·청소년 참여, 인권증진 사업	1-1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축 기간에 따른 이월은 인정 가능하나, 이 경우 가점과 중복되므로 조정 필요
		1-2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아동총회의 결의문의 정책 반영 등 사후 조치 1건 인정 가능
		2-1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권리 인식도는 인정, 아동 관련 종사자 권리교육 불인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닌 드림스타트 종사자에 대한 권리교육은 제한적) - 지표의 대표성은 다소 미흡, 목표치는 적정
		2-2	점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두 조사 간 동일 표본에 홍보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해야 인정 가능) - 내부 평가는 사업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우수성 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아동 권리 인식도 조사는 성과 달성도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제외
45	노인 관련 기관 지원 사업	1-1	점수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실적행률 94.3% 인정
		2-1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성과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했을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점수 요구	
			배정	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경로당 지원 사업이 누락돼 있으므로 성과 지표가 다소 미흡
		2-2	점수 배정	- 귀 부서에서 제시한 사업은 20개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로 사업의 우수성을 검증했다고 볼 수 없음
46	노인돌봄 서비스	1-1	점수 배정	- 예산 실적행률 92.8% 인정
47	노인 일자리 지원	1-1	점수 배정	- 예산 실적행률 97.2% 인정
		1-2	점수 배정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자료 제출 - 기재출된 평가서(2차)에 미흡하게 제출한 후 대면 평가에서 작성한 자료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48	치매관리 지원 사업	1-1	점수 배정	- 예산의 90% 이상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이월 인정 - 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등 장기 사업 추진으로 이월(82%)
		1-2	점수 상향	- 기재출된 평가서(2차)에 미흡하게 제출한 후 대면 평가에서 작성한 자료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2-1	점수 배정	- 성과 지표 C의 가중치(0.3)에 대해 평가위원이 미흡하다고 판단 - 이 지표는 타 사업에서도 관리(0.5)되고 있어 가중치를 낮게 구성했다고 소명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표는 '치매검진증가율'로 동 사업의 '치매 환자 의료관리율'과 상이
		2-2	점수 상향	- 2017 대한민국 정책 평가의 우수성 인정(그 외 모두 불인정), - 기재출된 평가서(2차)에 미작성된 내용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가점	점수 상향	- 부 내 일자리 창출 우수 부서로 선정
49	장사시설 사업	1-1	점수 배정	- 실적행률 44.8% 인정
50	국민연금 공단 사옥 확보 사업	1-1	점수 상향	- 사옥 신축 및 매입, 본부 지방 이전 시 BF 본인증 업무 분담, 임대사업 조기 집행 추진 인정하나, - 주거비 지원 불인정
		2-1	점수 상향	- 성과 달성도 97.9% 인정
		2-2	점수 상향	- 전라북도 '건축문화상'과 '건축세계'는 사옥의 우수성 인정 사례로 불인정(ARCHITECTURE 기준) - 2017년도 임대 사옥 운영 실적 평가 전년 대비 매출액 15%, 영업이익 29% 증가 및 시장 공실률 대비 3.0% 낮은 공실률 유지 인정
51	국민연금 제도 운영 사업	1-2	점수 상향	- 기재출된 자료(2차)에 근거하여 인정하나, 추가 제출 자료는 평가서에 반영 필요
		2-2	점수 상향	- (외부 평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동아닷컴 등), 국민연금 정보화사업 국무총리 표창은 인정하나 가점 항목임. - (내부 평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업의 우수성 인정이 아닌 공단에 대한 경영 평가는 불인정 - 기재출된 평가서(2차)의 외부 우수성 인정 사례 3건 인정 필요
		가점	점수 상향	- 추납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성과관리 인정하나 가점 총 3점 초과하여 반영 불가

72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연번	사업명	이의신청·소명 자료		지원단 사전 검토 의견
		항목	접수 요구	
52	국민연금 복지사업	1-1	접수 상향	- 귀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정되나, 제출된 평가서(2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1-2	접수 배정	- 귀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정되나 기 제출된 평가서(2차) 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2-1	접수 상향	-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청풍리조트), 사업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성과 제고(1점), 산출 지표(1점) 인정
		2-2	접수 상향	- 귀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정되나 기제출된 평가서(2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제 4 장

재정사업 평가의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양적 조사 결과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4

재정사업 평가의 운영 실태 분석 <



제1절 양적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수행한 2017 회계연도 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와 평가 방식, 추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성과평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담당자(주무관 대상, 중복 제외 시 85명)를 대상으로 2018. 6. 18.~ 7. 20. 약 30일간 보건복지부 내부 인트라넷 및 이메일,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 중 장기 휴가 및 출장 등으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일부 담당자를 제외한 43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는 코딩 후 spss 20.0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설계

조사 문항의 경우 오영민 외(2017)의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등에서 실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문항 일부를 참고하여 총 17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평가 준비’, ‘평가 실행’, ‘자체평가 개선 방안’, ‘정부성과평가제도 비교’, ‘응답자 일반 사항’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4-1〉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구성 현황

항목	문항 수	문항	질문 수
평가 준비	3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4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3
		자체평가 준비 업무	6
평가 실행	4	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	7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5
		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	5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인식	5
개선 방안	4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13
		내실화를 위한 전제 조건	1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개선 필요 단계	1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와 비교	1
정부성과평가 비교	5	평가 업무 담당 경험	3
		성과평가 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4
		평가 준비 단계에 대한 인식	4
		평가 수행 체계 단계에 대한 인식	4
		평가 결과 단계에 대한 인식	4
응답자 일반 사항	1	성, 나이, 직급, 부서 재직 기간, 근무 기간, 성과 보고서 작성 참여, 평가 결과, 소속 부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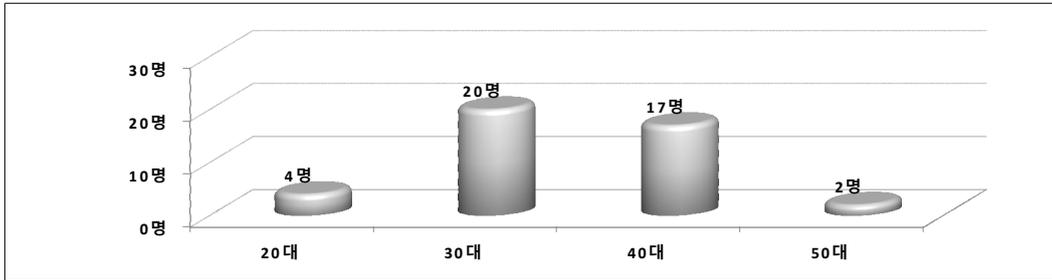
3. 조사 결과

가. 응답자 일반 사항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의 응답자는 총 44명이었다. 응답자의 일반 사항으로는 연령, 성별, 직급, 해당 부서 재직 기간, 보건복지부 근무 기간, 소속 부서와 응답자의 올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의 2017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작성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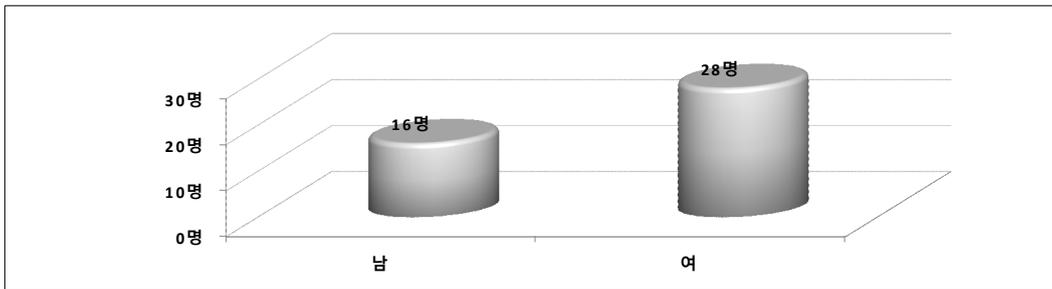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으며, 30대가 20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17명(39.5%), 20대 4명(9.3%), 50대 2명(4.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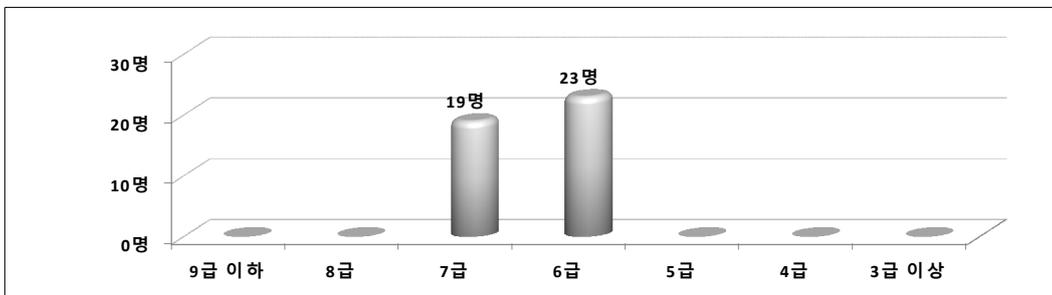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으며, 남자가 16명(36.4%), 여자가 28명(63.6%)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직급에 대해서는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총 42명이 응답하였으며, 6급 23명(54.8%), 7급 19명(45.2%)이었으며, 그 외 직급의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응답자의 직급



응답자가 해당 부서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는데 평균 23.72개월이었고, 응답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83.21개월이었다(표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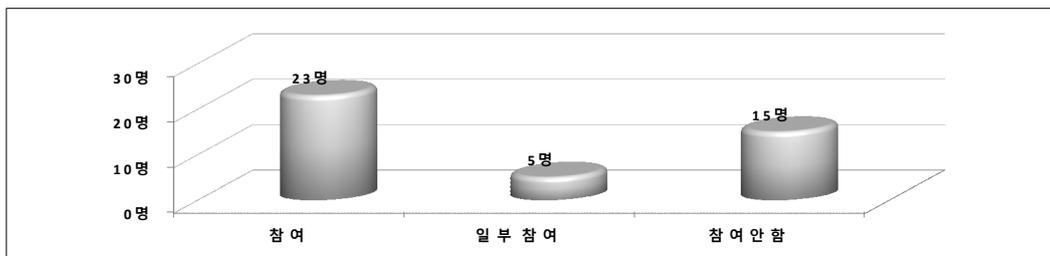
〈표 4-2〉 응답자의 재직 기간 및 근무 기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해당 부서에서 재직한 기간	43	23.72	38.55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기간	43	83.21	69.19

응답자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의 2017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 계획서 작성’과 ‘성과 보고서 작성’으로 구분하여 참여 정도를 세 가지(참여, 일부 참여, 참여 안 함)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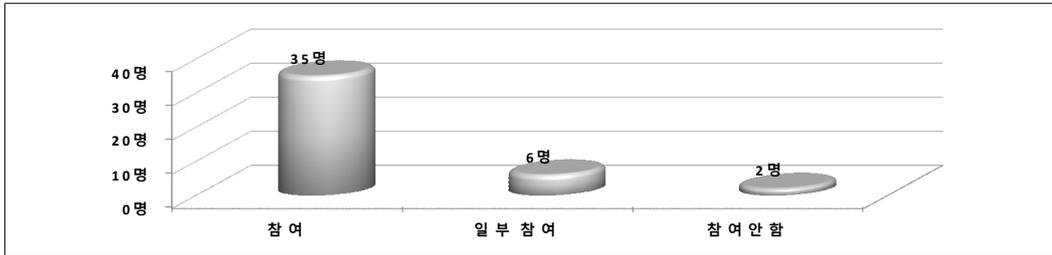
‘성과 계획서 작성’ 참여 정도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참여’ 23명(53.5%), ‘일부 참여’ 5명(11.6%), ‘참여 안 함’ 15명(34.9%)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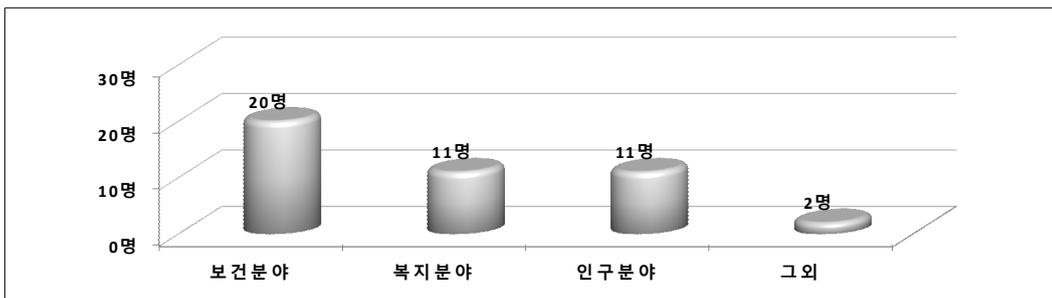
한편 ‘성과 보고서 작성’ 참여 정도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참여’ 35명(81.4%), ‘일부 참여’ 6명(14.0%), ‘참여 안 함’ 2명(4.7%)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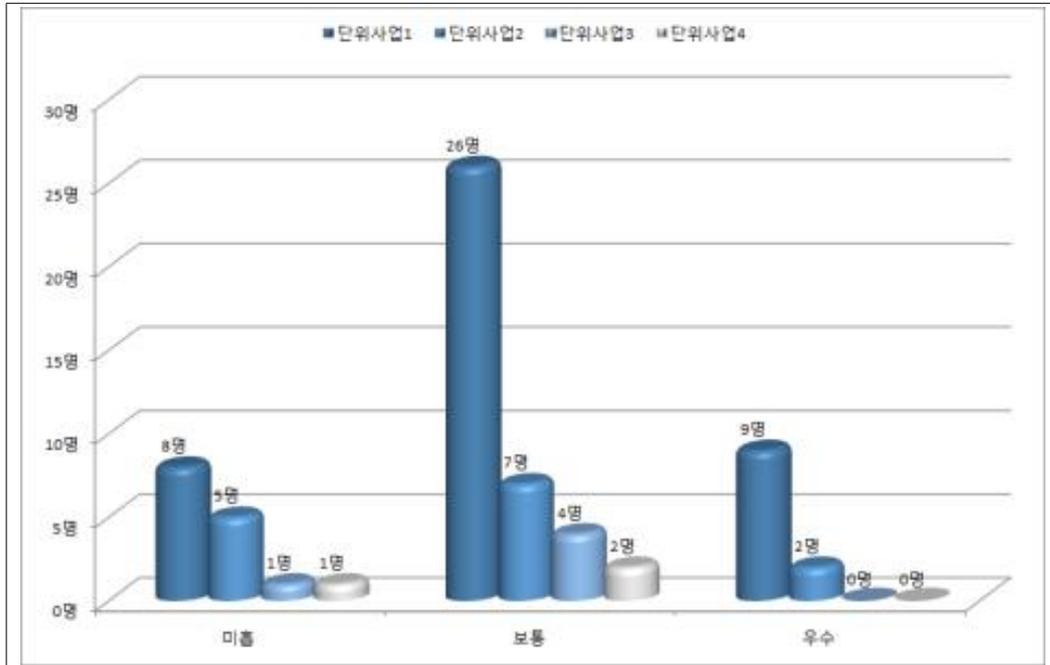
응답자의 소속 부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보건 분야’ 20명(45.5%), ‘복지 분야’ 11명(25.0%), ‘인구 분야’ 11명(25.0%), ‘그 외’ 2명(4.5%)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응답자의 소속 부서



응답자가 20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를 받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조사하였다. 단위사업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여러 사업의 평가를 받은 경우 각 사업의 평가 등급을 작성토록 하였다. 단위사업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7] 과 같다. 단위사업 1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미흡 8명(18.6%), 보통 26명(60.5%), 우수 9명(20.9%) 이었다. 단위사업 2의 경우 무응답 30명을 제외하고 총 14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미흡 5명(35.7%), 보통 7명(50.0%), 우수 2명(14.3%)이었다. 단위사업 3의 경우 무응답 39명을 제외하고 총 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미흡 1명(20.0%), 보통 4명(80.0%), 우수는 없었다. 단위사업 4의 경우 무응답 41명을 제외하고 총 3명이 응답하였으며 미흡 1명(33.3%), 보통 2명(66.7%), 우수는 없었다.

[그림 4-7] 응답자의 20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등급



나. 평가 준비

1)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의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3> 및 [그림 4-8] 과 같다.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해서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

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이다’ 15명(34.1%), ‘그렇다’ 27명(61.4%), ‘매우 그렇다’ 2명(4.5%)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전혀 없는 반면 담당하는 업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9명(65.9%)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항에 대해서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2명(4.5%), ‘보통이다’ 14명(31.8%), ‘그렇다’ 27명(61.4%),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명(4.5%)인 반면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8명(63.7%)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6명(13.6%), ‘보통이다’ 17명(38.6%), ‘그렇다’ 19명(43.2%),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5.9%)인 반면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0명(45.5%)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해서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5명(11.4%), ‘보통이다’ 11명(25.0%), ‘그렇다’ 25명(56.8%), ‘매우 그렇다’ 3명(6.8%)으로,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5명(11.4%)인 반면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8명(63.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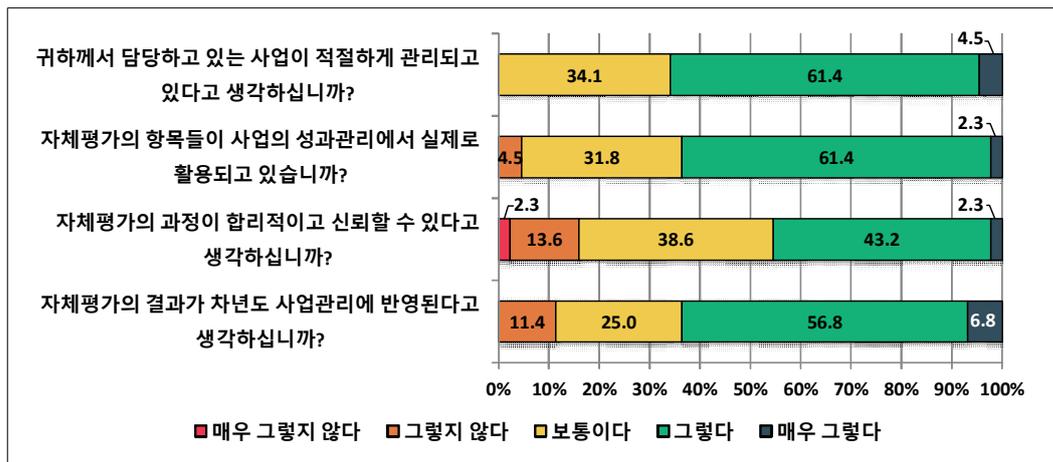
〈표 4-3〉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0.0%)	0 (0.0%)	15 (34.1%)	27 (61.4%)	2 (4.5%)	44 (100.0%)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0 (0.0%)	2 (4.5%)	14 (31.8%)	27 (61.4%)	1 (2.3%)	44 (100.0%)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3%)	6 (13.6%)	17 (38.6%)	19 (43.2%)	1 (2.3%)	44 (100.0%)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0.0%)	5 (11.4%)	11 (25.0%)	25 (56.8%)	3 (6.8%)	44 (100.0%)

[그림 4-8]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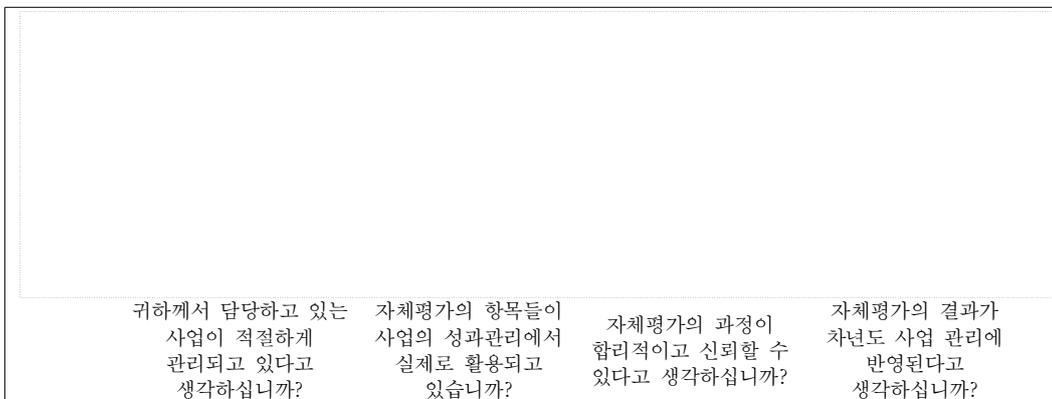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이 3.7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항이 3.61점,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이 3.59점,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이 3.3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4, 그림 4-9 참조).

〈표 4-4〉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	3.70	0.55
자체평가의 항목들이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44	3.61	0.62
자체평가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	3.30	0.82
자체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 관리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4	3.59	0.79

[그림 4-9]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2)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서 내 상급자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다만 ‘부서 내 상급자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항은 부서 내 상급자를 더 세분화하여 과장과 국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5〉 및 [그림 4-10] 과 같다.

‘부서 내 상급자(과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문

항에 대해서는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3명(6.8%), ‘보통이다’ 11명(25.0%), ‘그렇다’ 20명(45.5%), ‘매우 그렇다’ 10명(22.7%)으로, 부서 내 상급자인 과장이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3명(6.8%)인 반면 부서 내 상급자인 과장이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0명(68.2%)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서 내 상급자(국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4명(9.3%), ‘보통이다’ 14명(32.6%), ‘그렇다’ 18명(41.9%), ‘매우 그렇다’ 7명(16.3%)으로, 부서 내 상급자인 국장이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4명(9.3%)인 반면 부서 내 상급자인 국장이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5명(58.1%)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8명(18.2%), ‘보통이다’ 23명(52.3%), ‘그렇다’ 9명(20.5%), ‘매우 그렇다’ 3명(6.8%)으로,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9명(20.5%)인 반면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2명(27.3%)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3명(6.8%), ‘보통이다’ 19명(43.2%), ‘그렇다’ 18명(40.9%), ‘매우 그렇다’ 3명(6.8%)으로,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4명(9.1%)인 반면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1명(47.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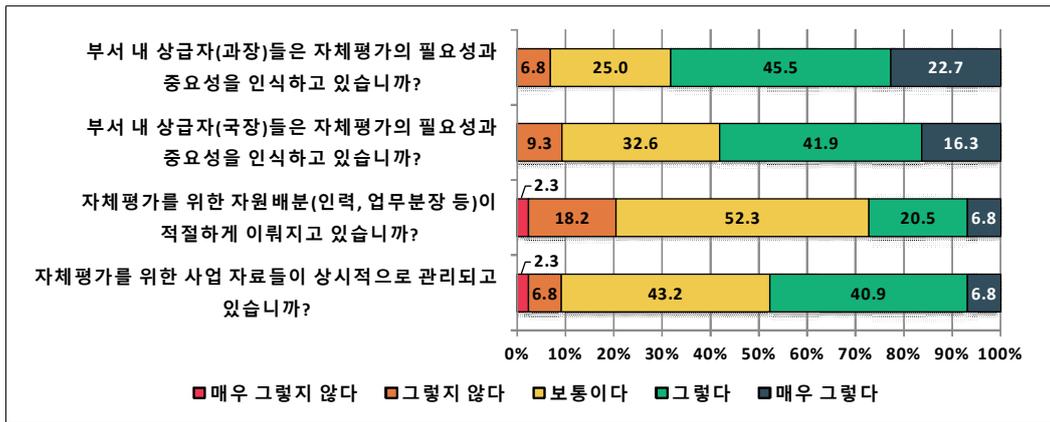
〈표 4-5〉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부서 내 상급자(과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0 (0.0%)	3 (6.8%)	11 (25.0%)	20 (45.5%)	10 (22.7%)	44 (100.0%)
부서 내 상급자(국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0 (0.0%)	4 (9.3%)	14 (32.6%)	18 (41.9%)	7 (16.3%)	43 (100.0%)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 (2.3%)	8 (18.2%)	23 (52.3%)	9 (20.5%)	3 (6.8%)	44 (100.0%)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1 (2.3%)	3 (6.8%)	19 (43.2%)	18 (40.9%)	3 (6.8%)	44 (100.0%)

[그림 4-10]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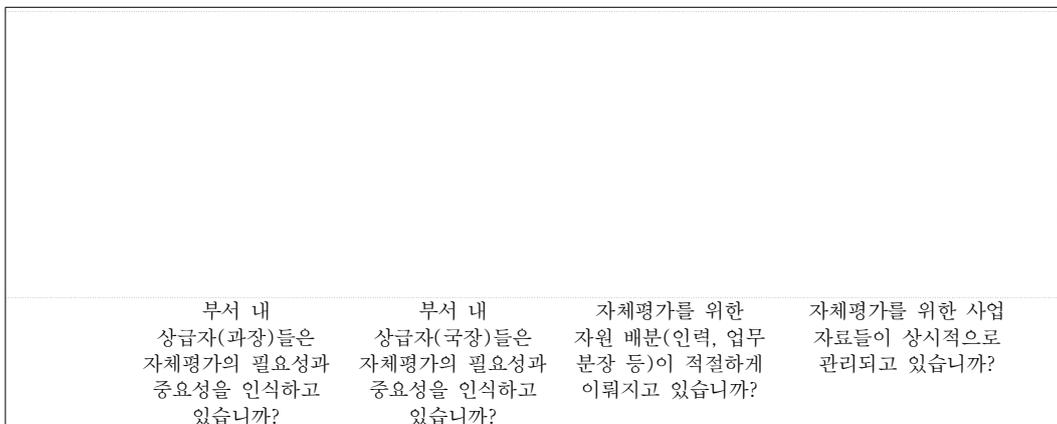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부서 내 상급자(과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문항이 3.8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서 내 상급자(국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문항이 3.65점,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항이 3.43점,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문항이 3.11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6, 그림 4-11 참조).

〈표 4-6〉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부서 내 상급자(과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44	3.84	0.86
부서 내 상급자(국장)들은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43	3.65	0.87
자체평가를 위한 자원 배분(인력, 업무 분장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44	3.11	0.87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44	3.43	0.82

[그림 4-11] ‘자체평가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자체평가 준비 업무

‘자체평가 준비 업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십니까?’, ‘자체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십니까?’,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한편 평가 자료 작성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평가 지표 작성 시 어려운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와 ‘평가 지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다중 응답)’ 등 2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응답자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4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7> 및 [그림 4-12] 와 같다.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십니까?’ 문항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3명(7.0%), ‘보통이다’ 9명(20.9%), ‘그렇다’ 26명(60.5%), ‘매우 그렇다’ 5명(11.6%)으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3명(7.0%)인 반면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1명(72.1%)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십니까?’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2명(4.7%), ‘보통이다’ 7명(16.3%), ‘그렇다’ 24명(55.8%), ‘매우 그렇다’ 10명(23.3%)으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4명(79.1%)인 반면 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명(4.7%)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9명(20.9%), ‘보통이다’ 19명(44.2%), ‘그렇다’ 13명(30.2%), ‘매우 그렇다’ 2명(4.7%)으로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9명(20.9%)인 반면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5명(34.9%)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4명(9.3%), ‘보통이다’ 15명(34.9%), ‘그렇다’ 23명(53.5%),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4명(9.3%)인 반면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4명(55.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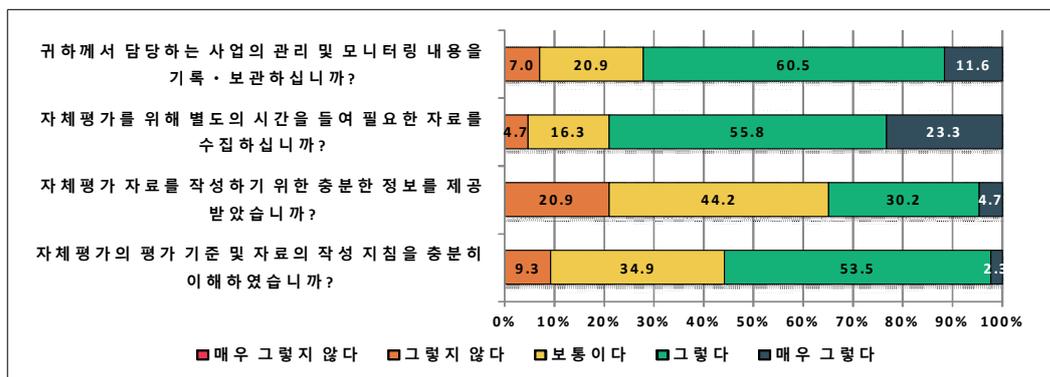
〈표 4-7〉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십니까?	0 (0.0%)	3 (7.0%)	9 (20.9%)	26 (60.5%)	5 (11.6%)	43 (100.0%)
자체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십니까?	0 (0.0%)	2 (4.7%)	7 (16.3%)	24 (55.8%)	10 (23.3%)	43 (100.0%)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0 (0.0%)	9 (20.9%)	19 (44.2%)	13 (30.2%)	2 (4.7%)	43 (100.0%)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0 (0.0%)	4 (9.3%)	15 (34.9%)	23 (53.5%)	1 (2.3%)	43 (100.0%)

[그림 4-12]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자체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십니까?’ 문항이 3.9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십니까?’ 문항이 3.77점,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문항이 3.49점,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문항이 3.19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8, 그림 4-13 참조).

〈표 4-8〉 ‘자체평가 준비 업무’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십니까?	43	3.77	0.75
자체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십니까?	43	3.98	0.77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까?	43	3.19	0.82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43	3.49	0.70

[그림 4-13] 자체평가 준비 업무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보관하십니까?	자체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십니까?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까?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	-------------------------------------	------------------------------------	---------------------------------------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시간이 걸리고, 평균 16.9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평가 자료 작성 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응답 결과

문항	응답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43	2.0	72.0	16.95	17.03

‘평가 지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다중 응답)’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 평가 지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사업 성과의 우수성’ 29명(56.9%),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정성’ 10명(23.3%), ‘성과 목표 달성도’ 6명(11.8%), ‘가점’ 4명(7.8%), ‘예산 관리의 적정성’과 ‘해당 없음’이 각

각 1명(2.0%)으로 나타났다.

〈표 4-10〉 ‘평가 지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문항 ¹⁾	응답 수	응답 비율 ²⁾	응답자 비율 ³⁾
예산 관리의 적정성	1	2.0%	2.3%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정성	10	19.6%	23.3%
성과목표 달성도	6	11.8%	14.0%
사업 성과의 우수성	29	56.9%	67.4%
가점	4	7.8%	9.3%
해당 없음	1	2.0%	2.3%
합계	51	100.0%	118.6%

주: 1) 중복 응답함.

2) (응답 수/중복 응답을 허용한 전체 응답 수) × 100

3) (응답 수/전체 응답자) × 100

다. 평가 실행

1)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는 평가 지표와 관련된 평가 지침, 평가 항목, 배점 등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지침을 충분하게 이해하였다’,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수는 적당하다’,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다’, ‘평가 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 등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가 있다’,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에 대해 우선 ‘있다’ 또는 ‘없다’를 물은 후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 평가 항목 지표를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4-11〉 및 [그림 4-14] 와 같다.

‘평가 지침을 충분하게 이해하였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4명(9.3%), ‘보통이다’ 18명(41.9%), ‘그렇다’ 20명(46.5%),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4명(9.3%)인 반면 평가 지침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1명(48.8%)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수는 적당하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6명(14.0%), ‘보통이다’ 16명(37.2%), ‘그렇다’ 19명(44.2%),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6.3%)인 반면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수가 적당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0명(46.5%)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7%), ‘그렇지 않다’ 6명(14.0%), ‘보통이다’ 23명(53.5%), ‘그렇다’ 11명(25.6%),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명(18.6%)인 반면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2명(27.9%)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6명(14.0%), ‘보통이다’ 24명(55.8%), ‘그렇다’ 12명(27.9%),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지표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6명(14.0%)인 반면 평가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3명(30.2%)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총 42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4%), ‘그렇지 않다’ 7명(16.7%), ‘보통이다’ 22명(52.4%), ‘그렇다’ 12명(28.6%),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

우는 없었으며,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명(19.0%)인 반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2명(28.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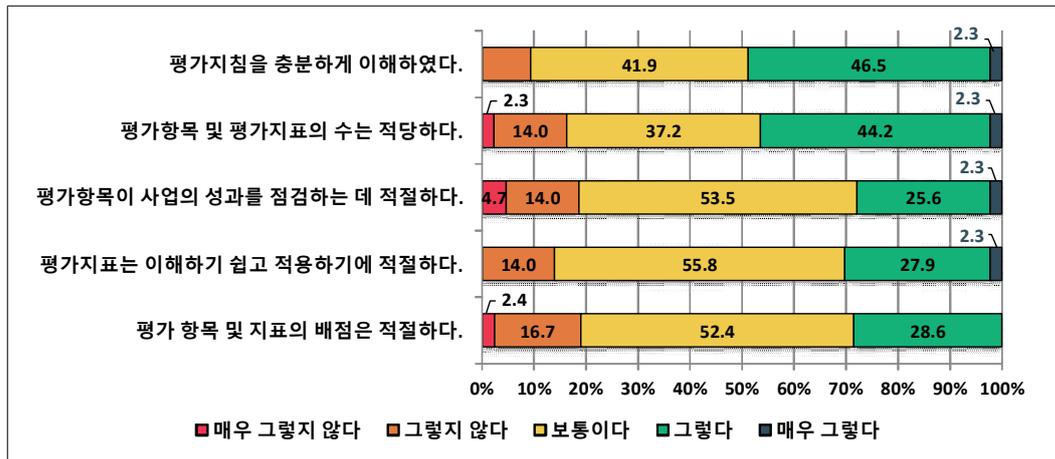
〈표 4-11〉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0 (0.0%)	4 (9.3%)	18 (41.9%)	20 (46.5%)	1 (2.3%)	43 (100.0%)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수는 적당하다.	1 (2.3%)	6 (14.0%)	16 (37.2%)	19 (44.2%)	1 (2.3%)	43 (100.0%)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데 적절하다.	2 (4.7%)	6 (14.0%)	23 (53.5%)	11 (25.6%)	1 (2.3%)	43 (100.0%)
평가 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0 (0.0%)	6 (14.0%)	24 (55.8%)	12 (27.9%)	1 (2.3%)	43 (100.0%)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	1 (2.4%)	7 (16.7%)	22 (52.4%)	12 (28.6%)	0 (0.0%)	42 (100.0%)

[그림 4-14]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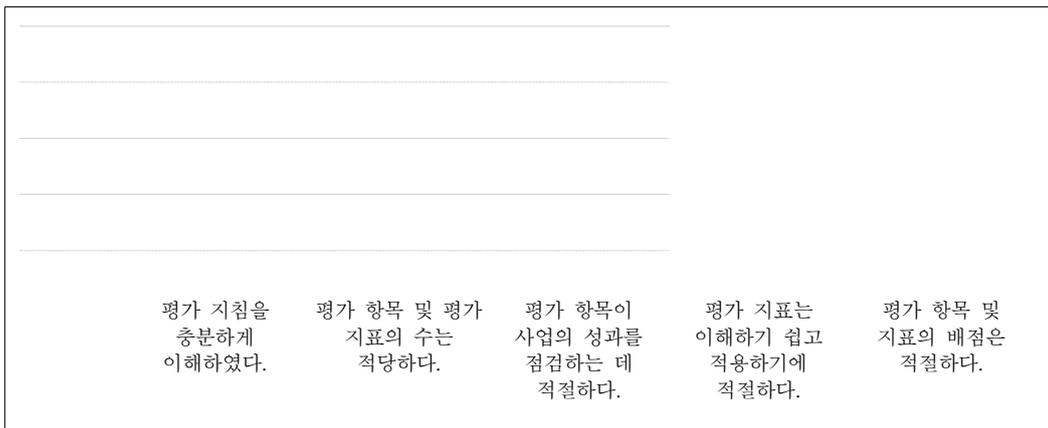
자체평가 준비 업무 관련 5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문항이 3.42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

의 수는 적당하다’ 문항이 3.30점, ‘평가 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문항이 3.19점,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다’와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 문항이 각각 3.07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12, 그림 4-15 참조).

〈표 4-12〉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43	3.42	0.70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의 수는 적당하다.	43	3.30	0.83
평가 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다.	43	3.07	0.83
평가 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43	3.19	0.70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	42	3.07	0.75

[그림 4-15] ‘평가 지표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가 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5명을 제외하고 총 39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있다’ 10명(25.6%), ‘없다’ 29명(74.4%)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 및 지표로는 사업 성과 우수성, 가점 항목, 내부 평가 실적, 분기별 집행 현황, 외부 평가 유무, 기타 등을 주관식으로 답변하였다(표 4-13 참조).

〈표 4-13〉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가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문항	있다	없다	합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가 있다	10명(25.6%)	29명(74.4%)	39명(100.0%)
☞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관식) 그렇게 생각하신 평가 항목 및 지표는 어떤 것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 사업 성과 우수성 - 사업 성과의 우수성(외부 평가에서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뭄) - 제3자 사업 성과 우수성 - 가점(사업 효율성) - 가점 항목이 사업 성과의 우수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내부 평가 실적 - 분기별 집행 현황 - 외부 평가 유무 - 대체로 평가 항목이 너무 많고 일부 중복되어 제출 자료도 중복됨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총 40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있다’ 13명(32.5%), ‘없다’ 27명(67.5%)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르겠음’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 성과의 우수 등 다양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답변하였다(표 4-14 참조).

〈표 4-14〉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문항	있다	없다	합계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	13명(32.5%)	27명(67.5%)	40명(100.0%)
☞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관식) 그렇게 생각하신 평가항목 및 지표는 어떤 것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 예산 집행률 산정 지표 - 복지의 특성상 예산 대비 효과 비교의 어려움, 인구 감소에 따른 활성화의 어려움 고려 필요 -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 사업 성과 우수성 - 외부 평가 실적(매년 외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 평가 용역사업 수행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며, 만일 꼭 필요하다면 3~4년 정도의 주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외부 평가 유무 - 1-1(예산 계획 집행성), 2-1(목표 달성도) - 예산 관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 - 사업 성과의 우수성 -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 인프라 지원 사업 특성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집행률 저조에 따른 평가 항목)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 개선 사항을 반영하더라도 당해 연도, 차년도에 성과가 나기 어려움 - 사업 관리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성격상 성과 지표 설정이 어려운 사업 - 모르겠음 		

2)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는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평가위원은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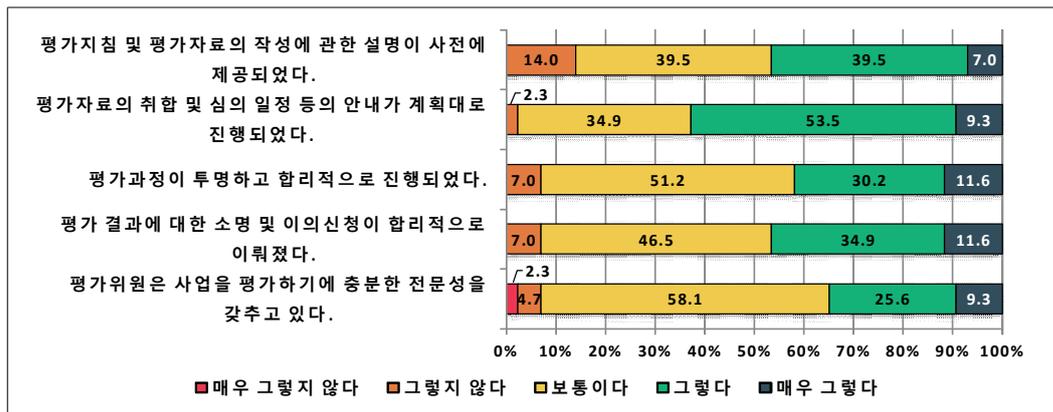
〈표 4-15〉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	0 (0.0%)	6 (14.0%)	17 (39.5%)	17 (39.5%)	3 (7.0%)	43 (100.0%)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0 (0.0%)	1 (2.3%)	15 (34.9%)	23 (53.5%)	4 (9.3%)	43 (100.0%)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0 (0.0%)	3 (7.0%)	22 (51.2%)	13 (30.2%)	5 (11.6%)	43 (100.0%)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0 (0.0%)	3 (7.0%)	20 (46.5%)	15 (34.9%)	5 (11.6%)	43 (100.0%)
평가위원은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 (2.3%)	2 (4.7%)	25 (58.1%)	11 (25.6%)	4 (9.3%)	43 (100.0%)

[그림 4-16]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6명(14.0%), ‘보통이다’ 17명(39.5%), ‘그렇다’ 17명(39.5%), ‘매우 그렇다’ 3명(7.0%)으로,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6명(14.0%)인 반면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0명(46.5%)으로 나타났다.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

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1명(2.3%), ‘보통이다’ 15명(34.9%), ‘그렇다’ 23명(53.5%), ‘매우 그렇다’ 4명(9.3%)으로,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명(2.3%)인 반면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7명(62.8%)으로 나타났다.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3명(7.0%), ‘보통이다’ 22명(51.2%), ‘그렇다’ 13명(30.2%), ‘매우 그렇다’ 5명(11.6%)으로,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3명(7.0%)인 반면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8명(41.9%)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3명(7.0%), ‘보통이다’ 20명(46.5%), ‘그렇다’ 15명(34.9%), ‘매우 그렇다’ 5명(11.6%)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3명(7.0%)인 반면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0명(46.5%)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은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2명(4.7%), ‘보통이다’ 25명(58.1%), ‘그렇다’ 11명(25.6%), ‘매우 그렇다’ 4명(9.3%)으로, 평가위원이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3명(7.0%)인 반면 평가위원이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5명(34.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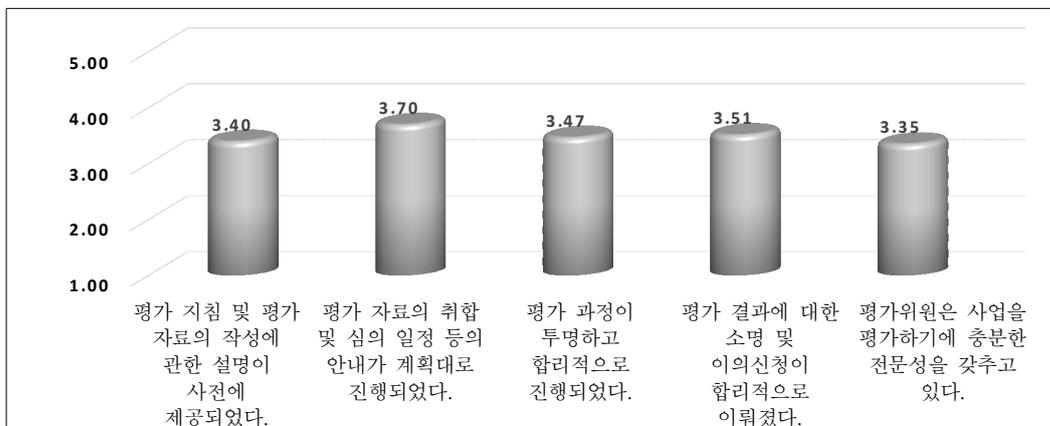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5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문항이 3.7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문항이 3.51점,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문항이 3.47점,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 문항이 3.40점, ‘평가위원은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문항이 3.35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16, 그림 4-17 참조).

〈표 4-16〉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 지침 및 평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	43	3.40	0.82
평가 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43	3.70	0.67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43	3.47	0.80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43	3.51	0.80
평가위원은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43	3.35	0.81

[그림 4-17] ‘평가 과정 및 거버넌스’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는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충실하다’,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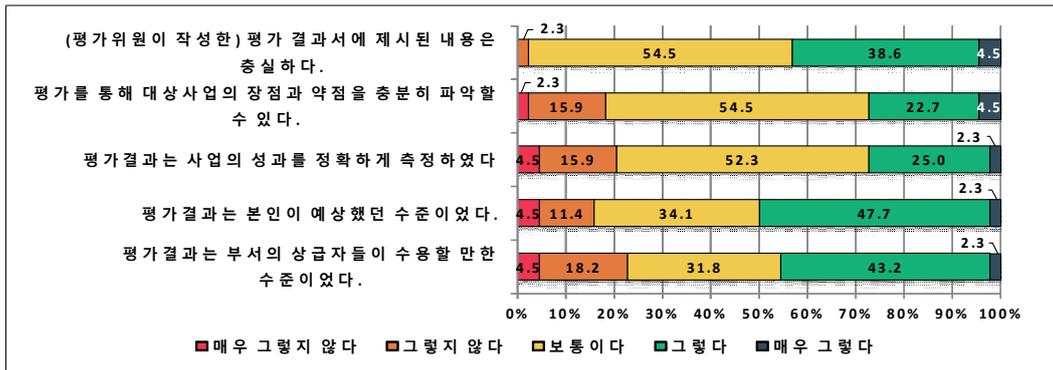
〈표 4-17〉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충실하다.	0 (0.0%)	1 (2.3%)	24 (54.5%)	17 (38.6%)	2 (4.5%)	44 (100.0%)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1 (2.3%)	7 (15.9%)	24 (54.5%)	10 (22.7%)	2 (4.5%)	44 (100.0%)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2 (4.5%)	7 (15.9%)	23 (52.3%)	11 (25.0%)	1 (2.3%)	44 (100.0%)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2 (4.5%)	5 (11.4%)	15 (34.1%)	21 (47.7%)	1 (2.3%)	44 (100.0%)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2 (4.5%)	8 (18.2%)	14 (31.8%)	19 (43.2%)	1 (2.3%)	44 (100.0%)

[그림 4-18]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충실하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1명(2.3%), ‘보통이다’ 24명(54.5%), ‘그렇다’ 17명(38.6%), ‘매우 그렇다’ 2명(4.5%)으로,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하다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명(2.3%)인 반면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9명(43.2%)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7명(15.9%), ‘보통이다’ 24명(54.5%), ‘그렇다’ 10명(22.7%), ‘매우 그렇다’ 2명(4.5%)으

로,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명(18.2%)인 반면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2명(27.3%)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5%), ‘그렇지 않다’ 7명(15.9%), ‘보통이다’ 23명(52.3%), ‘그렇다’ 11명(25.0%),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9명(20.5%)인 반면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2명(27.3%)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5%), ‘그렇지 않다’ 5명(11.4%), ‘보통이다’ 15명(34.1%), ‘그렇다’ 21명(47.7%),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5.9%)인 반면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2명(50.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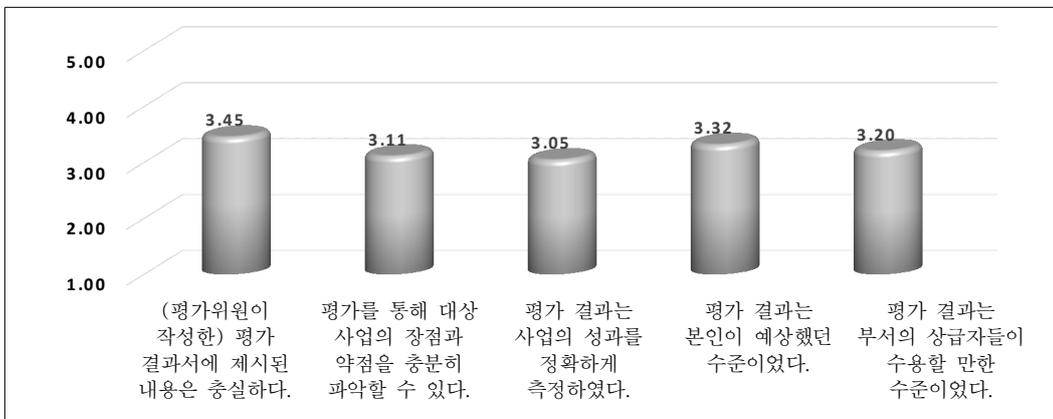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5%), ‘그렇지 않다’ 8명(18.2%), ‘보통이다’ 14명(31.8%), ‘그렇다’ 19명(43.2%),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0명(22.7%)인 반면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0명(45.5%)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에 대한 5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충실하다’ 문항이 3.4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문항이 3.32점,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문항이 3.20점,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문항이 3.11점,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문항이 3.05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18, 그림 4-19 참조).

〈표 4-18〉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충실하다.	44	3.45	0.63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44	3.11	0.81
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44	3.05	0.83
평가 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44	3.32	0.88
평가 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44	3.20	0.93

[그림 4-19] ‘평가 결과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4)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는 부처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평가 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 ‘평가 결과는 개인의 인사 평가에 반영되었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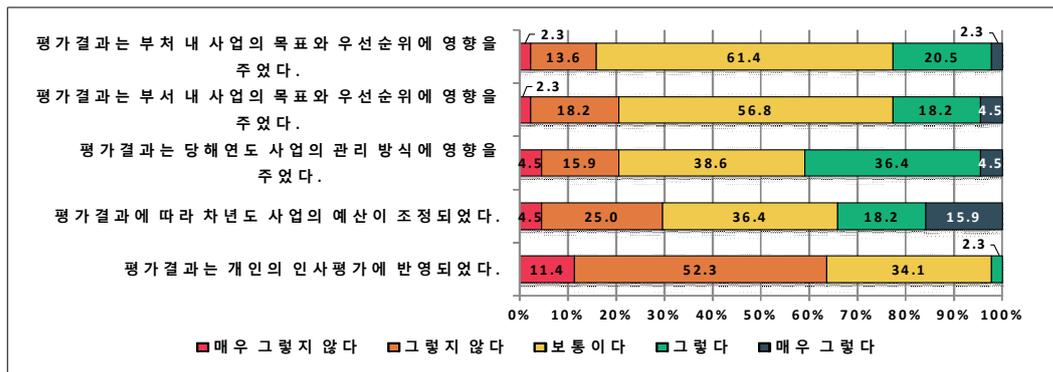
〈표 4-19〉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 결과는 부처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1 (2.3%)	6 (13.6%)	27 (61.4%)	9 (20.5%)	1 (2.3%)	44 (100.0%)
평가 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1 (2.3%)	8 (18.2%)	25 (56.8%)	8 (18.2%)	2 (4.5%)	44 (100.0%)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2 (4.5%)	7 (15.9%)	17 (38.6%)	16 (36.4%)	2 (4.5%)	44 (100.0%)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	2 (4.5%)	11 (25.0%)	16 (36.4%)	8 (18.2%)	7 (15.9%)	44 (100.0%)
평가 결과는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	5 (11.4%)	23 (52.3%)	15 (34.1%)	1 (2.3%)	0 (0.0%)	44 (100.0%)

[그림 4-20]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평가 결과는 부처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6명(13.6%), ‘보통이다’ 27명(61.4%), ‘그렇다’ 9명(20.5%), ‘매우 그렇다’ 1명(2.3%)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부처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5.9%)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0명(22.7%)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8명

(18.2%), ‘보통이다’ 25명(56.8%), ‘그렇다’ 8명(18.2%), ‘매우 그렇다’ 2명(4.5%)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9명(20.5%)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0명(22.7%)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5%), ‘그렇지 않다’ 7명(15.9%), ‘보통이다’ 17명(38.6%), ‘그렇다’ 16명(36.4%), ‘매우 그렇다’ 2명(4.5%)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당해 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9명(20.5%)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8명(40.9%)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5%), ‘그렇지 않다’ 11명(25.0%), ‘보통이다’ 16명(36.4%), ‘그렇다’ 8명(18.2%), ‘매우 그렇다’ 7명(15.9%)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3명(29.5%)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5명(34.1%)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5명(11.4%), ‘그렇지 않다’ 23명(52.3%), ‘보통이다’ 15명(34.1%), ‘그렇다’ 1명(2.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8명(63.6%)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명(2.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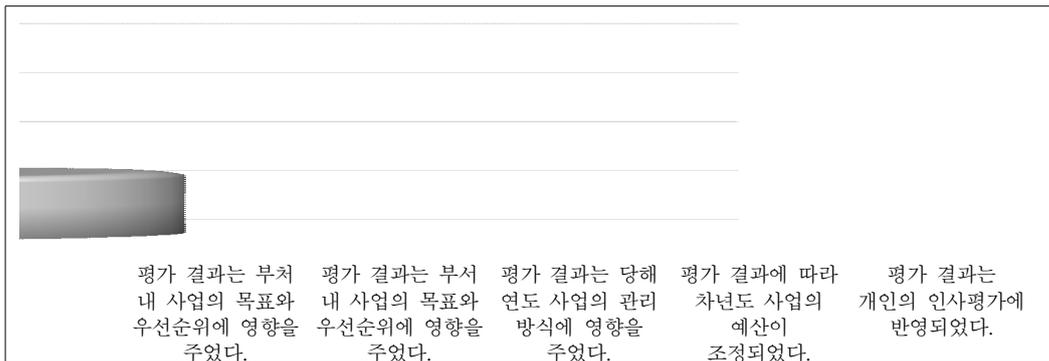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5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문항이 3.2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 문항이 3.16점, ‘평가 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문항이 3.07점, ‘평가 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문항이 3.05점이었으며, ‘평

가 결과는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 문항은 평균(3.0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27점으로 평가되었다(표 4-20, 그림 4-21 참조).

〈표 4-20〉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 결과는 부처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44	3.07	0.73
평가 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44	3.05	0.81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44	3.20	0.93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	44	3.16	1.12
평가 결과는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	44	2.27	0.69

[그림 4-21] ‘평가 결과의 활용 관련 동의 정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라. 자체평가 개선 방안

1)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관련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평가 지표, 평가체계, 평가 결과 환류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가) 평가 지표 부문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평가 지표 부문은 ‘평가 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평가 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 ‘평가 지표의 수

를 줄여야 한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3개 문항과 함께 그 외 평가 지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주관식 문항 1개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평가 지표 부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1> 및 [그림 4-22] 와 같다.

'평가 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2명(4.5%), '보통이다' 9명(20.5%), '그렇다' 25명(56.8%), '매우 그렇다' 8명(18.2%)으로, 평가 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명(4.5%)인 반면 동의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3명(75.0%)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4명(9.1%), '보통이다' 12명(27.3%), '그렇다' 21명(47.7%), '매우 그렇다' 7명(15.9%)으로, 평가 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4명(9.1%)인 반면 동의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8명(63.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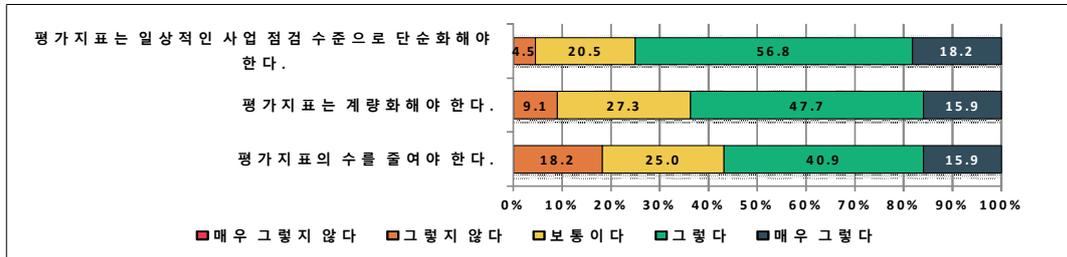
'평가 지표의 수를 줄여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8명(18.2%), '보통이다' 11명(25.0%), '그렇다' 18명(40.9%), '매우 그렇다' 7명(15.9%)으로 평가 지표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명(18.2%)인 반면 동의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5명(56.8%)으로 나타났다.

그 외 평가 지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총 6명이 의견을 기재하였다.

〈표 4-21〉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 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0 (0.0%)	2 (4.5%)	9 (20.5%)	25 (56.8%)	8 (18.2%)	44 (100.0%)
평가 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	0 (0.0%)	4 (9.1%)	12 (27.3%)	21 (47.7%)	7 (15.9%)	44 (100.0%)
평가 지표의 수를 줄여야 한다.	0 (0.0%)	8 (18.2%)	11 (25.0%)	18 (40.9%)	7 (15.9%)	44 (100.0%)
(주관식) 그 외 평가 지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공통적인 평가 지표로 배점 기준 명확화 -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점수의 비중이 너무 큼 -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많아 정책 대상자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인지,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게 일인지 혼란스러움 - 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 설계 필요(사업 효율성, 성과 지표 평가 등) - 평가 지표 개발 시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분리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예산 집행 관련 지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별 평가 - 사업 성격상 성과 지표 측량이나 설정이 어려운 사업은 정성적 평가도구 개발 필요 					

[그림 4-22]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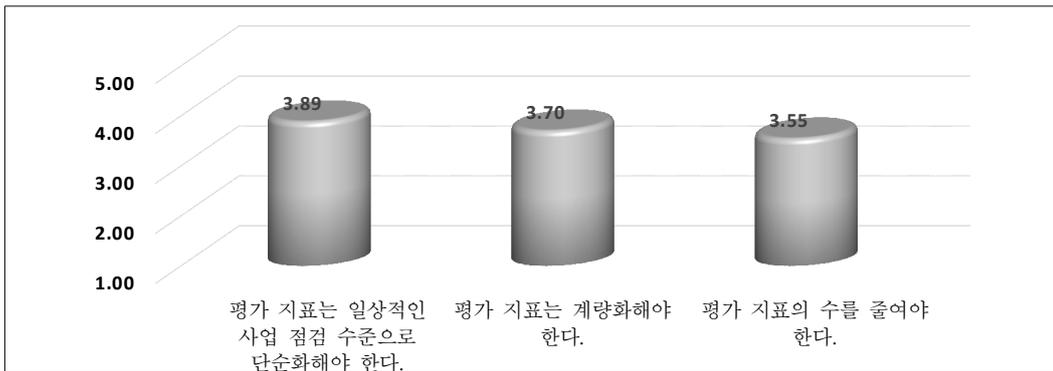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 중 평가 지표 부문의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문항이 3.8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 문항이 3.70점, ‘평가 지표의 수를 줄여야 한다’ 문항이 3.55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22, 그림 4-23 참조).

〈표 4-22〉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 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44	3.89	0.75
평가 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	44	3.70	0.85
평가 지표의 수를 줄여야 한다.	44	3.55	0.98

[그림 4-23]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관련 개선 방안’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나) 평가체계 부문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평가체계 부문은 ‘자체평가의 지표 및 평가 자료 작성 지침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자체평가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등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4개 문항과 함께 그 외 평가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주관식 문항 1개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평가체계 부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3〉 및 [그림 4-24] 와 같다.

‘자체평가의 지표 및 평가 자료 작성 지침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문항의 경우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이다’ 3명(6.8%), ‘그렇다’ 36명(81.8%), ‘매우 그렇다’ 5명(11.4%)으로,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없는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1명(93.2%)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7명(16.3%), ‘보통이다’ 12명(27.9%), ‘그렇다’ 22명(51.2%), ‘매우 그렇다’ 2명(4.7%)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6.3%)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4명(55.9%)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2명(4.9%), ‘보통이다’ 6명(14.6%), ‘그렇다’ 26명(63.4%), ‘매우 그렇다’ 7명(17.1%)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명(4.9%)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3명(80.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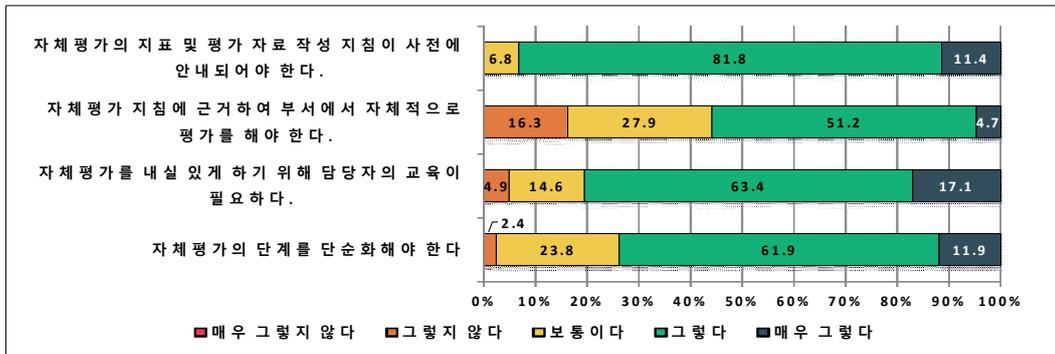
‘자체평가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1명(2.4%), ‘보통이다’ 10명(23.8%), ‘그렇다’ 26명(61.9%), ‘매우 그렇다’ 5명(11.9%)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명(2.4%)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1명(73.8%)으로 나타났다.

그 외 평가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총 4명이 의견을 기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3> 과 같다.

〈표 4-23〉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자체평가의 지표 및 평가 자료 작성 지침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0 (0.0%)	0 (0.0%)	3 (6.8%)	36 (81.8%)	5 (11.4%)	44 (100.0%)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0 (0.0%)	7 (16.3%)	12 (27.9%)	22 (51.2%)	2 (4.7%)	43 (100.0%)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0 (0.0%)	2 (4.9%)	6 (14.6%)	26 (63.4%)	7 (17.1%)	41 (100.0%)
자체평가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0 (0.0%)	1 (2.4%)	10 (23.8%)	26 (61.9%)	5 (11.9%)	42 (100.0%)
(주관식) 그 외 평가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에 평가 등이 너무 많음.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성과 보고서 작성 등 세부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담당자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있음. 평가 목적과 법령에 따른 평가 의무 등이 있겠으나 평가를 통일했으면 함. -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1차 평가 및 2차 평가 시 검토 기준의 일관성 필요. - 기관 자체 부서 평가 사항을 내부 평가에 반영하였으면 좋겠음. 왜냐하면 자체평가 방식이 여러 가지이나 중복, 필요 이상의 행정 낭비를 감소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업무가 실제 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함. 					

[그림 4-24]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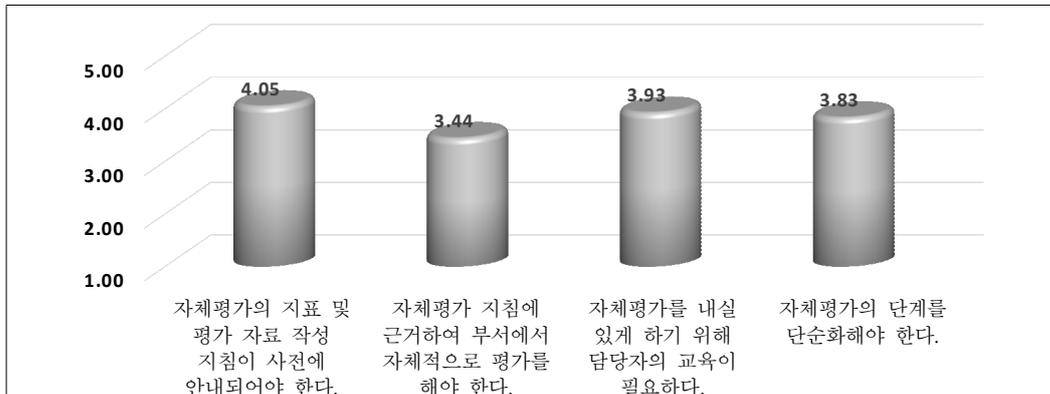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 중 평가체계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자체평가의 지표 및 평가 자료 작성 지침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문항이 4.0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문항이 3.93점, ‘자체평가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문항이 3.83점,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부서

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문항이 3.4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24, 그림 4-25 참조).

〈표 4-24〉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자체평가의 지표 및 평가 자료 작성 지침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44	4.05	0.43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43	3.44	0.83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41	3.93	0.72
자체평가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42	3.83	0.66

[그림 4-25]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체계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다) 평가 결과 환류 부문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 환류 부문은 '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3개 문항과 함께 그 외 평가 결과의 환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주관식 문항 1개 등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5〉 및 [그림 4-26] 와 같다.

‘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6명(13.6%), ‘그렇지 않다’ 21명(47.7%), ‘보통이다’ 11명(25.0%), ‘그렇다’ 6명(13.6%)이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7명(61.4%)인 반면 동의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6명(13.6%)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5%), ‘그렇지 않다’ 12명(27.3%), ‘보통이다’ 21명(47.7%), ‘그렇다’ 9명(20.5%)이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4명(31.8%)인 반면 동의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9명(20.5%)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없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3%), ‘그렇지 않다’ 13명(29.5%), ‘보통이다’ 20명(45.5%), ‘그렇다’ 10명(22.7%)이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4명(31.8%)인 반면 동의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0명(22.7%)으로 나타났다.

그 외 평가 결과의 환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총 3명이 의견을 기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5>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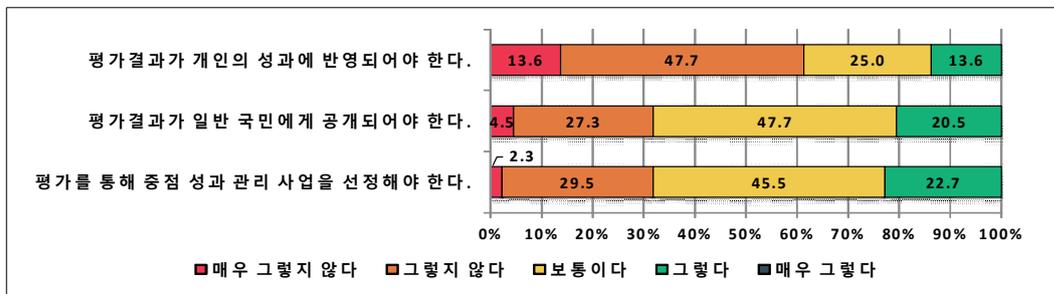
〈표 4-25〉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6 (13.6%)	21 (47.7%)	11 (25.0%)	6 (13.6%)	0 (0.0%)	44 (100.0%)
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4.5%)	12 (27.3%)	21 (47.7%)	9 (20.5%)	0 (0.0%)	44 (100.0%)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1 (2.3%)	13 (29.5%)	20 (45.5%)	10 (22.7%)	0 (0.0%)	44 (100.0%)
(주관식) 그 외 평가 결과의 환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가 부처 내의 중점 사업 관리 대상 고려 시 반영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개인의 성과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이 단위사업 기준인데 그것을 개인 성과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 평가 결과 미흡 시 차년도 예산이 10%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환류 계획을 수립하나, 그것과 무관하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 본부 재정에서 기재부와 협조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기간에 비해 담당자의 업무 담당 기간이 짧고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점과 사업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과를 개인 성과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림 4-26〉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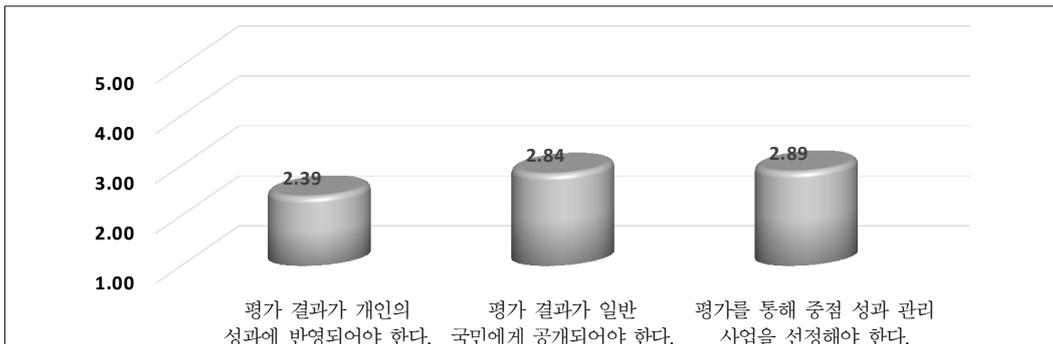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 중 평가 결과의 환류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문항이 2.8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문항이 2.84점, ‘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항이 2.39점 순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평균(3.0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4-26, 그림 4-27 참조).

〈표 4-26〉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 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44	2.39	0.89
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44	2.84	0.81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44	2.89	0.78

[그림 4-27]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 마련 중 평가 지표 부문 개선 방안’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2)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① 평가 지침의 구체화, ②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 ③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인력, ④ 평가 자료의 작성 시간, ⑤ 평가에 대한 상급자 인식 변화, ⑥ 평가에 대한 담당자 인식 변화, ⑦ 인센티브(인사고과 등 반영), ⑧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 증대 등 8개 항목을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이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에 대해 총 4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평가 지침의 구체화’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 8명(18.2%),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인력’과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 증대’가 각각 5명(11.4%), ‘평가 자료의 작성 시간’이 4명(9.1%), ‘평가에 대한 상급자 인식 변화’와 ‘평가에 대한 담당자 인식 변화’가 각각 2명(4.5%), ‘인센티브(인사고과 등 반영)’가 1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7〉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 응답 결과

문항	응답 수(명)	응답률(%)
평가 지침의 구체화	17	38.6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	8	18.2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인력	5	11.4
평가 자료의 작성 시간	4	9.1
평가에 대한 상급자 인식 변화	2	4.5
평가에 대한 담당자 인식 변화	2	4.5
인센티브(인사고과 등 반영)	1	2.3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 증대	5	11.4
합계	44	100.0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순위에 대해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평가 자료의 작성 시간’이 9명(20.9%), ‘평가 지침의 구체화’와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이 각각 7명(16.3%), ‘평가에 대한 상급자 인식 변화’와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 증대’가 각각 6명(14.0%),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인력’ 4명(9.3%), ‘평가에 대한 담당자 인식 변화’ 3명(7.0%), ‘인센티브(인사고과 등 반영)’가 1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2순위)’ 응답 결과

문항	응답 수(명)	응답률(%)
평가 지침의 구체화	7	16.3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	7	16.3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인력	4	9.3
평가 자료의 작성 시간	9	20.9
평가에 대한 상급자 인식 변화	6	14.0
평가에 대한 담당자 인식 변화	3	7.0
인센티브(인사고과 등 반영)	1	2.3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 증대	6	14.0
합계	43 ^{주)}	100.0

주: 무응답 1명 제외.

3)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① 평가 대상 사업 및 분과 선정, ② 평가 지표 개발, ③ 평가 지침 마련, ④ 평가 자료 작성, ⑤ 1차 서면 평가 실시, ⑥ 1차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 ⑦ 대면 평가 실시, ⑧ 대면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 ⑨ 종합 평가, ⑩ 평가 결과 송부, ⑪ 환류 계획 작성 등 11개 단계를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대해 응답자에게 중복 선택을 허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다중 응답)’에 대해서는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로는 ‘평가 대상 사업 및 분과 선정’과 ‘평가 지표 개발’이 각각 13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가 지침 마련’이 각각 12명(29.3%), ‘평가 자료 작성’과 ‘1차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이 각각 9명(22.0%), ‘대면 평가 실시’와 ‘대면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이 각각 8명(19.5%), ‘환류 계획 작성’이 7명(17.1%), ‘1차 서면 평가 실시’가 5명(12.2%), ‘평가 결과 송부’가 3명(7.3%), ‘종합 평가’가 1명(2.4%) 순으로 나타났다(표 4-29 참조).

〈표 4-29〉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다중 응답)’ 응답 결과

문항 ¹⁾	응답 수	응답 비율 ²⁾	응답자 비율 ³⁾
① 평가 대상 사업 및 분과 선정	13	14.8%	31.7%
② 평가 지표 개발	13	14.8%	31.7%
③ 평가 지침 마련	12	13.6%	29.3%
④ 평가 자료 작성	9	10.2%	22.0%
⑤ 1차 서면 평가 실시	5	5.7%	12.2%
⑥ 1차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	9	10.2%	22.0%
⑦ 대면 평가 실시	8	9.1%	19.5%
⑧ 대면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	8	9.1%	19.5%
⑨ 종합 평가	1	1.1%	2.4%
⑩ 평가 결과 송부	3	3.4%	7.3%
⑪ 환류 계획 작성	7	8.0%	17.1%
합계	88	100.0%	214.6%

주: 1) 중복 응답함.

2) (응답 수/중복 응답을 허용한 전체 응답 수) × 100

3) (응답 수/전체 응답자) × 100

4)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과 관련하여 ① 자료 작성 편리, ② 평가 업무 부담 완화, ③ 평가 지표 단순화, ④ 평가 방법 체계화, ⑤ 평가 절차 합리성, ⑥ 평가위원 전문성, ⑦ 평가 결과 신뢰성, ⑧ 부서 의견 반영, ⑨ 평가 결과의 활용 등 9개 단계를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대해 응

답자에게 중복 선택을 허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다중 응답)’ 문항은 무응답 11명을 제외하고 총 3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으로는 ‘부서 의견 반영’이 10명(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가 방법 체계화’와 ‘평가 절차 합리성’이 각각 9명(27.3%), ‘평가 업무 부담 완화’가 6명(18.2%), ‘평가 지표 단순화’가 5명(15.2%), ‘평가 결과 신뢰성’이 4명(12.1%), ‘평가 결과의 활용’이 3명(9.1%), ‘자료 작성 편리’와 ‘평가위원 전문성’이 각각 2명(6.1%) 순으로 나타났다(표 4-30 참조).

〈표 4-30〉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다중 응답)’ 응답 결과

문항 ¹⁾	응답 수	응답 비율 ²⁾	응답자 비율 ³⁾
① 자료 작성 편리	2	4.0%	6.1%
② 평가 업무 부담 완화	6	12.0%	18.2%
③ 평가 지표 단순화	5	10.0%	15.2%
④ 평가 방법 체계화	9	18.0%	27.3%
⑤ 평가 절차 합리성	9	18.0%	27.3%
⑥ 평가위원 전문성	2	4.0%	6.1%
⑦ 평가 결과 신뢰성	4	8.0%	12.1%
⑧ 부서 의견 반영	10	20.0%	30.3%
⑨ 평가 결과의 활용	3	6.0%	9.1%
합계	50	100.0%	151.5%

주: 1) 중복 응답함.

2) (응답 수/중복 응답을 허용한 전체 응답 수) × 100

3) (응답 수/전체 응답자) × 100

마. 정부성과평가제도의 비교

1) 응답자가 수행한 평가 관련

응답자들이 담당하는 사업의 평가 중복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응답자가 수행한 평가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① 일반재정 분과, ② 정보화 분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②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③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④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정 평가, 해당 사항 없음),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정부업무평가, 그 외 타 부처 소관 법정 평가) 등 3개 부문 8개 평가에 대해 중복 선택을 허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재정사업 평가의 경우 무응답 16명을 제외하고 총 28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① 일반재정 분과’ 25명(89.3%), ‘② 정보화 분과’ 5명(17.9%)으로 나타났다.

〈표 4-31〉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재정사업 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구분 ¹⁾	응답 수	응답 비율 ²⁾	응답자 비율 ³⁾
① 일반재정 분과	25	83.3%	89.3%
② 정보화 분과	5	16.7%	17.9%
합계	30	100.0%	107.4%

주: 1) 중복 응답함.

2) (응답 수/중복 응답을 허용한 전체 응답 수) × 100

3) (응답 수/전체 응답자) × 100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의 경우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총 40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9명(22.5%), ‘②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10명(25.0%), ‘③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5명(12.5%), ‘④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 평가’ 7명(17.5%), ‘⑤ 해당 사항 없음’ 25명(62.5%)으로 나타났다.

〈표 4-32〉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설문 문항	응답 수	응답 비율 ²⁾	응답자 비율 ³⁾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9	16.1%	22.5%
②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10	17.9%	25.0%
③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5	8.9%	12.5%
④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 평가	7	12.5%	17.5%
⑤ 해당 사항 없음	25	44.6%	62.5%
합계	56	100.0%	140.0%

주: 1) 중복 응답함.
 2) (응답 수/중복 응답을 허용한 전체 응답 수) × 100
 3) (응답 수/전체 응답자) × 100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의 경우 무응답 6명을 제외하고 총 38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① 정부업무평가’ 15명(39.5%), ‘② 그 외 타 부처 소관 법정 평가’ 7명(18.4%), ‘③ 해당 사항 없음’ 21명(55.3%)으로 나타났다.

〈표 4-33〉 ‘최근 2년간 응답자가 수행한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다중 응답)’ 응답 결과

설문문항	응답 수	응답 비율 ²⁾	응답자 비율 ³⁾
① 정부업무평가	15	34.9%	39.5%
② 그 외 타 부처 소관 법정 평가	7	16.3%	18.4%
③ 해당 사항 없음	21	48.8%	55.3%
합계	43	100.0%	113.2%

주: 1) 중복 응답함.
 2) (응답 수/중복 응답을 허용한 전체 응답 수) × 100
 3) (응답 수/전체 응답자) × 100

2) 정부성과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

정부성과평제도의 업무 부담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수행 체계,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을 조사하였다. 다만 앞서 조사한 재정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의 경우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재정사업 평가만을 분석하였다.

가)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평가 준비로 인해 현재 업무에 부담이 발생한다’,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인데 평가에 포함되고 있다’, ‘부서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34> 및 [그림 4-28] 과 같다.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이다’ 5명(12.2%), ‘그렇다’ 21명(51.2%), ‘매우 그렇다’ 15명(36.6%)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없는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6명(87.8%)으로 나타났다.

‘평가 준비로 인해 현재 업무에 부담이 발생한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1명(2.4%), ‘보통이다’ 6명(14.6%), ‘그렇다’ 20명(48.8%), ‘매우 그렇다’ 14명(34.1%)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명(2.4%)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4명(82.9%)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인데 평가에 포함되고 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9%), ‘그렇지 않다’ 5명(12.2%), ‘보통이다’ 13명(31.7%), ‘그렇다’ 11명(26.8%), ‘매우 그렇다’ 10명(24.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7.1%)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1명(51.2%)으로 나타났다.

‘부서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0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1명(2.4%), ‘보통이다’ 17명(41.5%), ‘그렇다’ 16명(39.0%), ‘매우 그렇다’ 7명

(17.1%)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명(2.4%)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3명(56.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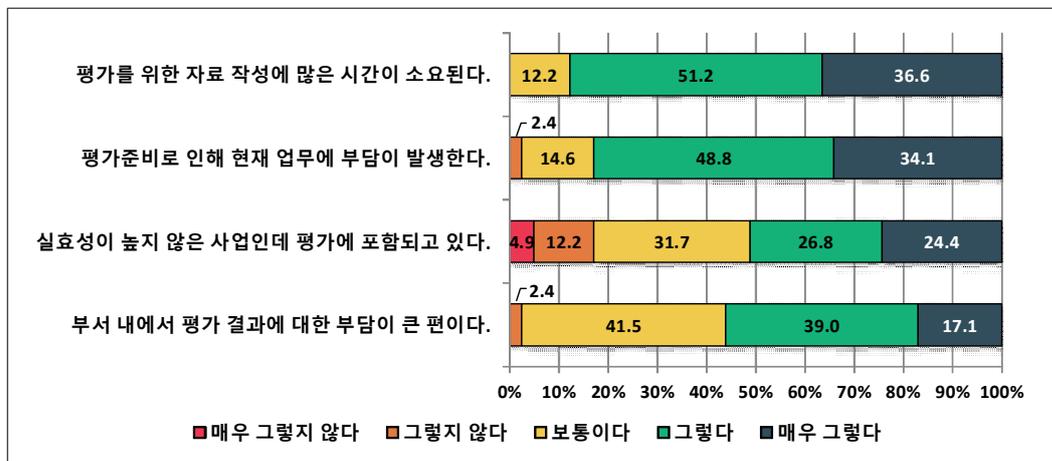
〈표 4-34〉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0 (0.0%)	0 (0.0%)	5 (12.2%)	21 (51.2%)	15 (36.6%)	41 (100.0%)
평가 준비로 인해 현재 업무에 부담이 발생한다.	0 (0.0%)	1 (2.4%)	6 (14.6%)	20 (48.8%)	14 (34.1%)	41 (100.0%)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인데 평가에 포함되고 있다.	2 (4.9%)	5 (12.2%)	13 (31.7%)	11 (26.8%)	10 (24.4%)	41 (100.0%)
부서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0 (0.0%)	1 (2.4%)	17 (41.5%)	16 (39.0%)	7 (17.1%)	41 (100.0%)

[그림 4-28]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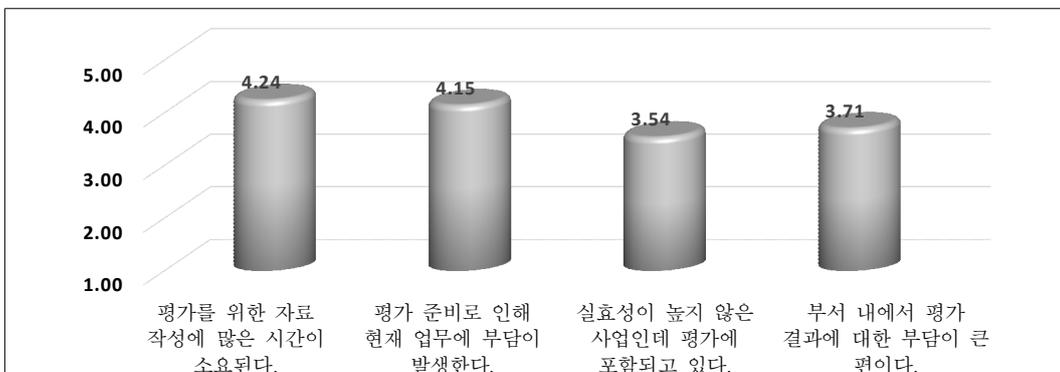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문항이 4.2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준비로 인해 현재 업무에 부담이 발생한다’ 문항이 4.15점, ‘부서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문항이 3.71점,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인데 평가에

포함되고 있다’ 문항이 3.5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35, 그림 4-29 참조).

〈표 4-35〉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41	4.24	0.66
평가 준비로 인해 현재 업무에 부담이 발생한다.	41	4.15	0.76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인데 평가에 포함되고 있다.	41	3.54	1.14
부서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41	3.71	0.78

[그림 4-29]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나) 평가 준비 단계 관련

평가 준비 단계와 관련해서는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평가 실시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평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36〉 및 [그림 4-30]와 같다.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3명(7.3%), ‘그렇지 않다’ 5명(12.1%), ‘보통이다’ 20명(48.8%), ‘그렇다’ 9명(22.0%), ‘매우 그렇다’ 4명

(9.8%)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명(19.5%)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3명(31.7%)으로 나타났다.

‘평가 실시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4%), ‘그렇지 않다’ 1명(2.4%), ‘보통이다’ 19명(46.3%), ‘그렇다’ 18명(43.9%), ‘매우 그렇다’ 2명(4.9%)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명(4.9%)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0명(48.8%)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4%), ‘그렇지 않다’ 7명(17.1%), ‘보통이다’ 20명(48.8%), ‘그렇다’ 12명(29.3%),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8명(19.5%)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3명(31.7%)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4%), ‘그렇지 않다’ 20명(48.8%), ‘보통이다’ 17명(41.5%), ‘그렇다’ 2명(4.9%),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21명(51.2%)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명(7.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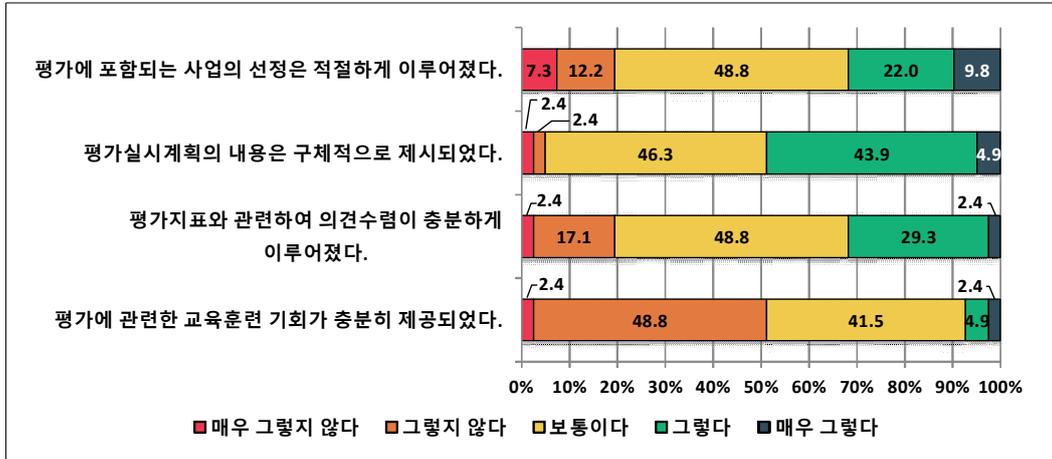
〈표 4-36〉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3 (7.3%)	5 (12.2%)	20 (48.8%)	9 (22.0%)	4 (9.8%)	41 (100.0%)
평가 실시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1 (2.4%)	1 (2.4%)	19 (46.3%)	18 (43.9%)	2 (4.9%)	41 (100.0%)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1 (2.4%)	7 (17.1%)	20 (48.8%)	12 (29.3%)	1 (2.4%)	41 (100.0%)
평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1 (2.4%)	20 (48.8%)	17 (41.5%)	2 (4.9%)	1 (2.4%)	41 (100.0%)

[그림 4-30]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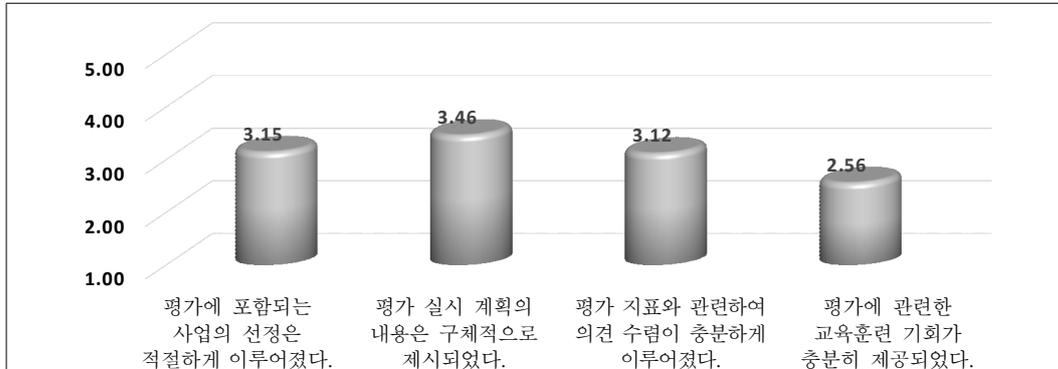


‘평가 준비 단계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실시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문항이 3.4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문항이 3.15점,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문항이 3.12점, ‘평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문항이 2.56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37, 그림 4-31 참조).

<표 4-37>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41	3.15	1.01
평가 실시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41	3.46	0.74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41	3.12	0.81
평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41	2.56	0.74

[그림 4-31] '평가 준비 단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다) 평가 수행 체계 관련

평가 수행 체계와 관련해서는 '평가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계량화된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활용되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38> 및 [그림 4-32]와 같다.

'평가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9%), '그렇지 않다' 4명(9.8%), '보통이다' 22명(53.7%), '그렇다' 10명(24.4%), '매우 그렇다' 3명(7.3%)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6명(14.6%)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3명(31.7%)으로 나타났다.

'계량화된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총 40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5%), '그렇지 않다' 6명(15.0%), '보통이다' 21명(52.5%), '그렇다' 11명(27.5%), '매우 그렇다' 1명(2.5%)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7명(17.5%)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2명(30.0%)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활용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4%), ‘그렇지 않다’ 11명(26.8%), ‘보통이다’ 18명(43.9%), ‘그렇다’ 10명(24.4%),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2명(29.3%)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1명(26.8%)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5명(12.2%), ‘보통이다’ 20명(48.8%), ‘그렇다’ 14명(34.1%), ‘매우 그렇다’ 2명(4.9%)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5명(12.2%)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6명(39.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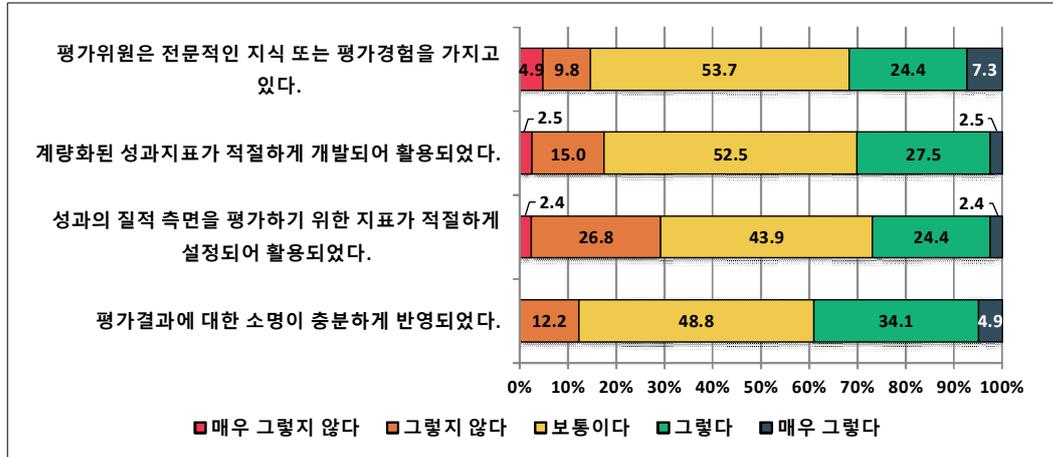
〈표 4-38〉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4.9%)	4 (9.8%)	22 (53.7%)	10 (24.4%)	3 (7.3%)	41 (100.0%)
계량화된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1 (2.5%)	6 (15.0%)	21 (52.5%)	11 (27.5%)	1 (2.5%)	40 (100.0%)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활용되었다.	1 (2.4%)	11 (26.8%)	18 (43.9%)	10 (24.4%)	1 (2.4%)	41 (100.0%)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0 (0.0%)	5 (12.2%)	20 (48.8%)	14 (34.1%)	2 (4.9%)	41 (100.0%)

[그림 4-32] '평가수행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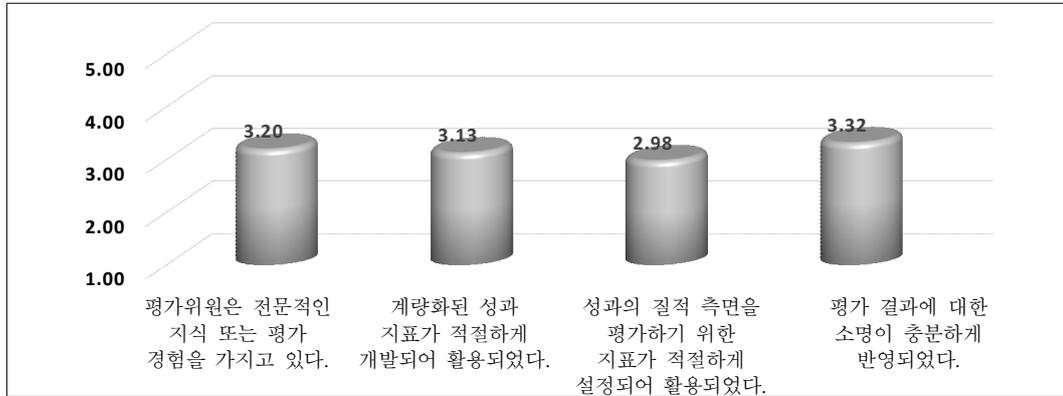


‘평가 준비 단계’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문항이 3.32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항이 3.20점, ‘계량화된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문항이 3.13점,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활용되었다’ 문항이 2.98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39, 그림 4-33 참조).

<표 4-39>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41	3.20	0.90
계량화된 성과 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40	3.13	0.79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활용되었다.	41	2.98	0.85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41	3.32	0.76

[그림 4-33] ‘평가 수행 체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라) 평가의 타당성 관련

평가의 타당성 관련은 ‘평가 지표는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평가 방법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평가 결과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타 평가제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4-40> 및 [그림 4-34]와 같다.

‘평가지표는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9%), ‘그렇지 않다’ 8명(19.5%), ‘보통이다’ 22명(53.7%), ‘그렇다’ 8명(19.5%),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0명(24.4%)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9명(22.0%)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법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9%), ‘그렇지 않다’ 7명(17.1%), ‘보통이다’ 22명(53.7%), ‘그렇다’ 9명(22.0%),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9명(22.0%)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0명(24.4%)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명(2.4%), ‘그렇지 않다’ 10명(24.4%), ‘보통이다’ 23명(56.1%), ‘그렇다’ 6명(14.6%),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11명(26.8%)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명(17.1%)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가 타 평가제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문항의 경우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6명(14.6%), ‘보통이다’ 22명(53.7%), ‘그렇다’ 12명(29.3%), ‘매우 그렇다’ 1명(2.4%)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6명(14.6%)인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3명(31.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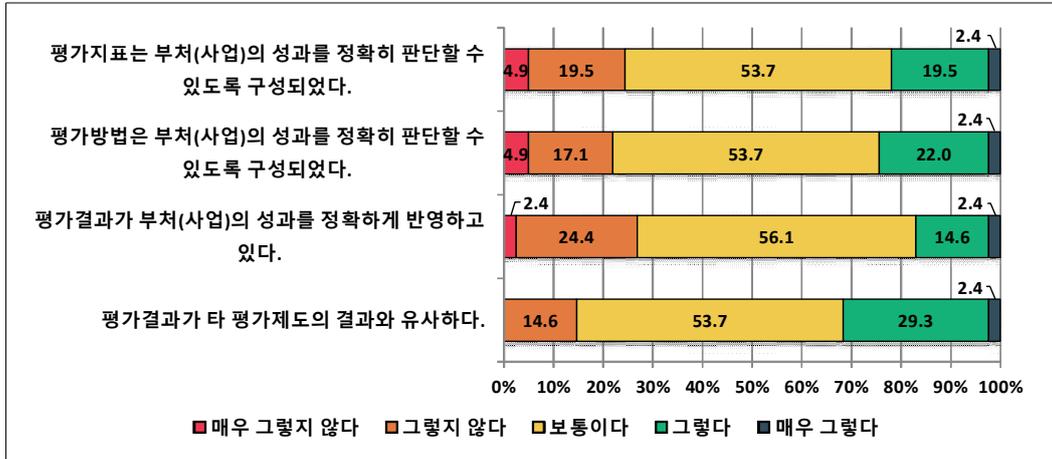
〈표 4-40〉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가 지표는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4.9%)	8 (19.5%)	22 (53.7%)	8 (19.5%)	1 (2.4%)	41 (100.0%)
평가 방법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4.9%)	7 (17.1%)	22 (53.7%)	9 (22.0%)	1 (2.4%)	41 (100.0%)
평가 결과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 (2.4%)	10 (24.4%)	23 (56.1%)	6 (14.6%)	1 (2.4%)	41 (100.0%)
평가 결과가 타 평가제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0 (0.0%)	6 (14.6%)	22 (53.7%)	12 (29.3%)	1 (2.4%)	41 (100.0%)

[그림 4-34]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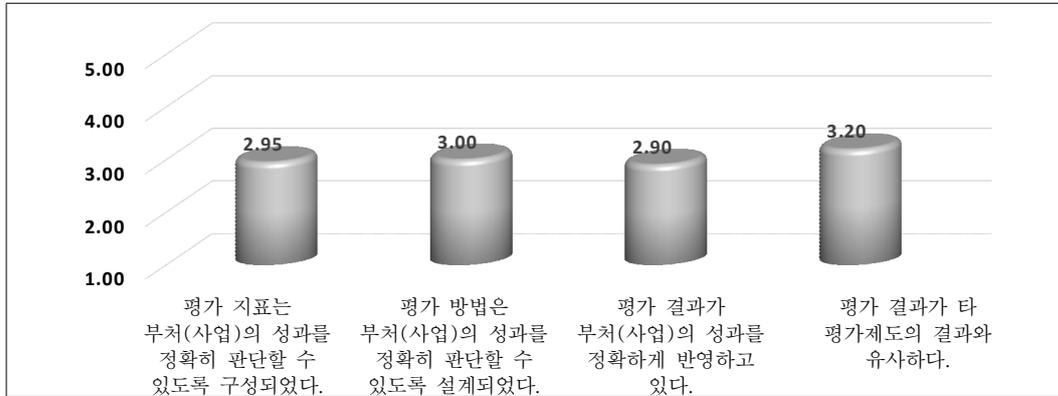


‘평가의 타당성’ 관련 4개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가 결과가 타 평가 제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문항이 3.2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방법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항이 3.00점, ‘평가지표는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이 2.95점, ‘평가 결과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문항이 2.9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표 4-41, 그림 4-35 참조).

<표 4-41>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항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가 지표는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1	2.95	0.84
평가 방법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1	3.00	0.84
평가 결과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41	2.90	0.77
평가 결과가 타 평가제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41	3.20	0.71

[그림 4-35] ‘평가의 타당성’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양적 조사는 제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표준화된 의견 수렴 절차이다. 이에 비해 질적 조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혼합한 연구 방법론을 쓰는 다수의 연구들이 양적 조사를 일반 국민 혹은 이해관계자 표본에 대한 조사로 실시하고 질적 조사를 전문가 혹은 대표자에 대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실시하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모두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업무 담당자 85명의 동일한 표본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질적 조사는 전적으로 양적 조사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며 유사한 조사 문항에 대해 원인과 상황, 고려해야 할 문제 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조사는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담당자(주무관 대상, 중복 제외 시 85명)를 대상으로 2018. 6. 27.~ 7. 11. 약 15일간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5차례 실시하였다. 분야별로 연구진이 심층 조사를 담당하되 자료 수집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위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였고 조사 대상 역시 2~4개 사업을 단체로 조사하

였다. 심층 면접 조사의 대상은 총평가 점수와 평가 지표별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했고 보건 분야 10개 사업, 복지 분야 11개 사업, 정보화 분야 1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했다.

2. 조사 설계

조사 항목은 양적 조사의 문항을 바탕으로 ‘평가 인식’, ‘타 제도 비교’, ‘사업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별 분석 결과’를 통한 컨설팅을 포함하였다.

〈표 4-42〉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항목

항목	문항 수	문항
평가 인식	3	평가 준비(평가 자료 작성)
		평가 참여(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
		평가 결과(활용 및 이견)
타 제도 비교	3	재정사업 평가 외 성과평가 경험
		타 평가의 자료 준비
		타 평가의 평가 결과
분석 결과	3	부서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예상
		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
사업의 성과관리	4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사업 관리 노력
		목표 달성 노력
		사업 우수 추진 노력
응답자 일반 사항	1	성, 부서 재직 기간, 근무 기간, 전년도 평가 참여

3. 조사 결과

가. 평가 준비

평가 준비와 관련하여 심층 면접 조사자들은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고 평가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서 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이므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수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타 성과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부서 내 BSC 등과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평가 업무가 매년 1~3월에 집중되다 보니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2018년에 실제로 평가 자료를 작성했던 경험으로는 1) 보조사업 연장 평가, 2) 각종 성과평가(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등), 3) 정부업무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되거나 인구 대상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은 사실상 특별법에 근거한 거의 모든 성과평가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최대 6개의 평가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가 사업별 평가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평가 자료(전임자 작성본)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전 검토에서 다수의 과업들이 성과 지표의 목표치와 잠정치, 가중치 등에서의 오기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전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향후 평가 자료의 작성 및 일정 준수 등에 대한 기준과 연관된다. 심층 면접 조사자들은 몇몇 사업에 대해 당초 제출한 평가 자료에 근거한 1차 평가와 이의 및 소명 자료 제출 후 이뤄진 2차 평가 사이의 점수 격차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1차 서면 평가 후 이의 신청 및 소명, 대면 평가 등을 통해 끈질기게 요구하면 평가 점수를 상향시켜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이의신청이나 소명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사업 평가 자료의 제출 일정이 준수되지 않거나 평가 자료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완성 자료를 제출한 후 이의 및 소명 자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 역시 부처 내 평가이므로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일부 미흡 사업들에 대해 조사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적어도 평가 일정을 준수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들은 평가 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수의 사업 담당자는 평가 지침이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기준을 작성하고 있어 평가 자료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문제는 심층 면접 조사 진행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평가 지침을 보고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응답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대부분은 전년도 평가 자료에 최근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기 차원에서라도 전년도 평가 지침과 당해 연도 평가 지침의 비교, 평가 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평가 지침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반대 입장에서는 평가 지침 교육에는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고 평가 지침 교육으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비해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자료를 처음으로 작성해 보았으며,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인식하는 담당자로, 문서화된 평가 지침보다 설명회를 1~2차례 개최하여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 지침을 마련할 때 전년도 모범 사례를 예로 제시하면 작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나. 평가 지표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먼저, 재정사업 평가 자료의 작성과 평가 참여,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인식하게 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에 대한 의견과 둘째,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표와 당해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 비교, 셋째,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 타 평가의 지표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 비교이다.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은 평가 중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평가 지표 중 예산 집행과 목표 달성은 이미 성과 보고서 및 결산·감사 등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표로서 중복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과 성과 달성도가 낮은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 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특히 특정 전달체계가 없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 사회적 인식과 괴리가 있는 보건사업 등은 예산의 집행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부서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해 연도 예산 집행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부진했을 경우 모든 재정 및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가 있다.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사업의 관리 지표를 추가하였는데, 이 지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에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사업 관리를 평가자에게 제시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미 지침 등을 통해 사업의 대상 및 전달체계, 추진 목표 등이 공개되었는데 별도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 이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성과관리 지표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게 평가된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중요한 이해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수가 사업 관리를 예산의 집행 실적 관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예산 집행 실적 관리의 연도·분기·월 등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 평가 지표는 행정 부서에 요구하는 사업의 모니터링에 해당한다. 물론 모니터링 안에 예산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산의 집행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관리 기제가 포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선진국은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모니터링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오윤섭 외, 2016).

OECD는 모니터링의 정의를 “관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정책 등의) 진행 정도, 목표 달성 정도 및 자원 사용의 진행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화된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지속적인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오윤섭 외, 2016). 이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 및 자료 수집, 변화를 기록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자료 및 대상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원인을 파악하는 일련의 분석 활동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는 부정 수급을 적발하거나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시·도별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과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경우 디브레인 등을 통해 실집행액의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 즉 평가 자료가 실집행액인지, 배정액인지 사업 부서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평가위원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뿐

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정산 시기는 3월이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수정이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시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지표의 경우 평가 시점을 늦추거나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관측이라는 점에서 현재 사업별로 다양한 연도별·분기별·월별 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 주기는 사업 부서와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형태(현금/현물)와 수급 대상(노인/아동/장애인 등), 수급 범위(저소득층/인구학적 특성/일반), 재정 지원 방식(직접 수행/지자체 보조/민간 보조/용자 등), 재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등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결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은 주기적 점검 일정을 통해 지표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평가 지표 중 사업의 우수성(2-2)에 대한 자료 작성의 어려움 및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수의 담당자들은 사업 우수성 지표의 점수를 받기 위해 연구용역과제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일부 사업의 경우 수탁과제로 실시한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모든 수탁과제 보고서가 그런 것은 아니다. 공통적으로 1)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자료 혹은 방대한 행정 자료가 필요하고, 2)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의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며, 3) 이러한 성과가 전문가 그룹 혹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보건 분야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발견되는 성과들을 개인적인 논문 발간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복지 분야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므로 결과 변수를 고용의 질, 소득 수준, 빈곤율 등으로 측정하는 경우 단위사업으로는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 상태 변화, 의료이용 행태,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행정 자료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득할 수 있는 반면,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등을 포함하는 행정 자료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차이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테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문제를 가

지고 여러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행정 및 패널 조사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사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실적을 제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 우수성(2-2) 지표에서 보건 분야가 복지 분야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보건 분야에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일부 점수만 적용되었거나 공식적인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의무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서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와 비교할 때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경우 성과 보고서와 재정사업 평가 양식을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만, 평가 지표와 평가 자료 작성 양식 등이 전년도와 올해 변경되었고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들은 타 사업의 평가 지표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가 거의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과 목표 달성의 경우 거의 모든 평가에서 반복되는 지표이므로 한 번의 생산으로 각종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칙적으로 평가는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하므로 평가 자료에 작성하지 않는 지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성과평가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도 예산 집행 및 성과 달성 정도가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식적인 통계’ 형태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평가 수행

평가 수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평가 지침이 사전에 제공되고 공지된 일정에 맞추어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조사자들은 평가위원들

의 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들이 이를 고려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단위사업의 경우 성과 지표의 대표성이나 포괄성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획재정부의 성과 계획서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검토가 성과관리목표제도라는 재정사업을 포괄하는 상위 평가제도에 포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취합되었다.

그러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표 달성이 반드시 성과 계획서상에 제시된 성과 지표 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성과 계획서에 제시된 성과 지표를 평가한다면 사실상 목표 달성도밖에 측정할 수 없는데, 부처 및 부서의 사업 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일부 지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표에 대해 본평가에서 혹은 다른 평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평가와 관련한 법령 관계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성과 계획서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평가 지표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표가 여전히 투입 중이므로 이들 지표의 목표 달성은 예산 편성 및 이벤트 발생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처, 부서가 사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으며 외부 환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자율평가에서는 평가위원의 분야와 전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임의 배정했으므로 사업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됐으나, 전반적으로 심층 면접 조사 담당자들은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서에 사업지원단과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단과 산하 시설 등에서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하므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는 경향이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특성이 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들은 전년도에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사전 검

토-이의 및 소명 자료 제출-대면 평가의 프로세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면 평가에 할당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라. 평가 결과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심층 면접 조사에서 논의된 주제는 두 가지이다. 먼저 조사자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개인 혹은 조직에 영향을 준다면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 및 목표 달성 등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에 실질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평가위원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1차 평가 결과서와 이의 신청 및 소명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서, 대면 평가서까지 총 3종의 평가 결과서를 작성한다. 평가 결과서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위원이 작성한 3종의 평가서는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평정 근거를 남기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사업의 담당자들은 컨설팅에 가까운 내용이 문서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 5 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제1절 단기 개선 방안

제2절 장기 개선 방안

5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



제1절 단기 개선 방안

1. 평가 대상 선정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 평가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이다. 다만, 평가 중복 최소화를 위해 R&D, 재난안전, 지역발전사업 및 복권기금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또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소액 사업(10억 원 미만)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은 1)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전체 171개 단위사업 중 타 분야 평가 대상 사업(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복권기금)과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28개)을 제외한 143개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사업 중 종료 사업과 소액 사업, 책임운영기관, 기타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43개)을 제외한 100개 사업이 실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포함 여부와 둘째, 일반재정사업과 정보화사업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의무지출사업은 재정사업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의 평가 대상 제외 기준에서 '평가 실익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만, 재정 집행 관리 대상 사업에서는 법정의무지출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산 집행을 관리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지원 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급여의 수급 관리에 대한 사업 관리는 필요하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

된다는 점에서 평가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재정과 정보화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정보화사업으로 포함된 8개 사업 중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등의 세부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정보화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단위사업 예산 중 18.2%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데,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에서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유사하게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사업 역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이 정보화사업이며 단위사업 기준 예산의 39.1%에 불과하여 정보화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정보화사업의 평가는 대면 평가(1회)를 통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나 심뇌혈관질환체계 연구의 경우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실무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표 5-1〉 정보화사업 평가 대상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	재원	세부 사업	2017 예산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일반회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90,225
		일반회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34,755
		일반회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2,716
		일반회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29,718
		일반회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980
보건복지행정 정보화	1	일반회계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31
보건복지정보 보호	1	일반회계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8,448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1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1,778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2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74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2,026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	1	일반회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1,070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3	일반회계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2,158
		일반회계	국가 건강 질병 예방을 위한 지식 축적 시스템(3단계) 구축 사업(정보화)	1,710
		일반회계	심뇌혈관질환체계 연구	500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2	일반회계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환경 지원(정보화)	2,36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부 사업이 일반재정과 정보화가 혼합된 경우, 1안) 세부 사업 예산 기준(70% 이상)으로 선정, 2안) 부서가 사전 선택(단, 평가 지표 미확인 상태)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재정과 정보화 분과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 위원회에서 정보화 담당 평가위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2. 평가 지표의 개선 방안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은 평가 지표의 확정 시기, 평가 지표의 조정, 평가 지침의 구체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 지표의 확정과 관련해,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당해 연도 평가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부처가 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평가 지표를 만들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평가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평가 지침과 체계를 바탕으로 2017 회계연도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평가 시기와 사업 시기의 간극으로 인해 평가 위원들은 제한적인 정보(평가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평가하게 되고, 사업 관리의 측면에서도 사후적인 평가만 할 뿐 사업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응은 어렵다. 피평가자 입장에서 전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에 대해 차년도에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 지침에 대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별도의 업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지표는 사업 수행 시기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단순히 예산 편성의 활용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수행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사업 담당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지표를 염두에 두면서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부처의 자율성이 제고된다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성과 지표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 지표의 조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시 1안) 평가 지표 단순화, 2안) 2단계 평가(1단계 단순화-2단계 심화), 3안) 현행 지표 유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안은 평가 지표를 단순화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되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평가 지표의 수가 많고 사업 추진 및 사업 성과와 같은 정성 지표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일부 부처는 예산과 목표 달성의 2개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복지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역시 기존 5개 지표(성과 지표 4개+가점 1개)에서 2개 지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2개 지표는 예산과 목표 달성이고, 이 경우 성과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은 간소화될 수 있고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 작성도 불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간소화가 사업의 부실 관리로 연계될 경우 부처, 부서가 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2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개의 지표로 단순화(1-1 예산, 2-1 목표 달성)하고 2년 동안 '미흡' 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형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만 통보하고, 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개선 방안을 연계하고 부처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현행 평가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산 집행 실적(1-1)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산 집행 실적은 사업 부서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내용 중 하나이며 사업별로 점수의 편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평가 기준으로서의 판별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또는 피치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예산 미집행에 대해 감점 및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셋째, 평가 기준의 구체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세부 배점 기준('사업 관리의 적절성'과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부문)과 관련해 '예', '상당한 정도'와 '어느 정도' 등 이를 각각 명확하게 준별할 수 있는 세부 착안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1-2)는 평가 기준 제시 과정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평가 결과 점수 부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계획, 관리, 환류 등 평가 기준에 제시된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엄밀하고 정교하게 작성한 후, 이에 기반을 둔 엄격한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예외 사항들을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예산 규모나 관련 법 규정 및 추진체계 등이 잘 마련되어 있어 해당 지표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거나 신규 사업일 경우 또는 행사 위주의 사업은 해당 지표에서 불이익을 경험할 우려가 있다.

계획한 목표 달성 여부(2-1)에서는 먼저 성과 지표의 액면 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업 부서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성과 지표는 해당 사업의 핵심 콘텐츠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업 부서의 평가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다음으로 복수의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 단일 지표가 갖는 논리적 및 방법론적 위험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복수 성과 지표의 경우 가중치의 임의성 또한 평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이나 검토를 거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만족도 등)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 개요를 제시해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오차 수준 이내의 목표치 설정은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의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평가체계 개선 방안

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2) 평가 프로세스 운영으로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시 가) 평가위원 선정과 나)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대상 사업의 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그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어 보건 분야 전문가와 복지 분야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일반재정 92개, 정보화 8개)만 운영하고, 일반재정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각각 3명씩 6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이에 반해 정보화사업은 8개에 불과하나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2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또한 일반재정 역시 평가 대상 사업 수(보건 42개, 복지 50개)를 고려할 때 평가위원의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매우 특수한 분야(한의약, 국제 협력 등)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평가 업무의 집중도를

고려할 때 실무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당시 분야별로 전공을 고려하고 평가위원의 선호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배정하였다. 이로 인해 서면 평가 및 대면 평가 등에서 평가위원 간, 분야 간 평가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사업을 임의로 배정하고 1차 평가(서면), 이의 및 소명 자료에 대한 심사, 2차 평가(대면)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당초에는 임의 배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위원 1인이 총 세 번의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평가위원이 대부분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가 시기가 신학기라는 점 때문에 일정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평가는 모든 평가위원이 세 차례의 평가에 임의 배정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평가위원 간 점수의 격차가 크지 않고 분야별 점수의 격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모두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자질 논란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실무평가위원회의 병행 구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즉 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하고 분과위원회는 임의 배정하되 2인 1조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1안). 이렇게 운영하면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도 줄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도 용이하다. 또한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헬프 데스크(help des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위원회와의 병행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잘못된 매칭으로 인해 업무의 위임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를 극복하면서 평가위원의 객관적 배정을 통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평가위원 적정 확보를 통한 평가위원의 랜덤 배정을 제안한다. 이는 동일한 평가위원이 1차, 2차, 3차에 동일하게 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의 및 소명 자료 등에 대한 검토는 사업 부서와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시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평가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면 평가의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다. 사전 검토와 이의 및 소명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대면 평가는 사업당 5분 이내 설명(평가위원)-소명(부서)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나 소명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대면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요구를 통해 평가 결과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적인 대면 평가를 지양하고, 배정된 평가위원이 개별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충분히 협의하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여전히 소명 및 이의신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재평가는 지양하며, 평가 결과서는 엄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결과 활용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부서 단위에서 평가 지표 별로 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부처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 지표 중 예산과 목표 달성 등의 정량 지표는 성과 계획서-성과 보고서 등과 연계되므로 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년도 정량 지표 평가 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분기별 혹은 월별로 예산과 성과 지표 달성률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 관리 및 사업의 우수성과 관련한 정성 지표의 경우 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업 관리 모니터링 방식이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핵심사업 평가로, 핵심사업 평가는 현장 방문 및 사업의 관리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의 주체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며, 핵심사업 평가와 중복될 경우 평가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평가 지침 및 설명회 제안

마지막으로 평가 지침과 평가 지침에 대한 설명 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의 평가 지침이 1월 중 배포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부서에 송부할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다수의 담당자들은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이 당해 연도 평가 지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평가 자료 작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재정사업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배치된 기간이 짧은 경우 전년도 양식에 덮어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지침상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5-2〉 전년도 평가 지표 비교

구분		2017년 통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점수	항목	점수
평가 지표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예산)	30	예산 집행 적절성	20
				사업 관리 적절성	20
	결과	목표 달성	50	목표 달성	40
		성과 우수성	20	성과 우수성	20
	가점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5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5

주: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사업 관리 적절성 지표가 추가되고 예산 항목과 목표 달성의 배점이 조정되었음.

또한 전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은 평가 자료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거나 당해 연도 평가 지침에서 다양한 예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5-3〉 우수 사례에 대한 예시

<p>-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p> <p>※ 실집행(간접 집행사업) 현황 내역: 세부 사업별 명시</p> <p>○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의무지출사업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집행됨을 감안할 때 실집행률 98.7%는 매우 높은 추진 실적으로 볼 수 있음</p> <p>- (생계급여) 생계급여(의무지출)는 매월 가구원 수 및 소득·재산 변동, 신규 수급자 유입 등으로 수급자 규모 및 급여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실집행률 100%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p> <p>- (해산장제급여)</p> <p>- (양곡할인) 양곡할인은 구입 희망자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곡 수요량 증가 및 지원율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내역 변경 및 변경 내시 등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함</p> <p>※ 예산 집행 특이 사항(문제 및 장애 요인): 불용액에 대한 소명</p> <p>○ (생계급여, 양곡할인) 양곡할인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생계급여 예산에서 112억 4700만 원을 내역 변경하여 양곡할인사업에 지원·집행(→ 예산의 효율적 집행 노력 인정)</p> <p>○ (복지급여 사후 관리) 사업 추진비 일부 예산이 재정 절감 재원으로 미배정되어, 불용(200만원), 지자체 부정 수급 근절 사례 발표 대회 개최 관련 소요 경비로 국내 여비를 수용비로 전용(△200만원) (→ 미배정 및 소요 경비 전용의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불인정)</p>

다음으로 평가 지침에 대한 설명 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평가 지침을 문서로 송부하고 평가 자료는 사업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어 작성 양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평가 지침을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전년도에 사업 부서에 있지 않은 경우 사업 관련 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해 지침 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 평가 지표 설명회 참석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차례 정도 실시하여 자율적인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장기 개선 방안

장기적인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 폐지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체평가로서 자율평가제도가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 차원에서 재정사업의 추진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체계(시스템)를 구축·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장기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사후적 평가 자료 제출과 이를 기초로 평가하는 평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은 평가 대상 연도 말에 평가 지침을 확정하여 익년도에 평가 자료를 제출받고 동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무엇보다도 사업 소관 부서가 사업이 시작한 회계연도 말 또는 그 후에 새로이 평가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다음 회계연도 사업 시행 중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정확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실제 사업 운영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활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업 진행 당해 연도에 미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사업 집행 자료(분기별 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분기별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자료 검토 결과를 다시 소관 부서에 보냄으로써 이후 사업 관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시작된 회계연도 말이 되면 분기별로 작성된 평가 자료와 이에 근거하여 제시된 평가위원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 운영에 반영되었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당해 회계연도에 취합한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도록 한다. 이로써 익년도에 평가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 및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환류 작업이 이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는 회계연도 중 그리고 말에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다. 동시에 평가 결과의 환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추후 사업 운영에 성과관리 의견을 반영한다. 이 방식은 이미 주요 정책 평가에서 일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업무종합평가에서 의도하고 있는 평가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단, 이와 같은 이상적인 자율평가 방식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는 사업 정보 노출에 대한 사업 부서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외부 평가위원 없이 부처 차

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회계연도에 분기별로 평가 지침에 부합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 점검회의나 자문회의를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분기별 자료 수집과 점검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나갈 수 있으며, 부서에서 사업 운영과 관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게 되면, 이후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우선적으로 분기별 집행 과정 관리와 연도별 총합 평가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틀(framework)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 재정 사업 수행 과정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체계는 사업 소관 부서(과)-국·실 단위-부처 단위로 구축할 수 있다.

개별 재정사업별로 소관 부서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들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 교육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모니터링은 자율평가 평가 지침상의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사업 부서 주관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각 부서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는 각 국과 실에서 총괄하여 국·실 단위의 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집계하며, 성과관리 부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발한다. 이는 부처 내 최종 총괄 부서(예: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는 정기적(월별, 분기별, 연말)으로 취합된 부서별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부처 차원에서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사업들을 식별하고 관리한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관리 부진 사업에 대한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개선 전략도 개발하여 나간다.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개선 전략은 사업 예산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내 사업의 구조조정, 사업별·프로그램별 성과 개선 전략 개발 등으로 나누어 시도할 수 있다. 부서, 국·실 단위, 부처 단위의 모니터링에는 평가위원 등 외부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도 있다.

셋째,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자율평가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반회계, 정보화, 연구·개발, 안전 등 분과별로 소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 소관 부서의 사업 집행을 병행하면서 분기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평가 지표별로 점검하고, 그 성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 전문성, 신뢰성, 책임감을 갖춘 평가 전문가 풀(pool)을 구

축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을 통제자적 입장의 외부 평가자가 아니라 정책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이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관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성과 차원의 평가에서 이와 관련된 재정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준별하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측정 방법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에서 사업 성과는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차원에서의 개선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부서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즉,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사업 진행의 부진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예산 절감(경제성)의 측면도 기능한다. 우수성 평가에서는 후자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양적, 질적 자료 제시 방식으로 예산 절감 정도, 예산 절감 방식, 향후 예상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는 것(스토리텔링 방식)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이 밖에도 성과 지표의 100% 달성 등 효율성 및 효과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경우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강영철·박경돈·이재원·임준형. (2009). 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복지와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공동성 외. (2013). 성과관리 한국제도편. 대영문화사.
- 기획재정부. (2017).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기획재정부. (2018.1.2.).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7 회계연도 평가).
- 양현모·최순영·심재섭·노성민·임인선·김명진. (2015).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행정연구원.
- 오영민·이광희·오운섭·이삼열. (2017).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오운섭·강지원·이규환. (2017). 통합재정사업평가 업무개선 및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운섭·강지원·이세미. (2016).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학·윤영진·이영범·이재원. (2010). 성과관리와 정부간 재정-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f.re.kr.

부록 1.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 정책 연구기관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수행한 2017 회계년도 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와 평가방식, 추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성과평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은 차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표 및 프로세스 등의 가치적인 성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발전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근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8. 6.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센터 오윤섭 연구위원
조사 문의: 이규환 연구원(044-287-8172)
조사표 회신: ssec@khasa.re.kr(사회보장평가센터 대표메일)

II	평가 실행
----	-------

1) 평가지표(별첨1)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가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수는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항목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배점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항목과 지표가 있다.	있다 ①		없다 ②		
☞ 있다①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하십시오. 6-1) (주관식) 그렇게 생각하신 평가항목 및 지표는 어떤 것입니까?					
7)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	있다 ①		없다 ②		
☞ 있다①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하십시오. 7-1) (주관식) 그렇게 생각하신 평가 항목 및 지표는 어떤 것입니까?					

2) 평가과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평가지침 및 평가자료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자료의 취합 및 심의 일정 등의 안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평가위원은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를 통해 대상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결과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결과는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평가결과는 부서의 상급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가결과는 부처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결과는 부서 내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결과는 당해연도 사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평가결과는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III	자체평가 개선 방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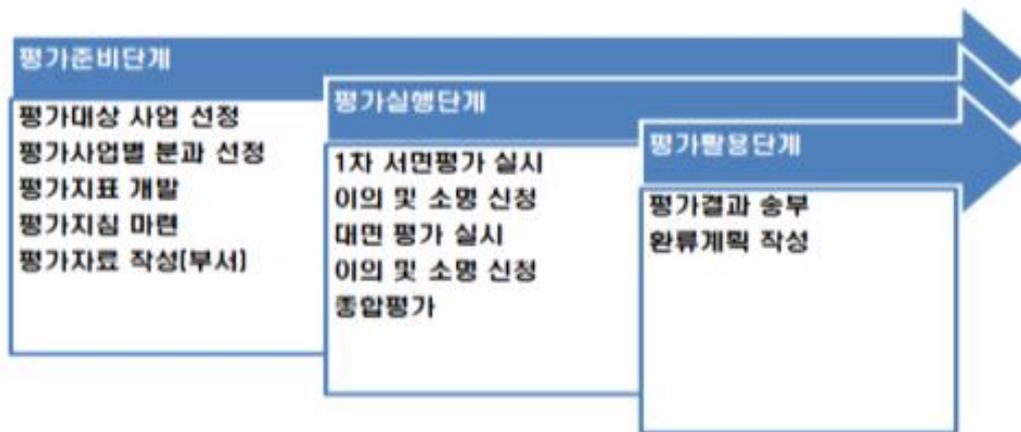
1) 재정사업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가지표	1) 평가지표는 일상적인 사업 점검 수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지표는 계량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지표의 수를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관식) 그 외 평가지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평가체계	5) 자체평가의 지표 및 평가 자료 작성 지침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체평가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주관식) 그 외 평가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평가결과환류	10) 평가결과가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평가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평가를 통해 중점 성과 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관식) 그 외 평가결과의 환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2)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⑥의 항목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기입하십시오.

순위	번호	내용	순위	번호	내용
	①	평가지침의 구체화		⑤	평가에 대한 상급자 인식 변화
	②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		⑥	평가에 대한 담당자 인식 변화
	③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인원		⑦	인센티브(인사고과 등 반영)
	④	평가 자료의 작성 시간		⑧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 증대

3) 2017 회계연도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단계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체크	평가준비단계	체크	평가실행단계	체크	평가활용단계
	① 평가 대상 사업 및 분과 선정		⑤ 1차 서면평가 실시		⑩ 평가결과 송부
	② 평가지표 개발		⑥ 1차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		⑪ 환류계획 작성
	③ 평가지침 마련		⑦ 대면평가 실시		
	④ 평가자료 작성		⑧ 대면 평가 결과 이의 및 소명신청		
			⑨ 종합평가		

4) 전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에 비해 17년 자체평가가 개선된 점은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가능)

체크	평가준비단계	체크	평가실행단계	체크	평가활용단계
	① 자료 작성 편리		④ 평가 방법 체계화		⑦ 평가 결과 신뢰성
	② 평가 업무 부담 완화		⑤ 평가절차 합리성		⑧ 부서의견 반영
	③ 평가지표 단순화		⑥ 평가위원 전문성		⑨ 평가결과의 활용

IV	정부성과평가제도의 비교
----	--------------

SQ1. 다음 문항은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평가 중복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귀하께서 수행한 평가를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1) 재정사업평가	2) 보건복지부 소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	3) 타 법에 근거한 성과평가
① 일반재정 분과 ② 정보화 분과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②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③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④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 평가 ⑤ 해당사항 없음 ※공공기관 평가는 포함하지 않음	①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포함) ② 그 외 타 부처 소관 법정 평가 ③ 해당사항 없음 ※공공기관 평가는 포함하지 않음

※ 아래 문항은 정부성과평가제도의 업무 부담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SQ1에서 체크한 평가를 우측 평가번호에 기입하신 후(최대 4개까지 작성), 2) 아래의 문항 공통보기(①~⑤)를 기준으로 각 평가별로 응답해주시시오.

<문항 공통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성과평가의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재정사업평가					평가번호 예) 2)-① 저출산					평가번호 예) 2)-② 사회보장					평가번호 예) 3)-① 정부업무평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평가준비로 인해 현재 업무에 부담이 발생한다.																				
3)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인데 평가에 포함되고 있다.																				
4) 부서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2. 평가 준비 단계에 대하여,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재정사업평가					평가번호 예) 2)-① 저출산					평가번호 예) 2)-② 사회보장					평가번호 예) 3)-① 정부업무평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 평가실시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3)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4) 평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3. 평가수행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재정사업평가					평가번호 예) 2)-① 저출산					평가번호 예) 2)-② 사회보장					평가번호 예) 3)-① 정부업무평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평가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평가경험을 가지고 있다.																				
2) 계량화된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3)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활용되었다.																				
4)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4. 평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재정사업평가					평가번호 예) 2)-① 저출산					평가번호 예) 2)-② 사회보장					평가번호 예) 3)-① 정부업무평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평가지표는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평가방법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평가결과가 부처(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4) 평가결과가 타 평가제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V	응답자 일반 사항
---	-----------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직급은 어떻습니까?

① 9급 이하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4급 ⑦ 3급 이상

4. 귀하가 해당부서에서 재직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5. 귀하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6. 귀하는 올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의 2017 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셨습니까?

	참여	일부 참여	참여안함
성과계획서 작성	①	②	③
성과보고서 작성	①	②	③

7. 귀하께서는 20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평가를 받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오.(단위사업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여러 사업의 평가를 받은 경우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작성)

	미흡	보통	우수
단위사업1	①	②	③
단위사업2	①	②	③
단위사업3	①	②	③
단위사업4	①	②	③

8. 귀하의 소속 부서는?

① 보건 분야 ② 복지 분야 ③ 인구 분야 ④ 그 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분야: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질병관리본부 - 복지 분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 인구 분야: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 그 외: 기획조정실 등 |
|--|

부록 2. 심층면접조사 문항

공통문항
<p>1. (평가인식) 17년도 평가는 ‘평가 자료 작성- 평가 실행(1차 서면, 2차 대면, 3차 종합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프로세스 ppt 제시).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평가를 실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 평가 결과의 활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지표/체계/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지표/체계/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p>2. (타 제도 비교) 귀하께서는 2017년에 재정사업 평가 외 성과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정사업 평가와 비교할 때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는 어떻습니까? 재정사업 평가와 비교할 때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부담은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사업 평가와 비교할 때 평가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까?</p>
<p>3. (분석 결과) 귀 부서의 16년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이고, 17년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입니다. 특히 17년 평가에서는 (1-1 예산 관리 적절성, 1-2 사업 추진의 적정성, 2-1 목표 달성도, 2-2 사업성과의 우수성) 평가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는 귀하께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실 때 예상했던 결과와 동일합니까? - 평가 결과가 예상했던 부분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p>4. (사업의 성과관리) 귀 사업은 차년도 재정사업 평가에 대비해 (예산 집행, 사업 관리, 성과달성도, 사업 우수성)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p>사업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모니터링, 개선 반영)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p> <p>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지표 측정, 달성율 제고)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p> <p>사업의 우수성 제고를 위해 (성과분석, 홍보, 타 분야 평가)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p>